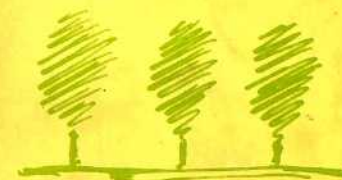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1

인권하루소식

합본 1호
(1호~100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인권정보자료실
R1.1.1

인권운동사랑방



1. 1975년 인도네시아 합병전 독립운동
티모르는 인도네시아 군도의 남동쪽 끝
에 있는 섬으로 호주 북쪽으로 약 500
km 거리에 있다. 티모르섬에 서양인이
처음 정착한 것은 1566년 포르투갈 도미
니크 수도회에 의해

서였다. 그후 2세기
동안 포르투갈과 네
덜란드는 티모르섬
의 통치권을 놓고

갈등해왔다. 1913년 양국은 티모르섬을
동서로 분할 통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차 세계대전 후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에 합병되었으나(1949년), 포르투갈은 일
본으로부터 동티모르 통치권을 다시 뺏
은 다음에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식민통치 시기 동안 티모르인들은 끈질
기게 저항했다. 1880년대에 시작해서
1912년까지 이어진 최대의 독립운동은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모잠비크에
서 지원군을 동원해서야 겨우 진압될 수
있었다. 이때 약 3천명의 티모르인이 살
해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티모
르섬을 점령했을 때, 티모르인들은 호주
군 장교들의 지휘 아래 반일투쟁을 전개
했는데 이 당시 약 4만명의 티모르인들
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포르투갈은 동
티모르에 대해서 다시 통치권을 행사하
기 시작하였으나, 그 억압적인 통치방식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1960년
대에 주로 다례신학교 등에서 가톨릭계
교육을 받은 후 형성된 엘리트층은 1974
년 포르투갈에서 파시즘이 끝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족주의적 정치세
력으로 등장하였다.

동티모르의 주요 정당은 모두 1974년 5
월에 탄생하였다. 이중 규모가 가장 작
은 티모르국민민주연합(APODETI)만이
인도네시아와의 통합을 지지하였다. 초
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티모르민주
연합당(UDT)은 포르투갈과의 연방제를
추진하였다.

티모르사회민주연합당
(ASDT) 후신인 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
(FRETILIN)은 다른 정당보다 급진적인
노선을 견지하였다. 이 전선의 강령은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의 종식, 독립의 자
결권, 즉각적 참정권 보장과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전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정당은 질서유지를 위해 점
진적인 독립화 과정을 계획하고 1975년
독립을 위한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은
'과도정부'를 준비하였으며, 정장으로
'완전한 독립, 외국으로의 합병 거부, 식
민잔재 청산'을 삼았다.

2. 1975년 인도네시아 합병후 독립운동
동티모르를 합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
던 인도네시아는 세 정당을 정략적으로
이간시켜 독립의 방법과 내용을 둘러싸

고 동맹을 맺은 지 4개월만에 UDT와
FRETILIN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였다.
내전은 FRETILIN의 승리로 끝났지만
식민지 종주국인 포르투갈은 애매한 입
장을 취하였다.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

(자료집 요약)

'합법적' 합병의 기회가 사라지자 인도
네시아는 포르투갈이 주저하는 틈을 이
용하여, 미국과 호주의 묵인과 지원하에
1975년 12월 7일 무력침공을 시도하였
다. 그러나 동티모르 민중의 강력한 저
항에 부딪힌 인도네시아 군대는 1978년
말까지 약 3년간의 전투를 치루었다. 이
과정에서 동티모르 전체 인구 60여만명
중에 1/3인 약 20만명이 살해되거나 굶
어죽었고, 인도네시아 군대도 약 3만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후 계엄령과 같은
공포정치가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 사형당하였다.

한편 유엔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불법적인
동티모르 합병을 비난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나 인도네
시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들은 당시 결의안에 따른 어
떤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에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티모르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취
해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강권 통치하에서도 동티
모르 민중은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통해
저항을 계속하였으며, 일부는 산에서 게
릴라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새로 등장한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
부는 과거의 태도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
였다. 유엔도 과거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동티모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투쟁해온 동티모르
민중의 피와 땀의 결실임과 동시에 국제
앰네스티 등 많은 양심적 시민 인권단체
의 공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1991년 11월 12
일, 동티모르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
던 군중에게 인도네시아 보안군이 무차
별 총격을 가하여 약 200명이 사망한 사
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
었던 영국 요크셔 방송국 카메라 기자에
의해 전세계에 생생하게 보도되었다.

3. 산타크루즈 묘지 대학살 개요

포르투갈 의회 대표단이 동티모르를 방
문하기로 한 1991년 11월 4일을 앞두고
동티모르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FRETILIN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대
적인 시위와 집회를 준비하였고 많은 사

람들은 정제된 동티모르 독립운동이 새
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
다. 그러나 1991년 10월 27일 방문 취소
라는 충격적 소식이 알려졌다. 다음날
독립운동 활동가들이 피신처로 자주 이

용하곤 했던 딜리시
의 산 안토니오 교
회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주일 미사가
있었다. 그 일요일

밤 평복차림에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 주위를 돌면서 돌을 던지
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교회안에 있
던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 항의하면서 두
집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후
새벽 2시경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무차별 발포를 하면서 교회 내부로 진입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바스치아노 고메
즈 란겔(18세)이 교회 밖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교회 내부로 진입한 보안군
은 안에 있던 약 40 명의 청년을 연행하
였다. 이들 중 18명이 구속되었지만 행
패를 부리던 집단 중에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 사망한 고메스 란겔은 장례식
후 산타크루즈 묘지에 다음날인 1991년
10월 29일 안장되었다.

1991년 11월 12일 고메스 란겔 사망 14
일제를 추도하는 미사가 봉헌되었다. 당
일 새벽 6시 모타엘 성당에서 미사가 끝
나자 사람들은 독립을 지지하는 헌수막
과 깃발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였다. 시
위대열은 보안군의 방해로 차단되자 방
향을 바꾸어 산타크루즈 묘지로 행진하
였다. 도중에 시위대 일부와 보안군 사
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안군 두명이 칼에 찔려 숨졌다. 시위
대는 행진을 계속하여 묘지에 도착, 미
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합류하
였다. 시위대는 고메스 란겔의 묘에 헌
화를 하였다. 숫자가 대폭 늘어나자 사
람들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보안군
추가 병력이 도착하였다. 이때가 아침 8
시경이었다. 보안군이 도착하자 사람들
은 긴장했고 일부는 묘지를 벗어나 거리
로 도피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보
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개
시하였다. 앞에 서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최소 100명에서
200여명 정도가 현장에서 살해되었다.
이 사건 이후 대대적 검거 선봉이 일어
수백명이 구속되었고, 이후 일부는 고문
살해당하였다.

산타크루즈 묘지 대학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야만적 인권
탄압에 경악하였고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압력이 갈수록 높아갔다. 궁지에 몰린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지 못해 철거한 진
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미
봉책으로 끝났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압력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인권하루소식

93년 12월

(제58호 - 제77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자결권 무시한 침략 결과”

알카티리씨 인권운동 사랑방 세미나 가져 30일 오전 민주당 강수림 의원등 만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연합 인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에 온 동티모르 독립운동지도자 마리 알카티리씨(45세)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에게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한 정치·물질적 지원 *한국정부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는데 압력을 행사해 줄 것 *동티모르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 줄 것 등을 호소하였다.

11월 30일 인권단체 회원 등 15명이 참가한 「인권운동 사랑방」 특별세미나에서 마리 알카티리씨는 “이미 유엔 총회와 안보리의 결의로 인도네시아의 불법 침략은 확인되었다”며 인도네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는 또 “동티모르인들만의 투쟁으로 독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당사국들의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티모르에 관심을 가진 아시아 각국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하여 ‘동티모르의 자결권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회의’를 내년 4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한국 민간단체가 관심을 보이길 희망했다.

알카티리씨는 30일 오전에 민주당 강수림 인권위원장을 비롯, 조순승 의무위원, 임제정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장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한겨레신문사 등도 방문하였다. 알카티리씨는 1일 오전에 출국한다.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전화 521-5364)는 11월 29일 국회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시켰다. 51,739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공대위는 지난 5월 ‘장애인에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작성, 법안의 중요 내용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수형생활 제자들의 군문제 해결 촉구 교수단 기자회견

11월 30일 오전 10시 홍사단에서는 “시국관련 수형생활 제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구하는 서명 교수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1,317명 서명교수를 대표하여 이상준교수(외대 사범대 학장)는 “과거청산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해결되어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여야가 「병역법 시행령 개정 및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을 상임위에 정식 상정하기로 결정하여, “국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무총리가 말한 바 양군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전망이다 나오고 있다.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찬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박영생 병장(22사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전방 GOP에서 금강산 경치에 관해서서 부러운 말을 몇마디 한 것

을 가지고 반국가단체 찬양이라면 이야말로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적용이다”고 주장했다.

박병장은 기무사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7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양심선언과 관련하여 군무이탈죄로 구속·기소된 고대성 일병과 이재원 일병의 항소심 1회공판도 진행되었다.

◆ 알 림 ◆

□동티모르 :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주요내용 : 동티모르 문제의 배경/동티모르 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국가사회의 책임/동티모르 연표/산타크루즈 묘지 대학살 사건개요(문의:전국연합(747-4364), 인권운동 사랑방(796-8364/5))

□월간 「함께 걸음」, 11월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되찾아야 할 또 하나의 인권 ‘장애우 교육권’/의무교육조항 빠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고단한 삶의 진열장, 노점상/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최재필,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우리나라 사회복지제정의 특성과 1994년 사회복지 예산안의 방향/국정감사에 비친 장애우 복지의 현주소(문의 : 521-5364)

□월간 「인권」, 11월호 / KNCC 인권위원회
주요내용 : 공동설교문-「민주화 개혁과 인권」/특집 : 양심수 군문제 해결되어야/참가보고 : ‘아시아 인권현장’ 준비 워크샵/제3회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움/문민정부와 철거광개의 공존시대(문의 : 764-0203)

「인권하루소식」 11월분 총목차(37호-57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11/2	37	1	“반성문 요구하는 자진출두에는 응하지 않올터”, 수배자 대책위 2일 새벽 총회에서 잠정 결정/경찰, 1일 민정련 회원 12명 연행, 수사장소 안알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전/‘자민통 사건 수배자 연행, 허락·박영재씨 남영동으로/AI 아시아 조사관 방한, 정기방문차 17일간 일정
		2/3	인권하루소식, 10월분 총목차(10월 5일(17호)-10월 30일(36호))
11/3	38	1	6공 정치수배자, 자진출두 않기로, 2일 기자회견에서 밝혀, 3일 86일간 농성 풀기로/31일 연행된 민정련 회원 2일 전원 풀려나/사노맹 관련 10년 구형 백성기씨, 3년 선고받아/5·6공 강제집 집 회생자 위령제 열려, 양군모 주최
		2	단체탐방 2·불교인권위원회, “모든 중생을 부처로 섬기고자 하는 불교인권위원회를 찾자”
11/4	39	1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법·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이 내창 열사 추모비 제막식/사노맹 관련 문영찬씨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아
		2	원진레이온 직업법 문제와 대책(양길승, 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터 추진설립위원장)
11/5	40	1	억울한 ‘살인범’ 이형자씨 무죄석방 촉구, 부산 11일 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무죄석방 촉구 의 밤’ 개최/“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조속히 검거·구속하라”, 민가협 목요일집회 열려, 이재근·박충렬씨 증언도/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 실시중
		2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 장애인 교육문제 관심 높아져/정대협 대표 5일 평양으로, 전후처리 국제토론회 참석차/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11/6	41	1	sbs ‘강기훈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 계기로, ‘유서사건’ PC통해 공개토론 진행, 3일 하이텔 ‘토론의 광장’에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진상” 개설/제작진과 교양제작국 PD 성명서 내 불방에 항의/장애인의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탐골공원 범국민결의 대회 열려
		2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 총장에 항의서한 보내/“강기훈 유서대필사건-누가 유서를 썼는가” 불방에 대한 입장, TV 제작국 교양PD, 제작진 일동/Hitel,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 토론회내용 발췌
11/9	42	1	“이장형·강희철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제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등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이형자씨 항소심 선고공판, 11일 10시 부산고법
		2	일본 전쟁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가혹행위·성추행 안기부원 수사촉구 서한보내, 윤미향씨/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기자회견문, 이장형·강희철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11/10	43	1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6공 수형생활 양심수, 군문제해결촉구, 서울등 전국 7곳 병무청 앞 동시집회 가져
		2	원진합의서(전문)
11/11	44	1	“입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원칙 위협”, ‘노·사·정 공동합의문’ 반대, 10일 오전 15개 노동단체·100여명 노동운동가 대표 기자회견/“임용고시 철폐” 등 주장하며 또 분신, 10일 오전 광주교대 한상용씨/‘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 주장, 전특련 민주당 단식농성 8일째
		2	단체탐방 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연구소’/『정신대 자료집 IV』 발간
11/12	45	1	부산고법 이형자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미하원의원 24명 일본에 정신대문제 해결촉구 서한, “공식적으로 사과 및 배상해야”/“강기훈사건” 방영 불투명, sbs시청자위원회 심의안해/“복직되면 제대조치 하겠다” 병무청 병역특례해고자 입장 밝혀/민가협 7차 목요일집회,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2	이형자씨 변론요지서(일부 게재)/일본총리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한 미 하원의원 명단
11/13	46	1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조국 등 결심공판, 검사 6년에서 2년까지 구형, 11월 26일 선고공판/정대협 대표 평양토론회 참가 기자회견, 13일 1시/전특련 민주당 농성 풀어
		2	엠네스티, 전세계 수많은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활동/긴급구명활동이란?

「인권하루소식」 11월분 총목차(37호-57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11/16	47	1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사 농성 시작, 15일 민자당사 앞 집회도 가져, 정부 국방위 청원심사 결과에 따르기/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태 청산의지 부족, 엠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 활동가와 간담회
11/17	48	1	새정부 출범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엠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 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안기부 통신문 게시물 검열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문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이내창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기자 무죄/전대일 추모식 14일 열려
		2	이내창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보도/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11/18	49	1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11월 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 작성/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 10월중순 민사소송제기/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
		2	단체탐방 4·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엄마에게 일할 권리, 아이에게 보호받을 권리를!”/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11/19	50	1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문국진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각각 요구 답변서 제출/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2	형사법정운영표준례
11/20	51	1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장애인 교육법틀안 워크샵, 18일 장애인 공대위에서
		2	전노대의 결사의 자유위원회 추가 제소(NO. 1629) 내용요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절차
11/23	52	1	어린이 성폭력 사회적 관심 필요, 19일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 열려/양심수 부당징집 폐지와 사회복귀 서명운동, 여야 국회의원 131명 교수 1100여명 넘어서/노동법 개정 홍보, 전노대
		2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행,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1/24	53	1	이스트 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씨 방한, 27일 전국연합 인권위 초청으로,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실상 알리려/성희롱사건 첫 법정공방 시작/세번 ‘탈영범’ 김대영 일경에게 3년 구형, 조정희 일병 재판도
		2	이스트 티모르는 어떤 나라인가?/서울대 교수 성희롱사건 경과
11/25	54	1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민변·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원진레이온 노동자, 정부투자기관에 우선 채용키로, 폐업대책 당정협의에서/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당해 2명 입원/사후영장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2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11/26	55	1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제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위해/외무부,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면담 거절, 세계 평화와 인권향상 의지 부족/민가협,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 열려
		2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 윤점용교수 진술내용
11/27	56	1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정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해고노동자 또 폭행 당해, 26일 대립자동차/연구단체 여전히 유죄선고, 황주석 실형, 조국교수 징유
		2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문
11/30	57	1	고립된 동티모르에 지지와 연대를,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씨 강연회, 민간단체의 연대 중요성 일깨워/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사노맹 활동관련 대학생 구속
		2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세계인권선언일 전후로 인권단체 다채롭게 행사 준비중

「헌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고문피해사례보고」 등

제48차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을 전후로 토론회, 심포지움, 대중공연, 고문피해 사례보고 등 각 인권단체들의 행사를 잇따라 열린다.

특히 김영삼 정부 출범후에도 국내의 인권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 맞는 세계인권선언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유엔이 주최한 '세계인권대회'가 지난 68년 테헤란대회 이후 25년만에 열려 인권선진국 방안이 모색되었다는 점에서도 쉽게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에 열리는 행사로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문제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7일 오후 3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고

조영래 변호사 3주기 추모 토론회,가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을 주제로 9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교협 인권위, 인권상 시상식이 10일 오후 5시 기독교회관 2층강당 *「불교인권위, 창립 3주년 토론회가 '헌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을 주제로 10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강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11일 오후 2시 정립회관 대강당 *「민가협,의 제5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이 12일 오후 3시 한양대학교 올림피아 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이외에도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은 12월 둘째주에 고문피해 사례보고를 할 예정이다.

「불교인권위」의 '헌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토론회는 정상천·강수림 의원 등 여야 인권위원장과 윤기원(변호사), 권오현(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 유상덕(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가한다.

창립 6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과 전망' 심포지움은 행정쇄신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지도위원인 인명진 목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윤점룡 교수(전주대) 등 4명의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향상을 위한 여러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에서는 안경환 교수(서울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소설가 박완서씨와 조선일보 류근일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법조개혁에 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5회째 맞이하는 「민가협」의 '시와 노래의 밤-양심수가 없는 나라'는 문호근·문성근 형제가 연출·사회를 맡고 가수 박은옥·정태춘씨 이외에도 전인권, 들국화 등이 참가하고, 시사토크쇼에는 이영희 한양대 교수, 유성환 이철의원, 박원순 변호사, 문익환 목사 등이 참여한다.

원진레이온 파산선고
30일, 의정부지원

직업병 문제와 일방적 폐업에 따라 그동안 노동자들의 심한 반발을 일으켰던 원진레이온에 대하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3민사부는 30일 파산선고를 내렸다.

지난날 9일 노동부에서 노사간에 폐업에 따른 보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미 지난날 23일까지 임금청산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도 구직을 원하는 노동자들을 서울시 제2기 지하철공사, 구리시 농수산물센터, 남양주군 종합철영소 등에 취업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1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원진레이온 직업병관리재단'을 발족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회사측은 이미 50억원의 현금을 출연하였고, 재산처분 뒤 100억원의 기금을 더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재단에서는 직업병환자들에 대한 민사상 배상금 지급 및 치료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민가협, 열번째 목요일회
오늘 2시 거리음악제 마련

민가협이 매주 진행하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회'가 2일(오늘)로 10회째를 맞이하였다.

2시부터 탑골공원에서 진행될 목요일회는 '거리음악제' 형식으로, '노래마술'이 출연하고,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속된 황대원씨 어머니 등의 편지가 낭송될 예정이다.

단체탐방·5 / 한국 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절실한 외침에 최초로 키기울인 사람들이 있었다. '여자와 복어는 3일에 한번씩 두드려야 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고가고, '맛을 짓을 했겠지' 하는 동정반 타박반의 눈초리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정내의 문제, 사생활로 치부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이들의 발걸음은 1983년 6월 11일 「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전화:269-2962/4)를 개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아주대의 이화수 교수님이 외국의 shelter house(쉼터) 등을 연구하고, 주부아카데미 출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개원전에 사전준비를 하는 동안 '가정 문제에 개입할 단체까지 필요하나'는 등의 벽에 부딪혔지만 당시 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맞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5%에 이를 정도로 가정내 폭력은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아내구타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첫 대응으로서 「여성의 전화」가 나선 것이다. 아내구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는 모든 제도와 관습, 관념이나 사고방식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아동학대와 크고 작은 성폭력 문제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로 여기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루빨리 문닫아야 할 단체(?)라고 얘기한다.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요?”
“아내구타라는 문제가 아예 없어져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성의 전화」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살펴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84년 시위에서 연행된 여대생 청량리경찰서 성추행사건, 85년 미혼여성의 25세 정년인정판결, 86년 부친서 성고문사건, 87년 대한투자신탁 결핵퇴직 강요사건, 89년 파리바은행 노조여성간부 폭행 및 부당징계사건, 일본의 정신대 관련 망언, 민자당의 탁아법 날치기 통과, 91년 김부남씨 사건, 92년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몇가지 일들만 살펴봐도 구타와 성폭력, 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깨어진 여성의 삶의 파편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여성의 전화」는 이러한 주요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앞서서 조지를 꾸리고 대응해왔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이나 가족법 개정운동 등 근본적인 장치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매 맞는 아내를 위한 전화상담과 면접상담, 쉼터(구타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피신처, 우리나라 최초의 성폭력 피해자 집단상담)의 운영을 해왔다. 상담을 위해서 1년에 2번 여성학교를 통해 자원상담자를 교육·배출하고 끊임없는 재교육과 사례연구, 세미나 등이 오랜 경험을 가진 상담원들의 자기개발노력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상담에 필요한 인력만도 1달에 5-60명에 달하고 대표, 부대표 3인, 각계 전문위원, 실무자 8인이 손발이 되어 고통받는 여성들과 「여성의 전화」는 항상 hot line이다.

아버지에 의한 구타와 성폭력등 상상 못할 끔찍한 일을 대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과 마음고생, 쉼터로

피신한 아내를 내놓으라는 협박과 미행에 '경찰원이 있어야겠다'는 한숨어린 농담, 인신매매법으로 물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등 순간순간 나타나는 장애물들이 많기만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사회적 의식과 행위를

가정문제와 짝 갈라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아내구타가 성폭력

이라는 인식의 부재와 가정문제로만 분리하려는 사고패문에 실제로 성폭력특별법도 강간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아내구타의 문제가 빠지고, 아동폭력,학대등 가정폭력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대한 폭력의 위협에 처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으려고 해도 “웬만하면 잡으십시오, 집으로 돌려보내시지요” 하는 식의 반응으로 연계가 힘들며 사진화되기가 어렵다. 성폭력을 '폭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성관계로 생각하는 풍념, 가부장제 문화권에서 형성된 순결이데올로기 때문에 피해자면서도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으로 돌려 사건 자체를 감추고만 싶어하는 현실을 허물고 피해사실을 두려움없이 말하고 그 해결을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희생과 폭력에 둔감해진 사회에 각성을 촉구하며 「여성의 전화」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음과 같다. 아내구타, 성폭력이라는 주제에 관한 한 한우물(?)을 파고 오랜 시간의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온만큼 축적해온 경험과 자료가 엄청나다. 이를 제대로 정리하고 다듬어서 사회에 체계적으로 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여성상담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연구물을 내고 발간사업을 하고자 한다. 얼마전에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라는 수기집이 발간된 바 있는데 이는 그간 고민하고 이루어온 것들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가 절실하다. 상담과 보호와 교육사업으로도 때론 벅차고 가득 안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안으로 떠오른 성희롱대책위 사업을 힘차게 하면서 「여성의 전화」를 통해 오고간 많은 이야기들을 알찬 줄거리로 풀어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알 림 ◆

□ 불교인권위/나눔의 집 건립추진위 사무실 이전
·110-320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16호
·전화 : 745-1852/3 ·팩스 : 745-1853

□ 메를 75호 발간/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의 눈으로 본다:가사노동의 사회화, 강연초록:남성문화·폭력문화, 특집:이혼에 관한 시리즈 3 등 수록

□ '94 여성수첩 판매중/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수첩에는 강간, 아내구타 등 성폭력 문제와 가사노동문제, 사무직 여성노동, 통일문제 등의 내용이 들어 있으며, 부록에는 성폭력 관련법안, 노동관련법, 여성들을 위한 도서목록, 여성문제 비디오 목록도 있다.
·값 : 2,500(문의:269-2962/4 여성수첩 담당자)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1일 본회의 통과 전화 이용 폭언·협박·희롱 상대측 변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
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
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주당 강신욱 의
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이
번 정기국회 정치관계법 특
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이 법에는 국가보안법의
죄나 형법상의 내란의 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
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
통신의 감청 등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
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
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
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
집이 어려운 경우(제5조)'
에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에는 검사 등이

통신제한의 조치의 종류·
그 목적·대상과 범위·기간
및 청구이유를 기재한 청
구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
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
아 실시하고 3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경우에
는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
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
며, 필요한 경우 6개월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
한 경우에도 48시간 이내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열이나 도청, 타인의 대
화비밀의 침해를 한 경우
와 그 취득한 통신 등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에는 일반 가
정집에서 민선이 일어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장난

전화, 성희롱 등의 경우
수신자가 상대방의 전화번
호를 요구할 수 있어, 전
화 공포로부터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라지 않아"

문익환 목사, 강기훈씨 등 양심수 석방 요구

민가협 10차 목요집회 열려

민가협 10차 목요집회가
지난 주에 이어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
형식으로 2일 탑골공원에
서 열렸다.

이날 거리음악제에 참석
한 문익환 목사는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양심수들을
'동지'라고 말하고, 이들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데 밑
바탕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강
기훈씨 등을 비롯한 양심
수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
였다. 문목사는 또 "내가
김일성씨를 만나면 '괴수'
가 되고, 대통령이 만나면
'주석'이 될 것"이라며 국
가보안법의 모순을 지적하
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황석영
씨의 아들 호준씨가 아버
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
독하고, 「노래마술」 등의
노래공연도 있었다.

한편 민가협은 12월 9
(목)일의 집회에 이어 17
(금)부터 23(목)까지 매일
집회를 열어 양심수의 석

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명확한 해석과 감시 필요

지난 11월 30일 장애아동
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던 교육법 98조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불구, 폐질, 병약 등의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라
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
어 명확한 해석과 약용에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반민주·반통일 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기장총회 주최로

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
정현) 주최로 2일 오후 향
린교회에서 '반민주·반통
일 악법 철폐와 구속 양심
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
을 통해 "정의로운 신한
국 건설과 과거청산"을 의
치는 지금 반민주·반통일
악법이 살아있다는 것"과,
"문민정부가 들어서신 을 겨
울에도 많은 의로운 이들
이 감옥안에 있다는 사실"
에 아픔과 분노를 느낀다
며,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을 비롯한 반민주·반통일
악법 철폐 *우진성 준목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즉
각 석방 *불의한 과거의 철
저한 청산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날 박원순 변호사
의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
평을 향해'라는 강연과,
최근의 인권동향 및 기장
내의 양심수 명단을 발표
도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요약)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
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1.형법 중 내란의 죄, 외주의 죄, 국교
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도주
와 범인 은닉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
휘관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함복과 도피
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등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합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이하 생략)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
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
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
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경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
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
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사
건의 관할법원은 그 제한조치를 받은 통
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
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이 통신제한조치청구
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

대상·범위·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
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
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 및 그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그러나 제5조 제1항의 허가요
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의 절차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통신
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
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
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
인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
등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
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솔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요건
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
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
어 6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8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에 규
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
유가 있는 때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
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
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신
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에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
다.(이하 생략)

제11조(비공개 원칙) ①누구든지 제6
조 내지 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통신
제한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에는 이

를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
부·허가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
설할 수 없으며, 그 기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
한)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
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
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
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송신인의 전화
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4조(타인의 전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
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제15조(보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
정감사위원회·국정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내역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이나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
또는 체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
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의 내
용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통신제한조치의 청구목적과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자

2.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
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
를 위한 광고를 한 자

3.감청설비의 인가대장 등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
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임시우편단속법은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
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
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
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호를 적용
한다.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
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일간신문
에서 박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번 발길 옮겨보는 수고로 보답해주시
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
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새 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지난 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동안의 일정으로 한국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돌아간 국제 엠네스티 대표단은 방문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난 달 24일에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국제엠네스티는 현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난 2월 새정부 출범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수백명의 정치범과 고문, 그리고 새로운 양심수들의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 2월 국제엠네스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과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350여명의 양심수가 계속 수감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250여명이 국보법에 의한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정부가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방문기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 대해 모 일간지에서 ‘비전문가’ 운 운하며 엠네스티의 활동을 비판한 것을 의식한 듯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보고는 그 나라에 대한 인권조사업무 전문가들이 행한 수년동안의 자세한 조사작업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법적 문서와 사법부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분석한다”고 활동과정을 설명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구속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 ‘과거 인권유린에 대한 보

고서를 연구할 것’ ‘사형제도의 폐지와 약 50명의 사형선고를 받은 수인들의 사형선고를 바꿀 것’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전 세계에 있던 300여 그룹들이 100여명 수인들을 위해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 한국정부 및 자기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 관리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만나는 자리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고 한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 인권개선의 새 출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배병성씨 5차 공판, 부검의 증언

지난 6월 12일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진압경관인 김춘도 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병성씨(21,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에

대한 5차 공판이 3일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2·3면 / 박원순 변호사 강연내용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

알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집회
·주최 : 청년학생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위
·일시 : 12월 4일(토) 오후 4시 ·장소 : 명동성당앞

□김병곤씨 3주기 추모제 및 추모사업회 발족식
·일시 : 12월 6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기독교회관 2층강당

□반민주·반통일악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기도회
자료집/한국기독교총연합회(708-4021)
·주요내용 : 강연-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위하여(박원순 변호사)/참고자료-최근의 인권동향, 안기부법과 국보법 개폐에 대한 촉구 의견 등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일간신문에서 막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번 발걸 옮겨보는 수고로 보답해주시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변호사 박원순

이 글은 지난 2일 기독교장로회 주최 ‘반민주·반통일 악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서의 강연내용입니다.

1. 서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그동안 인권운동에 종사해오던 저지 않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거나 보다 인기있는 환경운동, 시민운동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하에서 인권문제는 더이상 활발한 동력을 제공하는 운동의 이슈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인권을 감시하고 담당하던 부서들이 아시아워치 등 우수한 세계인권단체에서 해체되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활동을 벌이던 저지 않은 활동가들이 한국을 떠나 필리핀, 버마, 중국 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한국의 인권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던 구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오래이며 세계각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 등에서도 한국은 아예 빠지거나 대단히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작년도 아시아워치 세계인권보고서에는 일본의 인권에 대한 논평부문은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 정부의 인권개선정책에 맞물려 있다. 군부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던 노태우 정권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권력의 남용이 상당부분 시정되기 시작되면서 인권문제가 언론과 사회의 관심사로부터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인권의 개선과 인권운동의 활성화는 사실상 반비례 관계에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인권수준의 향상이 인권운동의 활력을 삭감시키면서 역설적으로 인권운동의 어려운 여건을 가져온 셈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선되어 인권운동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불가피하고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정부는 더이상 한국에서 인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없었다고 거듭 천명해왔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세계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여기 우리들이 세계인권회의에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서 인권이 드디어 성숙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진실,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숙한’ 인권, ‘승리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 그것은 턱없는 만용이며 과장이 다. 이미 수백년을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법제도의 개혁과 인권사건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제 민주주의적 문턱, 인권의 초보적 단계에 들어선 우리가 그토록 자만할 사정은 아닌 것이다. 그 자만할 수 없는 사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권운동이 결코 쇠퇴하고 사라질 수 없는, 그리고 사라져서는 안될 이유는 무엇인가?

2. ‘문민정부’의 이름에 값하지 못하는 인권상황

오늘 이 땅에 마치 모든 인권문제가 사라지고 자유와 정의가 보장된 유토피아적 사회가 다 된 것인양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이 정부의 과대 홍보정책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언론의 몰인권적인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에 의해 이제 인권문제를 들먹이는 것이 마치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하에서 인권의 어느 측면이 개선되고 발전하였는가. 민가협은 여전히 300명이 넘는 양심수가 갇혀 있고 4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장기가 있는 나라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감옥은 전향의 강요와 비민주적인 억압으로 가득찬 행형제도로 움직여지고 있다. 아직도 안기부에서 성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으며, 책 한권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구시대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던 수백명의 유가족들이 아직도 진실을 갈구하고 있고 고문의 희생자들의 절규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러 방문했던 국제 엠네스티 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 것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문민정부 출범 후 개혁조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왔으나 인권침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 우리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만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노력의 부족 등이 인권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그토록 많은 양심수를 낳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이 끄덕하지 않고 남아 있다. 수사시 변호인의 입회권,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적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원한이 사무쳤던 안기부와 경찰의 대공부서의 실질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그 사명을 저버렸던 사법부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인권남용에 앞장섰던 검찰의 책임있는 법관과 검사들이 그에 대하여 응징과 면직받은 바 없다.

무엇이 개혁이고 개선인가.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착, 인권남용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관행의 확립, 합상적인 인권단체와 국민의 감시체계 구성없이 개혁과 개선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구체적인 성과는 없이 마치 모든 개혁이 이루어지고 인권문제는 사라진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더 큰 인권의 위기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 인권의

실질적 담보조건은 아니다. 어차피 인권은 한 개인의 문제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땅, 이 한 밤, 단 한 명의 고문받는 형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만인엔 편히 잠잘 수 없다. 단 한 명의 인권,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문민정부'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고 있는 인권은 한두 명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또다시 우리 사회의 최대공약수이자 지난 시대의 교훈이었던 인권의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 인권의 대량유린을 가능하게 하였던 수많은 법제와 기구, 관행과 인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언제 다시 그 희생자가 생겨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미 생겨나고 있는 사례들은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정당화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3.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이와 같이 정부의 인권정책이 대단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인권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이미 본대로 변화된 정세속에서 인권이라는 이슈가 더이상 대중의 관심을 끌어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을 담당하고 이끌어갈 인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과 관련하여 인권운동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 사회의 인간화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새로운 자질을 갖춘 인권운동가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종래의 인권운동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운동의 한 요소와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의 남용과 악화는 결국 부당한 군부독재정권의 존재에 연유하였던 것이므로 이 정권의 타도야말로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권운동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인권운동과 정치운동의 경계가 제대로 서지 않았으며 전문적인 인권운동가가 배출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인권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보고·연구·고발하고 법제·관행의 변화를 위한 대안마련의 역할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임무를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양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인권운동의 대중적인 방식을 개발해내야 한다. 종래의 인권운동은 권력기관이 무언가 '실수'를 저질러 주기를 기다려 그것을 문제삼고 성토하는 소극적인 방식에 매달려왔다. 그러나 이제 어느 분야, 어느 인권이 문제인가는 직접 찾아나서 이를 대중과 언론에 널리 알리고 이를 움직여 진상조사운동,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 소송 등을 통한 문제제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법부 감시운동도 조직되어야 한다. 이제 '주먹'보다는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을 설득하고 촉발할 수 있는 광범하고도 다양한 방식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종래 국가권력 기관에서 빚어지는 가혹행위, 그것도 시국사건에 인권운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받는 곳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 이름없는 서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 여성들의 인권, 장애자의 권리,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등이 모두 함께 증시되어야 한다.

오늘 이 땅에 마치 모든 인권문제가 사라지고 자유와 정의가 보장된 유토피아적 사회가 다 된 것인양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이 정부의 과대 홍보정책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언론의 물인권적인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에 의해 이제 인권문제를 들먹이는 것이 마치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넷째, 인권활동의 국제적인 장에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제적·지역적 협력없이 전개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인권침해로 고통당할 때 전 세계가 보여준 관심과 지원을 감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인권법은 구경하고 방관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법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우리 정부의 비준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사법부가 재판의 준거로 상용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규약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활발한 제소를 함으로서 우리의 법체제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자세와 인식이다. 과거의 독재정권하에서는 이런 인권문제라도 정당한 조사와 해결을 차단·비호하려는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적 성격을 띠고 곧바로 큰 관심과 영향을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의 청산과 함께 인권문제는 인권문제 그 자체로서 남게 되고, 그 파장이 정치권에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작은 인권의 이슈라도 꾸준히 제기하고 언론과 사회의 양심에 호소하는 지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문제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인 한 간과할 수 없다. 작은 것이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다.

4.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

-투쟁없는 인권없고 희생없는 자유없다.

오늘날 김영삼 정부하에서 고창되고 있는 개혁과 문민이라는 구호에 의하여 인권문제는 정부 자신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권력과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인권을 완벽히 보장하고 실현하는 예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국민 스스로에 의한 헌신과 투쟁없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입증하는 바이다.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도 지난 시대, 그 암흑한 동토의 계절에 신명을 바쳐 투쟁하고 노고를 바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인고의 세월이 끝나고 정부가 개혁을 통해 인권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만큼 위험천만한 사고방식도 없다. 우리가 누리는 이만큼의 자유와 권리도 그것을 끝없이 지켜내고 신장시키고자 하는 불침번의 노고가 없다면 그것마저도 안전하지 못하다.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Liberty is the price of eternal vigilance)라는 표어는 미국의 가장 큰 인권단체인 미국인권옹호연맹(American Civil Liberty Union)의 정문앞에 써 붙여 있는 구호이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권운동을 향한 장정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정법 개정 계기되어야

지난 2일 노태훈씨(인권운동 사랑방 상근자)는 이석태·조용환 변호사 등을 통하여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면 참조).

이날 제출된 청구서에 따르면 노태훈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못하고 수의를 입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로 “미결수용자에게 강제로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의복을 선택하여 입을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또한 “그의 유죄를 전제로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인격을 침해함으로써 결국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미결수에게 재소자 수의를 입게 함으로써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이 정한 ‘재소자 인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되는 것’에 “미결수용자는 깨끗하고 적절한 자신의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는 사복착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행정법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기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62조)하여 미결수에게 기결수의 각종 처우가 그대로 적용되는 형편이다.

따라서 행정법 제6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도 이 청구로 가려지게 되었으며, 이번 기회에 일체의 잔재도 청산하지 못한 행정제도 및 행정법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당징집 폐지 항의방문 양군도, 9일까지 국방부앞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서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부당징집 철폐' 등을 주장하며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 토론 오늘, '성희롱공대위' 주최

서울대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회적 목인과 방치 속에 여성의 안전한 직장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해 온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열리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 토론회는 '서울대 성희롱사건 공대위' 주최로 7일(오늘) 오후 3시부터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에서 열린다. '직장내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 '현장에서 본 직장내 성희롱문제'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행사알림 ◆

- 조영래 3주기 추모토론회/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
 - 주최:조영래변호사를 추모하는 모임
 - 일시:9일(목) 18:00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발표: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 대한변협 심포지움/헌법재판 활성화 방안
 - 일시:10일(금) 13:30-18:30 /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제발표:김용운 성대교수(헌법재판의 제도적 개선방향)
 - 이재후 변호사(헌법재판의 운영상의 문제점)
- 불고인권위 창립3주년 토론회
 - 헌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 일시:10일(금) 14:00-17:00 / 조계종 총무원 강당
 - 주제발표:한상범 동국대 법대 교수
- 93년 인권주간 기념식 및 인권상 시상식
 - 주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 일시:10일(금) 17:00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강연:박원순 변호사(국제인권운동의 어제와 오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6주년 행사 및 심포지움
 -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과 전망
 - 일시:12월 11일(토) 14:00-21:00 / 정립회관 대강당
 - 주제발표:인명진(행정재신위원회 사회복지 지도위원)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양심수가 없는 나라
 - 주최:민주화실천운동가특별회의/한양대 총학생회
 - 일시:12일(일) 15:00 / 한양대 율리피케육관
 - 출연:정태춘, 박은옥, 안치환, 원창연, 김중서 등

◆ 공판안내 ◆

- 12월 7일(화)
 - 김대영, 군부이탈, 10시, 인천지법 103호, 선고
 - 박영생, 국보법, 10시, 대전 육군교동군사법원, 선고
- 12월 8일(수)
 - 송재희의 4인,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 시노하라 미사토, 국보법, 2시, 서울지법 425호, 5회
- 12월 10일(금)
 -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2시, 서울지법 417호, 6회
 -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이완기의 9인, 업무방해등(문화방송 노조사건), 2시, 서울고법 303호, 선고

헌법소원심판청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받고, 같은 해 8. 10.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법에서 재판권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0. 위 법원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로 같은 날 석방된 사람입니다.

2. 침해된 권리

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나.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인이 1993. 8. 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속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때부터 같은 해 집행유예선고에 의하여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수의)를 입게 한 처분

4. 청구이유

가. 헌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고 그러한 권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형사피의자로서,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권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됨으로써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 이상 권리의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흔히 수의라고 하는 재소자들이 입는 의류는 보통 흰색이나 회색, 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보아도 그가 현재 범죄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형을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임을 금방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복의 외형만으로는 그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인지 아니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하고 있는 기결수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강제로 어떤 의복을 입게 하는 것은 그 자체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의복을 선택하여 입을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누가 보아도 범죄자와 동일시될 수밖에 없는 의복을 강제로 입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최대한의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사람

의 인격적 존엄과 가치에 그보다 더 큰 침해는 생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후라도 후시 이러한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그래서 무죄로 추정되고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방어를 하여야 할 미결수용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신체를 구속하였다는 것외에는 모든 면에서 무죄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에게 강제로 수의를 입히는 것은 그의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인격을 침해함으로써 결국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 국제연합이 정한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은 "미결수용자는 깨끗하고 적절한 자신의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88조 제3항). 그리고 이 규칙은 기결수의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재소자가 옮겨질 경우에는 자신의 사복을 입거나 달리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헌법적, 국제인권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형법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아무런 배려없이 기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제62조) 기결수에 대한 각종 처우가 그대로 미결수에게 적용되는 현실이고 미결수의 의복문제 또한 그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바.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수의를 입게 하고 심지어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인 법정에까지 그러한 옷을 입고 출정하여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외부인들에게 범죄인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며 미결수 스스로 그러한 옷을 입음으로써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자기방어권까지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 역시 1993. 7. 23.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때부터 같은 해 10. 20. 석방될 때까지 강제로 수의를 입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훼손당하고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5. 그러므로 청구인이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 수감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사복 대신 재소자용 수의를 입게 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그러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행형법 제62조가 미결수에게 사복대신 수의를 입게 하도록 허용하는 점에 관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입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생략)- 구속영장, 사건송치서, 판결, 위임장
1993. 12. 2.

위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석태·김형태·조용환·백승헌
헌법재판소 귀중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일상화되고 공공연한 직장내 성희롱이 새로운 유형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임을 밝히는 토론회가 7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대책위'와 '성폭력특별법 제정 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개별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압박과 모욕 등에 그치지 않고 고용차별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대상이 사무직과 모욕 등에 그치지 않고 고용차별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가부장적 성문화와 자본주의 성페락주의를 강화시키는 방송, 광고 등의 각종 기제가 성희롱을 일삼화시키는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수연씨(한국여성민우회 상근)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대상이 사무직과 모욕 등에 그치지 않고 고용차별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람이 응답자의 87%에 이른다고 밝히고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굴욕감이나 유·무형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조항 명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에 의한 성차별 조항 추가 등의 법적 장치와 노동부와 노동조합 각각의 피해여성에 대한 구제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이영자교수(성심여대)는 "성희롱이 여성에 대한 통제의 한 수단이고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보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제들이 작용하여 여성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성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성희롱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종걸 변호사는 "성희롱 문제는 인격권 침해인 동시에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2면 참조).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경찰청 보안국은 7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혁사노)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온 혐의로 장운씨(29세, 중앙위원장)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송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남한 통치 기구를 파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뒤 국제적 연대로 세계 공산화혁명을 완수한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혁사노를 결성한 뒤, 기관지 '노동자 권력의 깃발' 배포와 전국적인 지하당을 건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씨 끝내 연행 컴퓨터통신내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의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열씨(20, 진보저널 근무)를 영장없이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없이 김씨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가져갔다.

것은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대영·박영생 1년6월선고

세번 '탈영'하여 근무이탈죄로 기소된 김대영 일경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려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여 탈출예비음모죄로 기소된 박영생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려 1년6월이 선고되었다. 1심 형량은 3년.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시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일간지에서 박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번 옮겨보는 수고로 보답해주시시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변호사 이종걸

제1.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1.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직장내에서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가법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2.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범주를 점하는 기준

미국에서 수년간 판례를 정리하여 성안된 80년 '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직장내 성희롱을 불쾌한 성적접근, 성적접근에 응하기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의 성적인 성격을 가진 언동 등에 의한 거절, 복종이 목시적으로라도 근로조건의 형성, 변경하는 이유로 이용될 경우 그리고 그것이 불쾌한 직장환경을 조성시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라고 명시하였다.

3. 연혁

(중략) 64년 미국의회를 통과한 공민권법 제7편에(중략) "고용시 수당 계약조건 특별이익 부여, 고용기회를 박탈하거나 박탈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 전반에 관하여 성에 의하여 차별할 수 없다는 포괄적인 고용평등법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이 제정후에도 성희롱을 '허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충동'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남성의 관심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여 성차별로 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76년 William v.Saxbe 케이스에서 윌리엄이 상사의 빈번한 성희롱 요구에 거절한 후 해고된 사실을 위 법 제7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중략).

4. 개념판단 및 입증의 문제

가. (중략)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

성간의 교섭과 가법적인 성희롱의 명백한 차별에 혼돈이 있다. 판단의 기준은 제3자로서 객관적 판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중략).

아무튼 분별력 있는 여성이 보기에 즐겁고 우호적으로 상호간에 주고 받은 농담과 당시의 분위기에 맞는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직장내 구속관계로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시 성적관계가 있는 자의 상호간의 농담과 행위는 대부분 성희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희롱으로서 필요최소한의 요건은 불쾌함과 성적자극을 동반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개념속에 속하는 행위로서 판단이 가능한 사실이 있었다라든가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가로 놓여 있다(중략). 여기에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중략) 일반적인 면서관계가 없는 자간의 관계나 특정한 계기에 의하여 만남이 지속되고 있던 당사자간에 성희롱이 논의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성희롱의 거절·용인이 해고·채용등 근로에 조건이 되는 등 객관적인 영향관계가 있고 행동이 지속적·반복적이어서 입증이 용이한 직장내 성희롱이 주로 문제되고 있다.

제2. 각 법적 분야별 대응

1. 형사법적 대응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법에 명시적인 처벌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경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중략).

실제적으로 성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우리사회가 용인하는 사회적 법적 허용한계는 무척이나 넓다(중략).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규범인식을 바탕으로 공세를 가하는 가해자 쪽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위 조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이므로 피해여성의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소를 하는 당사자도 미리 수사기관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법 적용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방식도 취해 볼지하다.

2. 민사법으로서 불법행위 법적 대응

성희롱 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건과 같은 성희롱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법앞의 평등(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앞서 말한 형사법적 대응에서와 마찬가지로다.

3. 노동법적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시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서구, 일본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구제 수단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주요분야는 바로 본 고용법적 대응이다. 이는 근로의 권리 등을 정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가. 성희롱 행위의 개념적 확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정되는 형태를 보면,

첫째, 평상시 직장내 근무중 상사의 성적 회롱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 여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거나 위협적이고 불쾌한, 그리고 수치스럽고도 혐오스런 근무환경을 빚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상사의 성적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하여 해고되거나 입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복행위를 받게되는 일련의 행위를 보복회롱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사의 대가행위 내지 보복행위가 없이 단지 성적회롱으로 피해자가 업무하는데 적대적인 환경만 조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바로 성에 관한 고용차별을 인정하는 환경회롱회롱행위가 정화되었다(중략).

나. 입증책임의 완화 전환(생략)
다. 확보해야 하는 문제들
직장내 여성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참여하여 성희롱을 금지하는 지침을 공포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내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 부서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하 생략)

발행처: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서준식
편집인: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북한 적십자회, 출소 장기수 김국홍·함세환노인 송환 요구

7일 한국적십자사에 전화통지문 보내 '엄연한 전쟁포로' 주장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회 이성호 중앙위원장 대리가 7일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김인서(김국홍, 68세)·함세환(62세) 두 노인을 송환해 달라는 북측의 요구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화통지문에서 이성호 대리는 김인서·함세환 두 노인은 '엄연한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면서 한적측이 두 노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두 노인이 전쟁포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송환을 요구한 김인서 노인은 김국홍이란 이름으로 51년 지리산에서 체포된 후 3년에 걸쳐 총 33년 7개월을 복역하였

며, 사회안전법 폐지후 89년 10월 12일 맨 마지막으 로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법무부 갱생보호회 광주지부에 거주하고 있다.

김 노인은 지난 92년 6월에 한겨레신문에 복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보도되었으며, 현재 복에는 여동생과 딸 두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함세환 노인은 53년 숙리

산에서 총상을 입고 체포된 후 73년 만기출소하였고, 75년 비전향을 이유로 청주 보안감호소에 재수감되었다가 14년만인 89년 8월 7일 출소한 후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들 두 노인에 대해서 KNCC 인권위 등 3개 단체도 정부에 전제조건 없는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 시국관련 수형자 보충역편입 거부 인사국장 6일 보도자료 배포, 양군도 반발

국방부는 6일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처분 요구와 관련, 현행법상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징집면제 또는 보충역 처분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현역복무중 수형자의 특수전역 처리기준(2년)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다른 일반형사사건의 수형자까지도 징집면제가 불가

피하여 사실상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김정훈, 이하 양군모)은 8일 '국방부는 진정 개혁을 거부하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이번 보도자료사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다.

양군모는 여야합의에 따르겠다는 총리의 국회답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경찰, 김형렬씨 구속
컴퓨터통신 관련 최초

서울경찰청은 8일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의 유인물 등을 발췌하여 게시하였던 김형렬씨(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로 구속했다. 김씨는 컴퓨터 통신망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이 최초이다.

김씨는 현재 서울지검 공경우에는 현역복무중 수형자의 특수전역 처리기준(2년)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다른 일반형사사건의 수형자까지도 징집면제가 불가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끔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일간신문에서 박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번 발길 옮겨보는 수고로 보답해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 알 림 ◆

- 고 조영래 변호사 3주기 추모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
- 일시 : 9일(목) 오후 6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발제 : 안경환(서울법대 교수)
- 토론 : 박완서(소설가),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실장)
- 민가협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 목요일집회
-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3
- 일시 및 장소 : 9일(목) 오후 2시 탑골공원 앞
- 내용 : 조국과 청춘 공연, 구미유학생 간담회, 단상 공연, 민예전, 민예전 사진 회화경매(무기수) 아들 민혁(국민학교 1) 편지 등 낭송

단체탐방 6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갑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학대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히브리 13:3).”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김진춘 목사)은 신앙적, 양심적인 이유로 0.75평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지난 88년 감신대 83학번인 한 학생이 전경으로 복부하던 중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쫓기고 있었다. 그 학생이 바로 연성홍씨였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몇명의 선배들이 썸피돈을 모았다. 주로 작은 지방 교회의 전도사이거나 해서 어려운 처지였지만 쫓기는 후배, 구석에 물린 시대의 양심을 위해 모두들 끼어 나왔다. 그리고 연성홍씨는 얼마안되는 그 돈을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어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습을 본 선배들은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 부끄러움은 통일을 위해 애쓰다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한 앓이 되었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발걸작업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치유’가 중요하다. 큰 목표보다는 작은 곳, 우리 감리교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여 4500여 감리교회는 우리가 책임지자”는 생각으로 10여명의 젊은 전도사를 중심으로 ‘고난받는 감리교인을 위한 후원회 준비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92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정식 발족되었다.

이들은 처음에 빨갱이 집단을 돕는다는 식의 교회내의 인식의 벽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양말을 제작하여 직접 갖고 돌아다니며 팔고, 일일찻집을 열고, 인권주일의 공연을 하는 일 등을 통해 제정을 마련하여 양심수의 가족들을 만나고 영치금을 보내는 등의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떤 당위보다는 연민같은 데서 시작한 바도 없었지만 이런 과정중에 소리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교회가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포하는 예수님처럼 입과 발을 열어 인권,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작한 소식지 발간·발송 사업이 6년째에 접어들어 처음에 2장짜리로 시작했던 것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간 지문이 없어지도록 발송작업을 하던 일도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소식지 사업을 통해 하는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이름없이 빗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일반 기록 대중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권만이 아니라 교회내의 다른 부분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것은 ‘고난’의 조직구성에서도 나타나는 바, 후원회원(500여인)으로 이루어진 총회와 목사, 평신도로 이루어진

어진 평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소위 명망가는 있지 않다. 거의가 얼굴없는 사람(?)들이다. 고난 상근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부끄럽다고 이름 밝히기조차 꺼려하는 이들은 자기용돈을 모아 내놓는 가난한 성직자와 이름없이 빗없이 속한

평화로운 세상 올바른 믿음의 교회 고난에 동참하는 가족공동체

가 있고 캐나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내에는 강화와 수원이 있으며 인천, 원주공동체가 내년 만들어진다.

상근간사들이 주머니를 털어 감신대 앞에 지하실을 마련해 시작된 고난 사무국은 4년만에 지상(?)으로 탈출하여 간사들의 만성감기를 털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인권사업부, 회원사업부, 편집부, 문화부, 연대사업부를 두고 상근 2인과 비상근 4인에 의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고난’의 사업원칙은 구체적으로 역량에 맞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먼저 스스로 노력한 후에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방 두칸, 통일 할아버지 4분을 모신다’는 목표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모금운동을 하기 전에 ‘고난’이 먼저 벌 수 있는 것만큼 벌겠다는 생각이다. 달력·카드·성경주석 판매, 문화공연 이익금을 통해 목표액을 만든 다음에야 널리 알리고 모금을 할 생각이다.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겠노라 알리고 도우라고 하기 전에 ‘고난’내의 힘을 최대한 모을 생각이다. 회원들의 성금으로 활동비를 쓰지 않고 간사들 스스로가 수익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도 그런 생각에서이다.

그간 아버지 주일날 장기수 할아버지를 모시고 효도나들이를 가고 환갑잔치를 열고 하면서 손주·손녀 노릇을 해왔는데 이런 만남을 통해 얻은 바가 크다. 처음에는 수십년에 걸쳐 간직했다는 신념이란 것이 쇼맨십이 아닐까, 통일에 대한 믿음이란 게 강짜가 아닐까 하는 강박한 마음에서의 의심도 강했지만 만난 지 4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순수함의 발견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우리 친구 예수’라는 제목으로 걸려있는 고난의 새해달력에는 가냘프고 소박한 가난한 예수님의 그림이 가득하다. “매번 그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빈 호주머니를 채웁니다. 누구보다 가난한 그림에도 말입니다”라는 표지의 글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연말이라서가 아니더라도, 웬지 착하게 가난하게 살아야겠다는 일기쓰는 심정이 작은 고난사무실을 나서면서 생겨난다.

주소 : (120-650) 충청로 우체국 사서함 52호
전화 : 393-4662 팩스 : 364-6076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

이석태 변호사

P형제.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후 ‘사정이다’ ‘재산공개다’해서 연초부터 나라안이 떠들썩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분주함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쌀개방 문제가 아니었다더라면 예년에 볼 수 없던 조용한 연말이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장서서 사람을 잡아넣던 권력자가 감옥에 들어가고, 평소애 부도덕한 정권을 성토했던 알고 지내던 인사가 갑자기 정부 공무원의 높은 자리에 임명된 기사를 보고 ‘아, 그랬던가’ 하며 가슴을 쓸던 일도 점차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일로 사실 변화가 많은 한 해였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하면서 몇몇 소소한 변론을 하였을 뿐입니다. 21세기니, 신세대라는 말도 있는데, 시대에 점점 뒤떨어져 가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월에 뚜렷한 삶의 지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단 저 하나만이 아니겠지요.

그러자니 마음의 위안이라고나 할까, 예전에 P형이 제게 해준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 주위에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 그 공통된 삶의 수준을 그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오래 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똑같이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경우에도, 익사직전의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뛰어드는 행위는 ‘가치있는 있는 일’이겠지만, 건강을 위한 수영은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그친다고 덧붙이신 말씀이 뇌리를 스칩니다. 그러면서 작게는 가족, 친구관계에서 시작하여 넓게는 사회, 인류까지 열거하셨지요. 또 형은 인간이 각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사람은 이러한 연대의 확인작업을 통해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태아가 어미의 뱃속에서 합일의 극치상태에 있듯이, 오래전에 모태에서 떨어져나온 P형과 저와 같은 성인은 연대적 삶의 영역을 확대해감으로써 불안감과 갈등을 줄이고 태아적 삶의 행복을 편린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은 이러한 연대적인 삶의 방식의 하나로 인권운동의 예를 들었습니다. 형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끊임없이 보다 나은 쪽으로 유도하는, 즉 가치있는 삶으로의 전환이 인권운동의 목표라고 강조하셨고, 저는 현학적으로 들리면서도 형의 정의에 동의한 것으로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법률가에게는 인권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신분이나 성의 차별없이 평등하게 살 권리,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법전 속의 권리로 표상되기 마련입니다만, 형은 인권운동이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의 운동이라고 보셨지요. 말하자면, 인권이란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지구상에 낙원은 아직은 요원한 것이므로 인권향상의 문제는 영원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국내는 국외에서든 인권 문제는 항상 누군가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권에 관한 문제는 그 셈이 마르는 일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마치 시지프스처럼 영원히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돌을 올려야만 할 운명을 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에너지가 소모되었지요. 하지만 그에게 연대에서 오는 평화가 선물로서 주어집니다.

얼마전에 조계종에 종정 성철스님이 입적하셔서 온 나라안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성철스님이 설법한 진리의 말씀보다는 ‘외국어에 능통하였다’ ‘사리가 몇 개 나왔다’는 등 외형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불가에서는 성철스님이 특히 보조국사 지눌의 ‘돈오점수’ 가르침을 ‘돈오돈수’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지요. 저는 그때 ‘돈오돈수’에서 말하는 ‘깨침’을 앞서의 ‘가치의 발견’으로, ‘돈오점수’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가치의 실천과정인 인권으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나 하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권운동은 연대적 삶에서 오는 인간적 기쁨의 가치를 깨달아 각자의 삶의 지평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생활과 사회활동에서 가치를 실천,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45번째 맞이하는 인권기념일입니다. 어지럽게 돌아가는 주변상황 속에서 무지한 자신의 일상을 돌아다보니 불현듯 P형의 모습이 떠오르며 그리워져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평소 부족한 저를 늘 체찍질하며 이끌어주신데 새삼 감사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연말 더욱 보람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주 :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2차례의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10일 이석태변호사의 글에 이어 11일에는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을 실을 예정입니다.

AI, 사형집행 중지·사형제도 폐지 요구 법무부, 새정부 출범 해 관례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은 8일(영국시간)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였다(아래 요약 참조).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집행이 법무부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전에 통고도 없이 사형수가 항구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형수를 일반적으로 수감하는 것은 채 수감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91년에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나 처벌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10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세계 44%의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었음에도, 아직까지 103개국에서 사형이 존치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한 62개국에서 사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부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9일 "그동안 새정부가 출범한 해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인만큼 관례에 따라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환영한다면서 사형수에 대한 감형조치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전국의 구치소에는 53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보도자료(발췌) / 12월 8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바이다. 91년 12월 9명의 사형수가 사형당했고, 92년 12월에도 다시 9명이 사형집행을 당했다. 이러한 관행을 볼 때, 사형수 감방의 수감자들과 일반 한국인들은 앞으로 수주내에 좀더 많은 사형수가 사형집행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중략)

사형수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 자신들이 사형당할지도 모른다는 항구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사형집행절차를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박한 사형집행을 통고받는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집행을 명령하는 결정이 독단적이라는 사실에 우려한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형집행결정을 내린다. (중략) 사형을 당할 사형수의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사형집행을 사전에 통고받지 못하고 있다.(중략)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수감중 수감을 찬 제로 지낸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관행이 한국정부가 91년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나 처벌과 같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중략)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삶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이하 생략)

시국관련 수행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받아 들어 본회의에 넘겨

9일 국회 국방상임위원회는 김성중씨등 '암심수 군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회원들이 제출한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의로 넘겼다.

국방위는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시기 민주화를 위한 시국관련활동으로 비록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실형선고자는 아니나 이들은 그동안 수배·구속·수형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와 국민 화합 차원에서 국방부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군도 회원들은 89. 3. 25.부터 93. 2. 24. 사이 집시법위반 등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행자들로써 병역법시행령 103조(단일사건으로 2년 이상 실형자만 병역면제)를 89. 3. 25.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93. 4. 29. 청원을 낸 바 있으며, 대상자는 533명이다.

조영래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9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이라는 제목의 조영래 변호사 3주기 추모토론회가 김창국 서울변호사회 회장, 홍성우 민변 대표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안경환 교수(서울대)는 *변호사 수의 확대와 서비스의 개선 *전문변호사·전문법원의 필요성 *헌법재판소 판사에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 반영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법조개혁을 촉구했다. 또 안 교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법조를 감시하고 개혁을 강요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류근일 조 선일보 논설위원은 '수사의 불공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요원하다'며 전체 수사과정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알 림 ◆

- 제45회 유엔 인권선언기념일 기념 강연회
 - 주최 : 한국인권운동연맹
 - 일시 : 10일(금) 14:00 / 장소 : YWCA강당
- 세계인권선언 기념 캠페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주최 : 거짓속으로 사라진 사람들
 - 일시 : 10일 12:00-15:00 / 장소 : 대구백화점 앞 거리
-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 주최-대한변호사협회
 - 일시 : 10일 13: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
- 불교인권위 창립 3주년 토론회
 - 주최 : 헌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 일시 : 10일 14:00 / 장소 : 조계종 총무원 강당
- 인권주간 기념식 및 인권상 시상식-한교협 인권위
 - 일시 : 10일 17:00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강연 : 국제인권운동의 어제와 오늘(박원순 변호사)
 - 인권상 수상식 및 '93 인권선언 발표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기념행사 줄이며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필요

유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45돌을 맞아 각 인권단체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인권선언일 기념행사가 '불교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인권운동연맹' 등의 주최로 열렸다.

불교인권위 기념토론회

불교인권위는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 안옥희 민가협 상임의장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3주년 기념토론회를 갖고, '헌정부가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 300명이 넘고 그 가운데 새정부가 들어선 후 구속된 사람만 해도 190여 명에 이르는 등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문민정부'에서도 공권력의 고문과 잔학행위, 불법연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민주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강압수사, 검찰의 묵인, 법원이 무죄주장을 외면하여 살인범으로 몰렸던 김기용 순경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검찰과 경찰책임자 사퇴, 김기용 순경에 대한 보상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2면 참조).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케네스

하나로 과거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반인권적 법과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KNCC 인권위 기념식

기독교회관 강당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의 '93 인권주간 기념식 및 인권상 시상식'이 오후 5시에 열렸다.

한교협 인권위는 이날 93 인권선언을 통해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인권선언일을 맞았지만 아직도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가 300명이 넘고 그 가운데 새정부가 들어선 후 구속된 사람만 해도 190여 명에 이르는 등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문민정부'에서도 공권력의 고문과 잔학행위, 불법연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민주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강압수사, 검찰의 묵인, 법원이 무죄주장을 외면하여 살인범으로 몰렸던 김기용 순경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검찰과 경찰책임자 사퇴, 김기용 순경에 대한 보상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2면 참조).

마클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끈질기게 여론화하여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과 한·미 행정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공헌하였고, 최근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로 상설화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대위'(위원장 전우섭 등)에 인권상을 수여했다.

시 한국지부 '실종' 캠페인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0일 인권선언일에 즈음한 성명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인권선언문이 아직까지 세계도처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국정부에 국제인권규약 준수와 양심수인의 석방 *한국정부에 고문방지조약에 즉각 가입,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즉각 개정, 사형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또 한국지부는 10일 오후 12시 대구에서 "4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정치적 살인과 20개국 이상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여전히 소제가 밝혀지지 않은 3만여명의 실종자가 존재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하였다.

대한변협 심포지움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창설 이래 5년동안 내린 판결과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평가하였다.

심포지움에서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6개월 이내의 판결을 '혼시규정'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판결을 연기시켜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소홀히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 등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판결에서 5:4로 위헌의견이 우세해도 6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위헌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합헌이 되고 마는 모순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인권운동연맹'은 오후 2시 YWCA 강당에서 '문민시대의 인권'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고, 정부에서는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윤관 대법원장,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이세중 대한변협 회장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홍남순 변호사 등에게 훈장을 주었다.

검찰, 헛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서울지검 공안2부 조현순 검사는 1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김 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의국어대생 배병성(21,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신모씨가 배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객관적이며 법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전의 징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에 대한 경찰수사는 변호인 접견이 목살되고 4일 동안의 불법감금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불법수사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씨 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증거가 없자 뒤늦게 나타난 다른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배씨를 구속기소한 사건"이라며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후, "뒷늦게 나타난 목격자마저 김 순경 폭행상황에 대한 진술조차 모순되는 부

분이 많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도 의문이 많다"며 배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12월 9일 각 일간지에 보도된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1·2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웅씨 사건의 예와 마찬가지로 경찰들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동조 내지 목인이 배씨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어, 20일 있을 선고공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진폐업투쟁 보고대회 11일 구리민방위교육장

지난 11월 9일 원진노동자와 회사간의 합의서 타결로 원진폐업에 따른 위로금 등이 부분적으로 타결된 후 관심을 모았던 '직업병 해결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이하 원진비대위)가 그동안의 사업을 정리하는 '93년 원진폐업투쟁보고대회'를 11일(토) 구리시 민방위교육장에서 갖는다.

원진비대위는 11월 9일 정부 및 회사와 합의 이후 폐업위로금 18개월치 지급 및 향후 발생될 직업병 환자에 대한 민사배상기금비 150억원을 출원받았다.

이에 원진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투쟁을 정리하면서, 이후 94년에는 재취업과 직업병 전담문제에 대한 2차 투쟁을 준비하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투쟁보고대회에 이어 새로 이전한 원진비대위 사무실 개소식도 갖는다. 사무실 이전일은 12월 11일(토)이고, 전화 0346-63-3645, 팩스번호는 0346-554-0356.

알림

- 양심수 가족 초청 좌담회/민청학련운동 계승사업회
· 11일(토) 오전 8시 국회 본관 2층 커피빈식당
· 초청자 : 제정구·유인태·손학규 의원등 소속의원 9명
· 참석자 : 안옥희(민가협 대표, 김종식 전 전대협위원장 어머니)씨 등 민가협 회원 40명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6돌 기념 심포지움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
· 일시 : 12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446-1237)
· 1부 : 심포지움/주제발표자 : 인명진 목사
· 2부 : 기념식 / 3부 : 출판기념회 등
- 고 이재식열사 추모제/마석모란공원
· 전노련 사무실(공평동 해송빌딩) 앞에서 10시 출발
- 고 조영래변호사 묘소방문/마석모란공원
· 일시 : 12일(일) 12시:00
· 오전 10시 30분 잠실 교통회관 앞 출발
- 고 김병공동지 묘소방문/마석모란공원
· 일시 : 12일(일) 오후 1시
· 오전 11시 동대문운동장 축구장 옆 출발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민가협(763-2606)
-양심수가 없는 나라
· 일시 : 12일(일) 오후 3시
· 장소 : 한양대학교 올림피아 체육관
· 출연 : 사회-문성근, 노래-정태준·박은옥, 안치환 등
· 특별출연 : 문익환, 이철, 김근태, 박원순, 김찬국 등
- 성폭력 위기센터 개실식/한국성폭력상담소
· 일시 : 13일(월) 오후 6시
· 장소 :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층 소강당

성명서

살인누명 경판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봉천동 청수장여관 이모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 동안 옥고를 치른 김기웅 순경(27세,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소속) 사건을 접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는 신분이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수사에 의하여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관행이 얼마나 비인권적이었는가를 밝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경시하여 확실치 않은 증거를 사실로 강압수사하여 범인으로 만드는 비인권적인 수사관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수사에 참여한 경찰과 책임자,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을 신청한 검찰과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
2. 영장을 허락하고 1심에서 12년을 선고하여 억울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의법처단되어야 한다.
3. 경찰, 검찰 및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는 이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순경은 인권적 측면에서 보상되어야 하며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1993년 12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개요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각국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였으며 국경을 넘어서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정간섭'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의 틀은 매우 새로운 것이다. 즉 그것은 유엔의 성장과 함께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획기적인 속도로 발전되었다.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과 그 조약화인 두개의 국제인권규약이다. 1948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유엔헌장이 정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가장 권위있는 문서이다. 이것은 '선언'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분명한 국제관습법으로서 국제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966년에 세계인권선언은 두개의 인권규약(Covenant)으로서 조약화되었다. 사회권을 규정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15개국 비준)과 자유권을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13개국 비준)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자유권규약(B규약)이 즉각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까닭에 선택의정서라는 조약(67개국 비준)이 다시 만들어졌다. 이것은 개인이 B규약상 권리를 침해당하고 국내에서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해결방법이 없을 경우 이 조약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이사회(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내정간섭'에서 관습법으로, 관습법에서 조약으로 짧은 기간 내에 숨가쁘게 발전되어온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역사에서 현재 진정 획기적인

사건은 개인 및 민간단체의 제소를 허용하면서 각국의 조약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앞에서 말한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7개나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A규약, 여성차별, 인종차별, 고문, 아동, 아프리카트헤이트 등 분야의 위원회).

이들 위원회는 제소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함으로써 인권침해국이 관련 국내법을 제정, 개정 혹은 폐지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끊임없이 조약의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간다.

이밖에도 조약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나 "중대하고도 계속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제소를 접수하는 '1503 절차', 유엔과는 별도로 독립된 전문기구인 ILO, UNESCO 등의 제소 절차가 인권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에 A·B 두개의 인권규약과 B규약 선택의정서에의 가입을 비준했으나 이 조약 내용에 걸맞은 국내법 정비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주위는 아직도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과 관행으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한국 인권운동은 세계인권선언과 그것을 토대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국내법에 계속 충격을 가해나가는 일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권관련 유엔기구

1. 유엔총회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래 총회는 많은 인권관련선언과 조약을 채택해왔다. 대부분의 인권관련 의제들은 제3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제사회이사의 멤버를 선출하고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의 권고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

총회가 선출하는 54개국 대표로 이루어진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총회 제출을 위한 조약 초안 마련,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 기금 지출, 총회 참석을 거

의 모두 승인한다. 그밖에 ILO, WHO 등 유엔전문기구와의 연락·협의를 담당한다.

3.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기능위원회. 53개 정부대표가 지역별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인권관련 연구, 국제조약 초안 마련을 하며, 인권사안의 조사와 연구를 하며 현존의 국제인권기준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국제인권기준을 권고한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인권보호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기술적·충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인권위원회 산하의 유일한 소위원회. 인권위원회가 세계의 여러지역에서 선출하는 4년 임기의 26명 위원들은 그들을 임명한 각각의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근무한다.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연차보고를 하고 소위원회의 주요한 결정은 인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지만 독자적 연구, 기준의 제시,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확인 등의 일을 하면서 대체로 자율적인 기관으로서 기능한다. 소위원회는 인권보호에의 새로운 접근을 주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어느 유엔기구보다도 새로운 발상을 가진 NGO에게는 접근이 쉬운 기관이다.

5. 여성의 지위위원회

1946년 설립, 4년 임기 32개 UN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다. 여성권리 증진에 대한 보고서와 권고, 긴급사안에 대한 권고 등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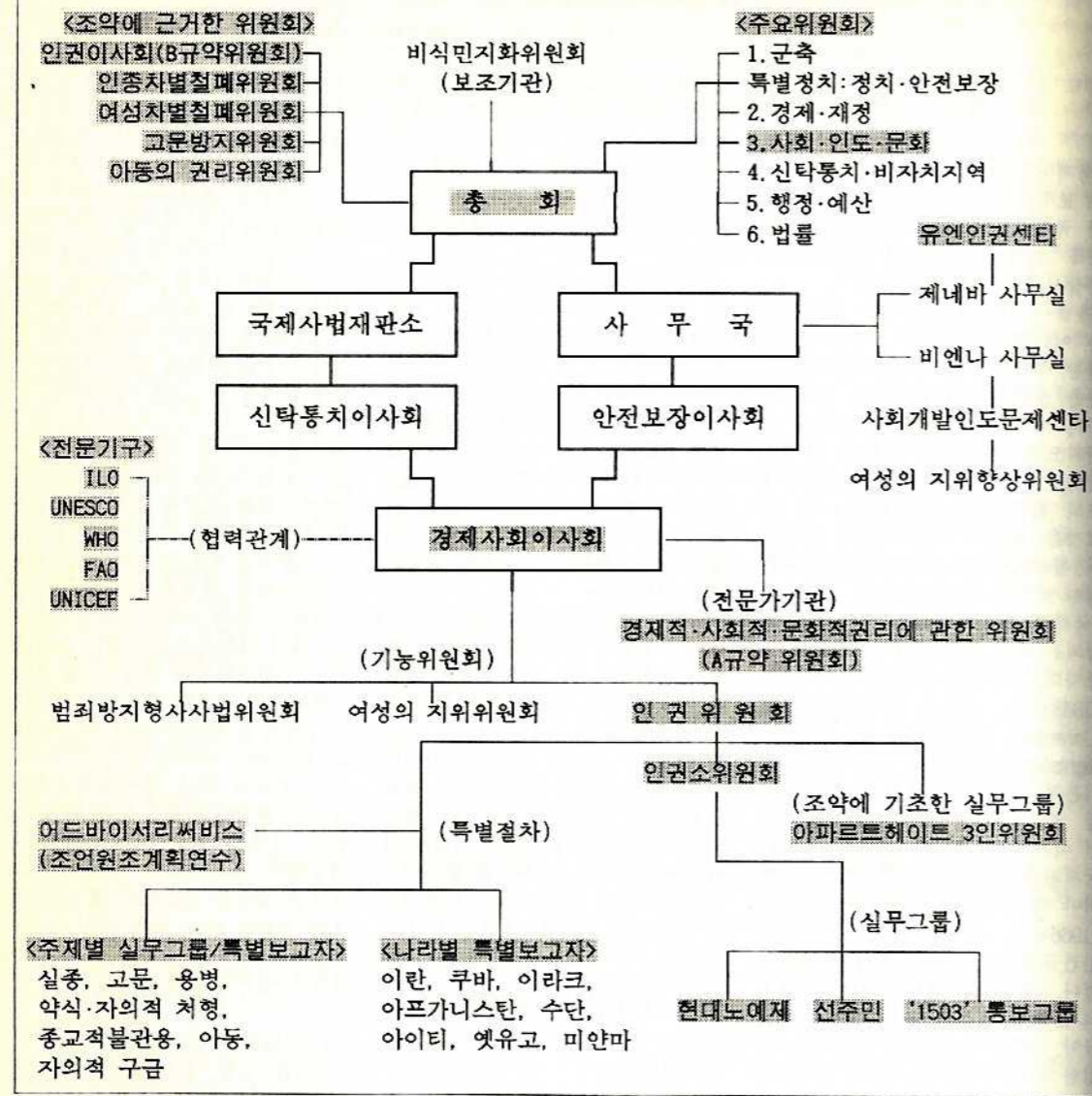
6. 조약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기관들

1) 인권이사회(The Human Rights Committee)

1977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8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4년 임기의 18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와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다. 위원회가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하여 인

UN 인권관련 기구표



권이사회는 B규약과 그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나라들의 조약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모든 당사국들은 규약에 인정된 권리가 자기 나라에서 보장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자기 나라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권이사회는 이를 검토한다. 또한 B규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제소(이 절차는 '통보(communications)'로 알려져 있다)해오는 개인들의 사안을 심사하는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다.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1985년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인권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18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즉 이 규약에 정해진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과 그 진전상황에 관한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경제 사회이사회가 당사국들에 대하여 하는 감독기능(권고 내지 제안)을 보조한다.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82년,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폐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4) 고문방지위원회

1987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와 형벌 금지협약' 제17조에 따라 설립되어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조사하고 당사국 영역내에서 고문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근거있는 징후와 관련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한 비밀조사도 한다.

5)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70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 4년 임기 18명의 전문가로 구성.

개별 국가 보고서 검토, 제안과 일반적 권고 및 당사국 분쟁해결을 위해 통고 심의한다.

7. 유엔인권센터

인권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유엔 사무국의 한부분. 인권담당 사무부총장과 모든 인권기구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책임을 진 45명 이상의 상근 전문가가 근무한다.

조약에 근거해서 설치된 대부분의 위원회와 기타 유엔기구가 인권문제를 다룰 때 상근전문가들의 실무력을 지원한다. 즉 관련기구의 요구에 따라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인권 실현을 위한 보고서를 마련한다. 또한 인권관련 NGO(비정부기구)나 외부기관 그리고 보도매체의 의견을 담당한다.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출판도 한다.

주요 제소절차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의 통보절차

B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내에서 B규약에 정해진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 그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B규약 선택의정서가 1990년 7월 10일부터 발효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을 통보하게 되나, 인권침해가 그 이전에 일어났다고 해도 침해상태가 발효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보가 허용된다. 또한 당사국이 의정서를 비준할 때 유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허용되지 않는다(우리나라는 14조 5항의 상소 및 재심청구권, 제14조 7항의 이중 처벌금지, 제22조의 결사의 자유 등 3가지만을 유보하고 있다).

통보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 허용된다.

①의정서의 당사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실명의 개인일 것 ②B규약에 열거된 권리를 당사국에 의해 침해 받은 피해자임을 입증할 것 ③통보 제출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 ④같은 문제가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있지 않을 것 ⑤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쳤을 것.

통보언어는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

되 자국어어도 가능하다.

통보허용이 결정되면 그 결정은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통지된다. 당사국은 6개월내에 통보된 사건에 관한 정보 내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며, 그리고 통보자와 당사국은 일정기간 서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가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는 문서상에 대한 정보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권침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회의 견해 및 구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보낸다. 이 사회의 결정은 당사국 정부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인권침해를 국제적으로 공개, 확인하고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압력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보는 제네바에 있는 인권이사회로 하면 된다.

2. 1503절차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에서 경제사회이사회 1503호 결의(1970년)에 따라 진행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침해와 관련된 통보를 다루는 절차"가 '1503절차'이다.

이 절차는 "지속적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개인이나 그룹 또는 단체에 의한 통보(Communication)가 있을 때 시작된다.

1503절차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이 확인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한 보호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인권침해국을 상대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의 수리여부에 대한 통지 외에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통보자는 진행 경과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통보가 일단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인권위원회 심의에 회부되면 당사국의 이름이 인권위원회 연차보고에 공개되기 때문에 인권침해국은 국제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통보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센터로 하면 된다.

3. ILO(국제노동기구)

1919년 설립된 ILO 절차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구조중 가장 효율적이고 철저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기본권 문제를 비롯해 아동노동, 빈곤층 문제, 산업보건,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광범한 문제에 관해서도 별도의 조약과 권고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제소절차는 4가지로 나뉜다. ①진정(Representation) ②제소(Complaint) ③고용의 차별에 관한 특별조사 ④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진정은 특정조약을 가입한 정부가 이로 위배할 때 사용자나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단체이며, 노조는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단위를 제한이 없으며, 피해당사자가 아니어도 된다.

제소는 가맹국 정부가 비준한 조약 위배에 대해 제기되는 점은 '진정'과 같지만, 제기당사자가 가맹국 정부, 국제노동회의의 대표 및 집행기구로 제한된다.

고용과 차별에 관한 특별조사절차는 아직 이용된 바가 없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절차는 노동자단체도 인권침해를 제소하여 심리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정부가 특정한 정부의 비준과 관계없이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4. 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 및 정보분야에서 유네스코의 권한에 포함되는 인권침해에 관한 개인의 통보를 심사하는 절차'가 있다.

유네스코가 심사할 수 있는 인권침해는 교육의 권리, 과학적 진보를 공유할 권리, 양심·표현·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정보의 권리, 과학·문화·예술적 생산에서 나오는 도덕·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과학·문화 및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집회 및 결사의 권리 등이다.

통보는 권리침해 피해자는 물론 그 침해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 혹은 민간단체 등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밖에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통보절차, 여성의 지위위원회의 통보절차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제공은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등 고소

11월 26일 방양균씨(서경원의원 방북사건) 안종택 담당검사도 고소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3일 '서경원의원 방북사건'과 관련,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방양균씨(전 서경원의원 비서관, 38세)가 수사당시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과 담당검사를 직접 고소했다고 밝혔다. 방양균씨는 지난 11월 26일 안기부 수사관인 김군성

씨의 3인과 담당검사 안종택씨(현 인천지검 공안부장 검사)를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방씨는 1989년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안기부에 구속된 후 50여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김군성씨 등으로부터 잠안제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받았으며, 현 재 고문후유증을 앓고 있는

며, 재판 당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서울대병원측이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었다.

김삼석씨 고문 고발인 조사 13일, 서울지검에서

지난 10월 20일 안기부에서 간첩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삼석씨와 김은주씨가 성고문을 당했다며, 김씨의 부인 윤미향씨가 서울지검에 정맹교씨 등 수사담당 안기부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13일 서울지검 형사5부 윤석정 부장검사의 고발인조사가 있었다.

'장애인 복지정책' 심포지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는 지난 11일 정담회관에서 2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움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2면 참조).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발표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인명진 지도위원의 발제와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 인명진 위원은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의 몫"이라고 강조하고 행정쇄신을 위한 많은 작업들이 기대된 세력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불교법률상담소 개설 부산불교인권위

'부산불교인권위원회'(상임대표 정각)가 13일 불교법률상담소를 열었다.

지난 6월 11일 '부산불교인권위' 주최로 열린 "불교시민운동과 시민운동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불교법률상담소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 꾸준히 준비해온 끝에 13일 오후 7시 부산불교자비원에서 개소식을 가지게 되었다.

법률상담은 조우래(상당소장) 변호사 등 8명이고, 상담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월요일에는 상담번호가 차별로 상담에 응한다.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대상으로 하고 상담비용은 무료이다(전화 051-466-1680 팩스 051-441-2749).

'원진노동자 후원회' 결성 13일 일본

지난 10월 일본 노동자들이 원진비대위를 방문하고, 원진폐업투쟁을 돌아본 후 일본에 돌아가 원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노동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후원회를 결성하고, 결성집회를 13일 개최하였다.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회장 안옥희) 주최로 12일 오후 3시 한양대 율리피 체육관에서 문익환 목사, 리영희 교수 등 6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다짐하는 등 열기 속에 열렸다.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형생활을 한 경험에 있는 박형규 목사, 유성환 민자당 의원 등이 박원순 변호사와 박철민씨(극단 현장)의 사회로 자신들이 겪은 수형생활과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토론했다. 문성근씨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양심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안학집(간첩죄, 무기징역, 대전교도소 수감)씨가 어떻게 '간첩'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며 분단으로부터 양심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문익환 목사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사 등에서 과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양심수들이 노력이 문민정부 탄생의 밑거름이었다고 하면서도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거짓말쟁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성폭력위기센터' 문열어 성폭력상담소

하루 24시간 성폭력피해 상담을 받아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성폭력위기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13일 오후 6시 기독교연합회관 4층 소강당에서 '성폭력위기센터' 개설식을 갖고 오늘부터 24시간 활동에 들어갔다.

김금자(산부인과 전문의)씨 등이 자문위원으로, 상담자와 함께 65명의 지킴이들이 피해자와 상담원·병원 경찰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전화 529-4273).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복지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결된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구과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 장애인복지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개선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중략)

가. 소득보장 *95년도부터 장애인의 재산과 월 소득수준을 일반인보다 높게 책정하는 생활보호 선정기준을 완화시켜 시행 *점차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 *자립자금 융자대상 및 금액을 현재 400명, 500만원에서 97년도 1,500명, 95년부터 60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복지수당제도 규정을 97년도까지 마련 *취업에 제약이 되는 위생사용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8개 제약법령 중 32개 법령을 현재 개정완료했으며, 95년도까지 나머지 법령도 개선.

1. 행정쇄신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 내용 검토

1)정책대상 정책대상으로 장애인의 범주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만 인정한 것을 공주, 난장이, 자폐증, 신부전증 등 정서발달, 내부장애 등을 포함하여 1994년 상반기부터 확대시키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은 예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정기검사 및 상담, 장애인의 재발견을 위한 영·유아 부모들까지 포함한 정책대상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포괄성의 문제가 있다.

◆ 공 판 안 내 ◆

- 12월 14일(화)
 - 박찬종, 원진집회관련,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 김주옥,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2회
 - 오형철,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425호, 2회
 - 고대성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 이동익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 권혁명, 국보법, 15:30, 서울지법 311호, 1회
- 12월 15일(수)
 - 정형근,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1호, 2회
 - 김옥기, 국보법, 11시, 서울지법 413호, 속행
 - 임경택, 원진집회관련, 2시, 서울지법 318호, 속행
- 12월 16일(목)
 - 캐네스 마를, 살인, 2시, 서울고법 417호, 선고
 - 박동수, 국보법, 15:30, 서울지법 422호, 속행
- 12월 17일(금)
 - 김삼석,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1호, 1회

2)서비스내용 사회참여 지원, 취업기회 확대, 교육기회 확대방안의 3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사회복지의 주요 부문 체계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보장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에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득보장 *95년도부터 장애인의 재산과 월 소득수준을 일반인보다 높게 책정하는 생활보호 선정기준을 완화시켜 시행 *점차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 *자립자금 융자대상 및 금액을 현재 400명, 500만원에서 97년도 1,500명, 95년부터 60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복지수당제도 규정을 97년도까지 마련 *취업에 제약이 되는 위생사용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8개 제약법령 중 32개 법령을 현재 개정완료했으며, 95년도까지 나머지 법령도 개선.

위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자립자금 융자와 법령개선을 제외하고는 구태의연한 선연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 선정기준이 교육비 지원 수준, 장애인 복지수당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매점 등 설치에 우선권 부여나 장애인제작품 우선 구매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구체적인 생업지원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절성(타당성)과 실현의지가 낮다고 하겠다.

나. 의료보장

*94년 이후 재활 의료비를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포함 *요양급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 *보장구 우량 생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용자알선(재복), 사업소득세 감면, 보장구 부품수입 등 면세 등의 방안을 시행 * 94년도 상반기에 보장구 개설 및 제조기술자 양성근거가 될 법규를 마

련 *장애인복지법 제23조(보장구 교부)에 지원, 권장 근거를 94년 상반기에 마련 *95년 상반기에는 가정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 재활공학연구소 설치를 삽입하고, 과학기술진흥법에 재활공학연구소도 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명시 *보장구 지급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97년까지 확대 *의료법에 재활의학과를 94년 상반기에 삽입 *97년까지 보건소에 재활의료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재활요원을 배치.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재활의료비를 포함시킨 것이나 급여기간을 연중내내 받도록 하거나,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의료법에 재활의학과 삽입 등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계획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보장구 지급의 확대나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재활요원의 배치 등은 9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장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 고용보장

*94년부터 장애인고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연 1회 국무회의에 정기 보고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을 삽입하며, '장애인고용추진주간' 근거를 고용촉진법에 마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고용촉진법 시행령에 '2배수 고용제', '보조고용제'를 신설하고, 특정장애인 '우선고용제'를 확대 *현행 3개 직업훈련원을 97년까지 주요지역에 5개소를 신설, 기존 민간훈련기관에 시설·장비 및 훈련비용을 지원 *취업알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97년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를 15개소 설치, 주요 지방노동관서 20개소에 전문직원 2명을 배치.

정부가 앞장서서 내년부터 당장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의 고용실적을 조사하거나 고용추진주간을 마련하였다는 계획은 민간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취업알선체계 구축이나 직업훈련원 신설 등은 양적인 시설구축과 함께 질적인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함에 급이 없어 아쉬우며, 장애인고용촉진 지원 확대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

지 않아 장애인취업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실현 가능성과 정책실현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교육보장

*도심지 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교 병설(10개교) 모형개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설을 활용한 특수학교(9개교) 신설, 시·도에 특수학교(14개교) 신설, 장애인복지관 수용시설의 공간활용을 통한 분교장(113개소) 설치, 특수학급 증설 등을 통한 장애아동 교육기회를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97년까지 고등부 졸업후의 직업교육 심화과정(1-2년) 설치운영과 지역별 장애별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조기특수교육기관의 제도화를 위하여 특수유치원을 확대, 전국 84개소 미등특강습소 중 일정요건을 갖춘 유치원 및 교습소를 97년까지 인가와 등록을 하게 함 *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통합교육 여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유치원, 중등학교 교사 양성대학을 97년까지 마련 *97년까지 특수학교 특수시설 설비확충 지원 및 특수교육 담당조직의 보강으로서 교육부에 과단위 조직을 설치,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장학관을 배치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유인책으로서 특수교육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간의 호봉격차를 97년까지 해소 *93년에 국립특수교육원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 *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계획의 대다수를 97년까지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실현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제시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최종안의 내용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마. 주택보장

장애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은 94년중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행 5집에서 10집으로 가산점을 확대해 주겠다는 것 뿐이며, 장애인 주택공급이나 주택개조 등에 대한 보조나 감세 및 비과세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빈약하다고 하겠다.

바. 대인적 사회서비스 보장

*요양시설(50개소), 재활의료센터(10개소), 이용시설 등(9개소)을 97년까지 신·증설 *장애유료복지시설 설치근거를 94년 상반기에 법에 반영 *시설이전 및 용지확보대책으로서

97년까지 학교의 유유시설 활용방안을 강구 *94년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1종 운전면허허용과 청력기준을 완화 *중증장애인(1-3급) 대리운전 차량까지 면제 범위를 95년까지 확대 *97년까지 장애인 보호 등 문구삽입과 정보통신기금 현대화 사업에 장애인 분야도 포함 *94년중에 국정교과서에 '장애인복지' 단원 설정과 학교, 각급 연구과정에 장애인복지 교양과목을 개설, 장애인을 위한 방송과 수화 및 자막방송을 공보처에서 적극 각 방송사에 권장 *장애인단체(임의단체 제외)의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을 94년중에 마련.

내년중에 장애유료복지시설 설치근거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과 1종 운전면허허용과 청력기준의 완화, 국정교과서에 '장애인복지' 단원 설정, 연구과정에 '장애인복지' 교양과목 개설, 수화 및 자막방송의 권장 등은 장애인이 가진 대인적 사회서비스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복지시설 신·증설과 시설이전 및 용지확보 대책, 정보통신 등 예산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을 보여준다.

3)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민간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97년까지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과 유료복지시설 신설 이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장애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사부에 통괄적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국'이 신설되어야 하며, 앞으로 '복지사무소'가 만들어질 때 장애인복지가 중요한 분야로 포함되어야 한다.

4) 재원

97년까지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현재의 7.5%에서 1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예산확보방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검토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장애인복지에 단계적으로 확대 배정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재원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현의지는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점은 계획안에서 밝혔듯이 예산사업은 단계별 계획을 세

워 추진하되 일반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세 신설이나 기존의 목적세를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정도로 그치며, 법령·제도 개선 등 비예산사업을 우선 추진하였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2. 정책안의 개선방안

1) 장애의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대한 정책 관심제고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전국민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며, 예방을 위한 환경정비시스템을 확립해가야 한다.

2) 장애인복지서비스 최저기준 설정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급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것이 서비스 급부의 내용과 종류에 따른 표준화 작업이다. 소위 서비스 급부에서의 최저기준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급부수준의 결정이라고 하는 작용과 함께 표준화된 서비스급부의 그 이하만은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구성요건의 규정으로서도 작용하는 것이다.

3)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장애인복지 관계 정부부서간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보사부내 '장애인복지국'의 신설이 요구되며, 서비스 전달의 제일선기구로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다양한 장애인복지 참여주체의 의견수렴 통로로서의 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설정이 명료화되어야 한다.

4)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체예산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현 GNP 1%인 복지예산이 2%로 확대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5)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개선

국가의 확고한 책임이 의무조항으로서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관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많은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편의주의에 좌우되지 않고 공개적인 입법에 의해 엄수되도록 한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14일 국방부 앞에서 양군모회원 등 500여명 국방부 결단 촉구

14일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 김재열목사 등)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회원, 가족,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를 위한 총리약속 이행과 국방부 결단 촉구대회'를 가졌다.

송실대 노래패의 식전 문화행사에 이어 서준식 전 국연합 인권위원장의 격려사, 김정훈 양군모 대표의 인사말, 정진호 양군모 회원의 경과보고 등이 있었다. 이어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낭독한 후 양군모 회원 어머니 2명과 회원 3명이 장관면담

을 요청하는 가운데 다른 회원들은 민원실까지 인간띠잇기를 가지고 국방부의 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대책위원회는 국방부에 제출한 촉구문에서 “양심수의 부당징집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정산과 국민화합의 문제로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대학 총장들도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방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또 건의서에서 “500여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지혜와 정열이 과거문제에 얽매어 소진되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새해에는 보다 건설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민정부

의 국방부다운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현재 국방부측과 양군모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병역법 시행령 103조이며, 현재의 시행령은 공안합수부가 발족되던 날 개정된 것이다. 양군모는 그 이전으로 환원을 바라고 있다 (아래 표 참조).

김삼석 남매 구원회 결성 10일 일본 동경

지난 10일 일본 동경 도시마구민센터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구원하는 회'를 결성하였다. 구원회 대표는 마쯔이 시

게끼번호사이며, 94년 1월에 오오사카에서도 구원회가 결성될 예정이다.

오늘 '빈곤과 장애' 토론회 15일, 장애인 실태조사에 앞서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회장 최종걸, 이하 연구회)는 오늘(수) 오후 4시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1층 강당에서 '빈곤과 장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회에서 실시할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실태조사'를 앞두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 빈곤장애인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활동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다.

조홍식(서울대)·이익섭(연세대) 교수가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책', '장애인의 빈곤과 대충화'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이해'를 각각 발제한다.

알림

- 월간 '함께걸음' 12월호/ 장애인권문제연구소
 - 주요내용 : 행정체신위원회,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발표/세계와 함께하는 노르웨이 장애인우울/특집-못다 부른 해방의 노래, 시인 정희수 지다/박용수의 이어가기 글(<3>, 정희수의 뜻사랑) 등
-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심포지움 자료집)/장애인권문제연구소
 - 내용 :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방안(인명진, 행정체신위원회 지도위원)/장애인의 사회참여방안(권도용 한신대 교수)/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방안(박석은 대구대 교수)/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방안(윤정용 교수)/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조홍식 서울대 교수)
- 운동본부소식(참간준비호)/'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주요내용:운동본부 소개/재판중계(김국혜씨 폭행사건)/최근의 미군범죄(김경실씨 폭행사건 등 2건)/운동본부 동향/회원단체 소식 등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소식1호
 - 주요내용:문국진씨 근황/고문후유증 사례(1)/최영미씨 -안기부에서의 11시간, 12년간의 고문후유증 등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한상범 동국대 교수(불교인권위 공동대표)

편집자주 : 12월 10일 열린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3주년 토론회 주제발표입니다.

1. 군사독재하에서 일상화된 인권침해의 악습과 폐습 청산과제(생략)
2.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 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정비

박정희 등의 쿠데타 이래 군인집권의 시기는 32년이란 오랜 세월이었다. 따라서 장기간 일반대중까지도 그러한 분위기가 익숙하도록 길들여져 왔기에 제도와 악습, 폐습의 시정엔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무기력증에 빠진 채 살아왔기 때문에 '인권'이란 말만 들어도 겁을 낸다. 군정하에서 '인권'이란 말은 반정부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나 집단은 조만간 감옥으로 가거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근처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을까봐 기겁을 해도 많았다. 지금도 그러한 '인권컴플렉스'는 있다. 그래서 자기들 주변의 잘못된 법령과 제도 및 악습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볼 마음의 여유가 아직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정상적 인식의 회복부터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인권침해의 법률적 근거가 되어 온 악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당장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사립학교법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 개정하고 원래의 설치목적과 다르게 잘못 운영되어 오는 제도와 기구를 철저히 점검해 폐지를 하고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악법과 제도 및 기구에 근거를 두고 인권탄압을 계획, 지시, 명령하고 그 하수인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이런 것조차 과거사 운운하며 흘려버리겠다고 하는 자는 반역주모자를 비롯해 고문경관이나 언론정비의 주모자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라는 점을 똑바로 인식해서 대처해야 한다. 문민정부가 해야 할 일차적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중략)

(2) 군사독재하의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문제의 시급한 해결

오랜 군사통치는 탄압의 희생자들을 무수하게 양산해 내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망그러지고 사회적으로 생매장되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딱한 처지를 호소할 곳이 없다. '군정피해자의 고정수리조사위원회'(가칭)라고 하는 기구라도 반드시 만들어야만 군사통치의 피해자의 문제점이 조사·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해야 할 국가가 정치공세로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마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군인의 포악한 인권유린과 참사에 그 책임자는 쑥 빠진 채 돈으로 끝내는 '보상'조치로 대응함으로써 모든 부담을 국고가 부담, 결국은 군사파시즘의 엄청난 피해대가를 국민 스스로가 몸으로 때우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세금만을 탕진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가해자는 단 한푼도 배상하거나 단 한가지 사죄나 책임을 지는 일도 없는 채 지나고 있다. 이례서는 문민정부의 인권보장이란 국책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속이 타서 울화병으로 서서히 시들어 자기 목숨을 단축시키고 있는 군사파시즘의 무수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그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한가지 예로 삼청교육의 구상, 시행·지휘나 현장집행을 한 주요책임자 중의 한사람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용납되고 있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법원에 구제라도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면 일년이고 삼년이고 세월은 가고 피해자는 법원문턱을 드나들다가 좌절하고 지쳐서 마침내 포기하거나 화병으로 죽어가게 된다. 고문경관의 표본인 고문기술자 이근안도 검거를 못하고 있다. 고문피해자도 그 고문의 가해성이 입증되면 긴급대와 같이 몇년을 두고 모든 희생과 수모를 감수하면서 법원 문턱을 드나들어야 한다. 이래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중략)

(3) 인권보장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관료주의의 서식처를 제거해야

인권문제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관리(공직자)가 시민대중에 공권력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입법과정(행정)과 법 적용(재판)이 법이 정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말할 것도 없이 행정관료의 법집행이다. (중략)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체제는 공중분해의 와해 일보직전의 위기 속에서 자기 부처 관할구역의 폐쇄적 이기주의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정부나 사회의 각 분야의 리더쉽과 상하 횡적 협조체제가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중략) 세무관서의 부정공무원들 수사 체포하려고 하자 그 세무관서의 책임자 한 사람만 남고 모두가 도망을 간 사실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략) 다음에 인권과 관련해서 관료주의의 폐습을 보면 비단 행정관료기구만이 아니라 사기업이나 모든 공공기관이 자기 고유권한을 최대한의 이권으로 악용 내치 남용하여 자체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혐의를 쓰고 수사기관에 연행 구금되거나 교도소에 갇히거나 행정기관에 부탁할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당사자는 인질이 되어서 무방비상태에서 그야말로 '깎떼기'를 벗겨버리게 되는 지경까지 불편을 겪고 돈을 쓰고 모욕과 천대를 받고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중략) 이러한 살벌하고 거칠기 짝이 없이 없으며 원칙이 무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붙일 수 있는가. 특히 관료의 무서운 횡포앞에 무방비상태인 이름없는 시정의 대중은 당장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략)

인권의 보장제도도 이러한 정치 사회분위기에서는 지엽말초적인 논의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되어 있다. (중략) 물론 이 문제는 국민대중이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와 청문절차의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 대중이 관료와 당국자에게 이리저리하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투쟁으로 관철하는 것이 궁극적 대안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3. 당장 풀어야 할 인권문제들(생략)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장애인에 대한 초·중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설치 등 교육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를 통과하고 17일 국회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국·중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삽입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평가하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시·도별로 두어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장애인 교육권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만3세부터 6세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의무교육화는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인교육을 위해 한발 나아갔으나, 이를 실질적·내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군·구까지 확대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심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장애인복지

위한 공대위」 등 관련단체들은 조기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1만5천여명이며 소수예산에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부측은 대상아동의 수를 4만6천여명, 소요예산을 5천3백억원으로 잡아 양측간에 대상아동수와 예산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장애아동의 장애정도 및 지역별로 단계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애초 민주당과 장애인 관련단체는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치료해, 통합교육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의무교육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인 교육에 소홀했던 우리사회가 그동안의 사회발전에 불구하고 17년만에야 특수교육진흥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현실로 부딪힌 '돈' 문제는 장애인 복지를 누가 담당해야 하고 장애인의 권리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조기특수교육 시책 강구 *정기

국회에 매년 조기교육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 *과거의 시각장애자나 언어장애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아동과 학습장애아동 등 특수교육대상자로 새로 포함하여 법적 보호대상 확대 *통합교육과 순회교육 명시 *장애인의 부모가 원할 경우 교육과 치료, 직업 등에 대한 부모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등을 신설하여 과거의 장애인 교육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민정련 회원도 연행
 광주지부 회원들 16명

전남 지방경찰청은 민중정치연합(민정련) 광주지부 사무실(운암동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명장과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아

심우춘씨(광주지부 사무국장) 등 16명을 15일 오전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엄기출씨(민정련 광주전남협의회 사무처장) 등 6명은 오전 7시 30분 각자의 집에서 연행하였으며, 심우춘씨, 박강대씨(광주지부 연대사업부장) 등 10명은 오전 9시에 컴퓨터강좌가 진행중이던 사무실에 3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수강생들까지 모두 연행하고 컴퓨터 4대, 책자, 유인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95년 사회주의노동당 건설을 목표로 '사노맹 호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노맹 재건을 기도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등)를 두고 있다.

현재 연행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이 구속된 바 있어 정치활동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민정련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대협 제100회 「수요시위」

함께할 단체 및 개인을 찾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92년 1월 8일부터 매주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개해온 「수요시위」가 12월 22일로 100회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수요시위」는 정대협 회원단체와 여러 사회단체, 정신대피해자 할머니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번 100회 시위에 여러 단체 및 개인의 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가여부와 참가자 수를 12월 17일 오전까지 연락바랍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전화 : 763-9633)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생략>

제4조(특수교육심사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임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무교육등) ①특수교육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비·직업전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 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정신지체 4.지체부자유 5.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언어장애 7.취학장애 8.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한다.

③심사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③ ④ ⑤ <생략>

제12조(취학편의등) <생략>

제13조(차별의 금지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할 것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중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순회교육등) 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15조(통합교육) ①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자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치료 및 직업 등에 대한 보호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치료교육등)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생략>

제20조(직업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전공과의 설치) 제22조(진로교육) <생략>

제23조(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 24조(장학금지급등) 25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26조(재심청구) <생략>

제27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과 그 배치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0조(벌칙)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1조(벌칙)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2조(벌칙)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점점합니다: 14일자 제67호 1면 '방양군씨 안기부 수사관 고발' 기사중 "지난 11월 26일 안기부 수사관인 김군성씨의 3인파 담당검사 안종택씨... 고소했다."는 "11월 27일" "김군성씨와"로 확인되었기에 정정합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윤금이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 고법 형사5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금이씨 살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네스 마클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이 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을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며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나 정황을 볼 때 안전과

머리를 병으로 가격한 것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고, 또한 살인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죄 인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것은 죽음이 예견되거나 추측되므로 살인죄 적용에 무리가 없으며, 윤금이씨가 행패를 부려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하는 부분 역시 당시 정황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항문에 우산대를 박고 은몸에 세제를 뿌리는 등의 난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피고의 신빙에 묻은 세계가 당시의 세계와 동일하므로 피고의 난행이 인정된다며 항소이유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며, 즉 미군당국이 피고자

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한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15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심보다 형량을 적게 선고하자 방청객들은 재판부에 항의를 하며 퇴정하는 마클 이병에게 고함과 야유를 보내기도 하였다.

방청객들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항의집회를 가진 후 검찰청 앞에서도 검찰이 즉각 상고하고 구속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판결에 대한 성명서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보다 낮게 선고한 것

은 엄중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내국인의 경우와 다른 판결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케네스 마클은 지난 해 10월 27일 윤금이씨를 처참하게 살해하여 동두천 시민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나, 검찰은 한미행정협정을 이유로 구속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내 교도소에 수감할 수 없다.

PC 통신 최초로 기소 김형렬씨 국보법 위반으로

15일 검찰은 pc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등에서 나온 유인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김형렬(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구속·기소하였다.

김씨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94년은 양심수가 없는 나라로!!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매일집회
오늘부터 23일까지, 탑골공원 앞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모든 양심수를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특히 43년째 수감중인 김선명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장기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다음주까지 매일 가질 예정이다.

17일(금) - 18일(토) 12시
20일(월) - 23일(목) 오후 2시

정대협 제100회 「수요시위」

함께할 단체 및 개인을 찾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92년 1월 8일부터 매주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개해온 「수요시위」가 12월 22일로 100회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수요시위」는 정대협 회원단체와 여러 사회단체, 정신대피해자 할머니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번 100회 시위에 여러 단체 및 개인의 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가여부와 참가자 수를 12월 17일 오전까지 연락바랍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전화 : 763-9633)

단체탐방·7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80년대 랍보시리즈를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을까? 도대체 랍보는 잠도 안자고 먹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저리도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랍보에 대한 의문은 이땅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미군은 사람을 죽이고도 구속도 안되고 처벌도 안받으면서 어떻게 이땅에 계속 붙어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45년 미군주둔 이후 매년 2,200여건의 미군범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지만 고작 0.7%만이 우리 법정에 올랐을 뿐이다. 살인범 미군은 그냥 본국으로 송환되면 그만이고, 우리 민족의 피해자는 배상도 제대로 못받고 큰소리도 낼 수 없었다.

1년전 주한미군이 한 한국여인을 자궁에 칼자랑을 박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아넣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윤·금·이! 동두천시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집회가 벌어지고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충격, 그리고 지난 50여년간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반성으로 이땅은 슬럼이기 시작했다. 동두천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된 운동은 규탄집회, 서명운동, 항의방문, 재판감시 등의 활동속에서 여러 단체를 묶어내게 되었고, 10개월여간의 활동과정에서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설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모아 93년 10월 26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된다.

성격이 다른 다양한 단체를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한 목소리'를 내왔고, 이집이 운동본부로 전환하는데 큰힘이 되었다는 것이 윤금이공대위에 대한 평가이며, 공대위로 끝나지 않고 상설적 조직으로 발전했다는 점, 실제 지역에 뿌리를 둔 공대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반미운동의 대중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데 긍지를 느끼고 있다.

운동본부는 현재 다비타의 집, 두레방, 동두천민주시민회 등 23개 단체와 6개 참관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기독교회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상근간사 2인이 활동하고 있다. 운동본부의 사업은 각 위원회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위원회에는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의 이름에서

우리누이, 윤금이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민족의 자존을 다시 찾는 작은 불씨

나타나듯 미군범죄사태를 접수하고, 엄중처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한미행정협정 등 한미간의 불평등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 기타 미군주둔으로 파생되는 피해를 없애나가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이루는 것이 운동본부의 소명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과제는 윤금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는 것, 우선 미군의 횡포와 피해사태를 조사·연구하는 것이다. 중앙에 전문조사역량을 확보하고 미군주둔지역과의 연계속에서 실질조사를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6개지역(미군부대 주둔지역을 중심으로)에 미군범죄신고센터를 설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간 일속에서 겪은 어려움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다음과 같다. 미군도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런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 구속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증거확보를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범인은 으레 당당하게 범행부분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건진상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당당하기만한 미군의 모습

은 내국인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광경과는 아주 다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금이씨 살해미군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고 있으며, 1심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15년으로 감형되어 사건의 잔악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리고 미군범죄는 여전히 이땅 이곳저곳을 들쭉시고 상처

를 단속할 우선적 책임을 지닌 미국이 끼고 있는 팔짱을 풀기 위하여, 그리고 자주적이지 못한 한국정부의 태도가 민족적 자존심에 더이상 찬물을 끼얹지 못하도록 더 많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운동본부의 사람들은 서울역에서 지난 12월에서 4월까지 서명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모습에서 받았던 감동을 잊지 못한다. 글씨는 모르지만 이 서명은 꼭 해야만 하겠다고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대신 써달라고 하던 분들, 오천원짜리 한장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성금은 꼭 내야겠다고 오천원을 내놓고 차비만 받아서 가시던 아주머니, 길숙한 주머니에서 퍽퍽 찢은 찜치돈을 내놓으시던 할아버지, 아무리 말려도 구질한 돈을 계속 가져와서 통속에 부던 거지 등 잊지 못할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감동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매개물을 찾아내고 현재 진행중인 미군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를 해내는 것이 운동본부의 힘찬 출발점이다.

<인권운동 사항방/류은숙>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전화:744-1211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엮서보내기 운동 지난 6월 17일부터 12월 8일 현재까지 1만5천명이 참여하였다. 다음은 엮서내용이다.

클린턴 대통령 귀하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매년 2,000여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27일 동두천에서 윤금이(여, 27세)씨가 끔찍하게 살해되었고, 또한 금년 5월 29일에도 김국혜(여, 51세)씨가 미군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이 될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 최고통수권자인 귀하가 주한미군범죄의 근본원인인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포함한 범죄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귀하에게 엮서를 보낼 것입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목인

김삼석·김은주씨 남매의 첫 공판이 17일 2시 서울형사지법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안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예속적인 파쇼군사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권의 물리적 기반인 군대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목적으로 군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 내부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청년과 군대'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 대학생 등을 선동하였으며, 운동권내 자신의 취약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방위사업청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 이좌영 등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지령 및 자금을 수수하였다"라고 공소요지를 읽었다.

인 심각한 군사적 대처상태를 은밀으로 알리기 위해 쓰여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백서와 주요 일간지·월간지 등을 취합한 자료집에 불과하며, '국방백서'는 영역되어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으므로 정권의 물리적 기반인 군대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목적으로 내세워 군 내부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청년과 군대'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 대학생 등을 선동하였으며, 운동권내 자신의 취약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방위사업청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 이좌영 등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지령 및 자금을 수수하였다"라고 공소요지를 읽었다.

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은주씨 또한 검거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안기부가 합정수사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씨는 이어 안기부 수사관에게 "다른 방으로 옮겨 오라 벗겨야 되겠지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볼래"라는 협박과 성적 모욕을 당하였고, 남매간의 정을 이용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오빠를 더 가혹하게 다루겠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각본대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폭로했다(2면 참조). 김씨 남매의 폭로가 이어 박과 구타, 잠안제우기, 성고문 등을 폭로하였으며, 검찰 또한 폭언과 강압으로 수사를 하면서 목비권

사노맹 관련 민정권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수사초기 가족면회 소재 확인 거부 여전

김삼석씨는 "문민시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급히 발표된 안기부의 불법, 조작된 작품"이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런 대응여지도 때문에 국가기밀누설죄로 옥사한 김정호의 예를 들면서 "청년과 군대"는 이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분단의 첩병으로 내몰린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80만 대군의 축소판의 하나이며, 세계에 한반도의 냉전과 반평화적

전남 경찰청은 17일 민중정치연합 회원 등 13명을 사노맹 재건기도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또는 찬양고무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다 16명을 영장 청구했다. 한편 민정권 광주지부 비상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15일 오전 10시 민정권 사무실에 경찰이 무단침입,

김퓨터교육 반대 회원 등을 강제 연행했으며, 연행자의 가족면회는 물론 소재 확인조차 거부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자 명단 : 심우춘(28, 광주지부 사무국장) 최유

락(28, 광주전남협의회 중앙위원) 박종인(27, 광주지부 조직부장) 고용출(19, 광주지부 조직부 차장) 정찬호(27, 광주협 교육부장) 김남수(22, 전남대) 유상열(36) 송원주(24) 김선희(23) 김동성 봉철의 장평기 이관재

양심수 군문제 청원 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양심수들이 낸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의 의결로 출소 양심수 군문제는 국방부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오전에 김종은(서울대)·송자(연세대)·박홍(서강대) 총장 등 8개 대학총장은 2시간여 동안 권영해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해 항거했다 투옥된 학생들에게 과거청산과 인도적 전지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라도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며 시국사범 징징대상자들의 병역면제조치를 요청했다. 또 총장들은 "88년 시행령을 적용해 1년 이상 선고자에게 병역을 면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방부장관은 해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림

- 전해투 후원의 밤/18일(토) 2시-10시 ·여의도 백상빌딩 브로이호프(735-0849)
-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신고공판 ·20일(월)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

김삼석·김은주씨 모두진술서

편집자주: 김삼석씨의 모두진술서는 42쪽이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문·불법수사 부분만을 게재하였으며, 김은주씨의 경우는 요약하여 실었다.

<김삼석씨 모두진술>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남득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무조건 자신들의 논리를 강요하며 불법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9월 8일 정오경, 본인은 집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저지문제'에 대한 원고를 집필중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불법연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본인의 '작은 도서관'인 방에서 10여간 보아오던 도서문헌들과 3년간의 군사관련자료,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후처리 관련자료, 신문스크랩, 디스켓 등 사과상자도 십수상자를 옮겼습니다. 본인은 구타에 의해 무릎이 풀린 채로 신혼사진, 신혼비디오 테이프에다 일기장, 통장, 부인의 정신대 관련자료, 비디오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시간 전쯤에는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안기부의 협력자 배모씨의 심부름으로 강모씨에 의해 끌려나온 여동생도 동시에 연행이 진행되고 있었고, 동시작전에 참여한 강모씨가 체포될 리 만무합니다. 남산 안기부로 연행되자마자 체육복으로 갈아입혀져 17일간 동안 구타와 기합, 협박, 성추행 등이 계속 진행되었고,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북한에 언제 갔다 왔느냐', '오스트리아에서 누구와 점선했느냐', '일본에서 북한의 누구와 만났느냐', '국내연계조직을 대라'며 위협하였고, 연행된 3-4일후 시간-날짜 개념을 잊은 채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구타와 원산폭격, 서서 무릎조그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심수회에 걸쳐 당하며 유도신문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중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다음날 다시 영장을 친철회 잃어버렸으며 수사책임자에게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는 2-3명의 수사관과 동행하였고, 약 일주일 후 화장실에서 No.160의 명찰

을 단 수사관이 저의 성기에 다가가 자기 손이 더럽혀진다고 치술을 대고서 '다마 넣었나 보자' '얼마나 큰가' 하면서 '다마를 넣지 않았네'라고 한 후 자기 손이 더럽혀졌다며 비누칠까지 하였습니다. 약 열흘 후에는 수사관 No.160과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잠잠 새벽에 수사내용과 상관없는 한 여성을 떠올리며 '노처녀 몇번 먹었나' '맛있었나'라는 수차례의 위협에 그만하라는 말에도 아랑곳 않고 그들의 성적 노리게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수사중에 '누구누구도 다 붙었어' '한번 거꾸로 매달아볼까' '널 영원히 매장시킬 수 있어' '그 머리로 무슨 운동을 해'하며 수사책임자의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학생운동과는 질이 다르다'며 본인이 무슨 거창한 사건 주도자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목욕을 시킨다며 구타당한 왼쪽 가슴의 심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샤워가 하루에도 몇번씩 되었고, 협조 않으면 임신 8개월째인 부인을 연행조사하겠다는 협박이 계속 되었고, 다른 수사관은 '동구에서 공부한 이후 우리 회사에 취직하라'며 당근질하였습니다.

수사중에 본인의 전화와 안방대화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광범위하고도 치밀한 전화도청, 뿐만 아니라 1년여에 걸친 미행과 사진촬영 등으로 사람의 피를 말리고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한꺼번에 작성한 것을 날짜를 적당히 소급하여 여러 날에 걸쳐 조사된 것으로 조작한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범죄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일본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왔다는 진술조서는 황여만 갔고, 이 조작수사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본인은 9월 20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혀를 깨물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지하실을 잡시나마 빠져나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조금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상처부위를 위로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목에 기브스를 한 채로 한밤중에 3시간여동안 동료를 대라는 반인간적인, 동물적인

수사에 치를 떨어야 했고, 86년 10월 5공 처하에서의 고문후유증으로 아직까지 극도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문국진씨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수사종료 이틀전에 수사책임자와 다른 수사관들은 '너 태어날 때 너희 부모가 북한보고 낳았지'하며 '이제 감옥생활하며 관계는 어떻게 가지냐'며 '혼자 벽보고 헤아지'하면서 크게 비웃고 '한진' 올린데 대한 미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종료되고 저의 이름앞에 '간첩'이란 두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시간에 다른 방의 제 여동생은 수사관들이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뺨을 수없이 때리고, 변호인 접견 때에는 대화내용을 다 진술하라고 뒤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 중에 '이거 안되겠구만 다른 방으로 옮겨 옷 벗겨야 되겠구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볼래'라는 등 폭언과 성적 모욕을 심하게 당하였습니다.

인간이란 애당초 가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 즐기는 습성을 가진 동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기는 엄치없는 동물이었습니다.

본인은 90년 10월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세상에 폭로한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이후 '보안사-안기부-치안본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180쪽의 자료집을 만들어 공안수사기관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경쟁하듯 전화도청, 정치사찰, 생매장 사건, 학원망원, 프락치공작, 강제징집과 녹화사업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폭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에 제가 이 자료집의 한 소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안기부는 변화했어야 합니다. 헌법 제17조, 제18조에는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공안당국에 의해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무수한 경구중에 특히 고문폐지와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한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 2권 11장, '잔혹함에 대하여'에서 인간의 잔혹성은 극도의 분노와 성적 환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단순한 오락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학대·고문하는 일이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김은주씨 모두진술>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체 검찰로 이송되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검찰의 진술조서는 계속되어 갔고, 뒤늦게 행사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검찰의 폭언과 강압과 함께 '너가 그럴 줄 알았다'며 마음대로 하라며 이후에는 입회서기가 신문조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과연 이 사건 전체에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관한 권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불과한 안기부의 수사를 감독하였는지, 적법한 구금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였는지를 검찰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묵비권'과 '증거능력'이라는 말을 꺼내자 검사는 '어쭙 증거능력'까지라고 하며 업신여기는 마당에서는 더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법에 의해 보호하기는 커녕 오로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기술자에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은 안기부의 논리를 120%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소장의 정형화된 유지한 문구는 35년도 더 넘게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서두를 장식해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과 선전이 영구불변하는 진리이더라도 한 단 말입니까. 35년전과 똑같은 문구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을 감옥에 가두어 재판하는 일이 왜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북한이 대남적화전력을 버리고 평화평일론으로 간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 검찰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북한의 변한 모습과 북한사회의 진정한 면면을 새롭게 한번 고찰하고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동생을 잡아가고 집을 수색하고, 책과 소지품 하물며 빈테이프까지 다치는대로 가져간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과잉대접을 하신 분이었고, 막내 여동생 또한 책을 다시 찾으러온 그들에게 여기 있다며 건네주다시피 할 정도로 따뜻하고 화목한 이러한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순진한 것을 안 이후 이들은 가장 비판적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와서 공소장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안기부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와서도 수사내용중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기부에서의 수사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일본에 간 건만으로도 못할 데를 간듯이 일본에 왜 가게 되었나, 누구를 만나러 갔느냐라고 추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하다보니 공부하기 위해서 갔고, 일본에는 친구도 있어 돈이 별로 들지 않아서 갔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재일동포들이 36년간의 식민지라는 아픔의 역사를 지닌 채 현재에도 떨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알게 되었고, 조국에서도 이들을 소외시켜 젊은이들은 귀화를 하거나 일본인과 결혼을 하는 등 문화적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우리 민족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곳이 별로 없어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찾아오는 재일동포들에게 조총련과 연계되었다며 조국이 이들에게 준 것은 0.7평 감옥이었습니다. 친척들도 거의 없어 이분들은 거의 보살핌없이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재일동포들을 남북분단의 정치회생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사진은 안기부의 과대포장, 조작, 함정수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지령수수가 되고, 말지나 비행기에서 잃으려고 산 신문들은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와타나베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는 안기부에서 미리 써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세뇌시켰습니다. 저는 수사관들의 폭력과 위협 앞에서 그들이 편 각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0여명의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9월 8일 강남터미널에서 연행되어 남산 안기부 지하실로 끌려가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수사를 받았습다. 영장제시를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3일동안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아 내 자신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너희 남매가 여기 끌려온 것을 누구도 모른다. 시체가 되어 나가도 모른다'는 말을 하여 오판도 잡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으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며 주로

외부에 상처가 나지 않는 머리카 등에 폭력을 당했고, 구둣발로 채이기도 하였습다.

심지어는 '이거 안되겠구만 다른 방으로 옮겨 옷 벗겨야 되겠구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볼래'라며 위협하였고, 또한 수시로 성적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정을 이용하여 오빠에게 더욱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고, 날이 갈수록 저는 수사관들의 의도대로 간첩이 되어 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사생활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서 친구와 전화통화한 내용이나 식당에서 여러 친구와 나는 잡담등도 알고 있었습니다.

9월 8일 연행되기 2일전에 남누리 영상 대표 배인오가 '모래 일본에서 손님이 오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 통역을 부탁한다'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자꾸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였고, '강이라는 사람이다'고 하였습니다.

9월 8일 아침에 '강이 보낸 사람이 다'는 전화가 왔는데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배인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안기부에 연행되었습니다.

안기부에 가서 안기부 직원이 많았는데 물건을 건네준 사람은 왜 놓쳤냐고 물었더니, 쫓아가다가 놓쳤고 너한테 신경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제가 본 사람은 50대 후반의 사람이었고, 10여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쫓아가다가 놓쳤다는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안기부의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배인오를 안기부의 프락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5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수사과정에서 배인오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서도 배인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제가 배인오가 부탁해서 나갔다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배인오와 한총련간부와 제가 왕십리 부근에서 만났을 때 안기부 수사관이 옆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배인오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넷째, 왕십리에서의 우리들이 만나는 사진을 보여줄 때도 배인오 부분은 가리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제가 연행될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배인오가 프락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경 무리한 수사 제동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철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씨(21, 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무죄선고가 내려지자 재판을 방청하던 가족과 학생 150여명은 일제히 재판부와 배씨에게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다. 배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전혀 없는 데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유일한 목격자인 가스배달원 신아무개씨의 진술도 자주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신씨가 주장하는 범행목적 시간이 처음 경찰조사 때의 10여초에서 이후 1-2초 또는 몇초로 계속 반복했고, 또 사건 당시 7-8m 떨어진 곳에서 옆모습만을 목격했으면서도 경찰조사에서 배씨를 범인으로 단정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경찰에서 자백을 한 것은 4일 동안의 불법감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 데다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가혹수사 등의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현지 경찰이면서도 살인누명을 쓰고 항고심에서마저 12년을 선고받고 1년만에 진범이 잡혀 풀려난

김기용씨 사건에 뒤이은 이번 판결이 검·경의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김기용씨 또한 "동료경찰의 강압과 협박, 잠안재우기 고문 등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었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6월 12일 한총련 집회과정에서 김춘도순경이 사망하자 평화시위를 증거도 없이 각목,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과격시위라고 몰아부치며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하다 별다른 성과가 없자 가스배달원 신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배씨를 6월 27일 강릉집에서 강제연행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신아무개씨가 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객관적이어서 배씨의 범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며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백승현·유선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씨 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증거가 없자 뒤늦게 나타난 다른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배씨를 구속기소하였으나, 김순경 폭행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조차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배씨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서의 자백은 변호인 접전이 목살되고 4일 동안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거리음악제
오늘(21일) 12시 탑골공원 앞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월석방과 국보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목요집회를 해왔으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43년이란 세계에서 가장 긴 감옥생활을 하시는 김선명 선생님을 비롯하여 1993년 11월 26일 현재 322명의 양심수가 수감중입니다.

연사 : 강기훈씨(유서대필사건)·태재준씨(전대협 의장)·김태홍씨(조작간첩사건) 가족

◆ 공 판 안 내 ◆

- 12월 21일(화)
 -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 고대성 등, 근무이탈, 10:30, 육군고등군사법원, 선고
 - 서울대 교수 성희롱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 12월 24일(금)
 -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 알 림 ◆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송년의 밤
- 21일(화) 7시, 인권운동 사랑방
- 한울살 송년의 밤/유가협
- 21일(화) 6시, 한울살(유가협 사무실, 764-1684)

지체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기관도 장애인의무교육 지지치 않아

지체장애인 스스로가 제기한 충남도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이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평하게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시험에 불합격되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린다. 지체장애인 정강용씨(31세)는 지난달 11월 8일 "충청남도측이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편법으로 적용하여 7급 공무원 시험에 탈락했다"며 불합격 처리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충청남도측은 올해 지방공무원 7급 시험에서 41명을 선발했으며 그 가운데 장애인 1명은 한명도 없다. 대신 올해 채용한 209명의 7급, 9급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정기준이 4명 임용을 감안, 4명 모두 9급 행정직에서 채용했다. 정씨는 바로 이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채용의무를 직급별로 공평하게 준수했을 경우 틀림없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만 장애인채용 의무비를 준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씨는 또 41명의 7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39명이 군필자 가산점 평균5점을 더 받아 평균 합격선 82.22점으로 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자신은 평균 78.33점을 받아 불합격되었다며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행정심판원 제7조까지 위반해가며 행정심판위원장으로 충남인사위원장이 부지사로 결정, 심판이 제기된 사건의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심판까지 맡아 공정한 심판이 어려워지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처벌 약속받고 해산

미군 2명이 한국인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살인강도 미수사건'이 16일 새벽 경기도 파주군 삼릉읍 산통동 일로 앞 도로상에서 일어났다. 미 제2사단 제82전투지원공병대 소속 더프 리차드 씨 알, 햄 브리안 엘 등 2명의 미군은 경찰에 붙잡힌 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더프 리차드씨 등 2명은 16일 새벽 0시 20분경 한창열(32세, 승진운수 택시기사)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기도 파주군 삼릉읍 산통동 일로 앞 도로상에서 더프 리차드씨가 뒷좌석에서 갑자기 한씨의 목을 칼로 찌르고 한씨가 목에 찌른 칼을 빼앗고 소리치자 차를 정지시키자 차문을 열고 도망쳤다. 이때 사건현장을 지나가던 택시기사 장재근씨는 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연락을 취해 에드워드 부대 정문앞에서 이들을 기다렸으나 한명이 부대안으로 도망가 놓치고 나머지 한명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한국경찰과 함께 검거하였다. 파주경찰서와 미군범죄수사대(CID)는 범인의 신병을 확보,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가 묻어있는 옷 등을 증거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미헌병대 보호실에 유치중이다. 한편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경 연락을 받은 인근의 택시기사들이 에드워드 부대 정문앞에 모여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미군범죄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경찰로부터 범인을 엄중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했다.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전우집 등 5명)는 17일 오전 사건현지로 내려가 미군 범죄수사대와 미 2사단 민사처 등을 통해 범인에 대한 엄중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치료 및 입원비용과 당장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을 약속받았다. 피해자 한씨는 폭 4센티미터, 길이 9.5센티미터의 지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이다.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일 오전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나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폐지, *성폭력 범죄구성요건을 피해자의 행동여부에 초점을 맞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폐지, *성회동행위 *중추행위 등의 폐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법집행과정, 국가의 책무이행 여부 등 감시·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완책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서울대학교 성희롱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공판 "신교수 성희롱 장면 목격했다" 주장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으로 알려진 전 서울대 조교 유아무개(25)씨와 신교수간의 성희롱 공방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지난 달 23일의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원고 유아무개가 서울대 자연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던중 담당교수인 신교수가 "여러차례에 걸쳐 뒤에서 겨안는 자세를 취하거나 어깨 등을 어루만지는 등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지난 10월 신교수와 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신교수가 유씨를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측이 신청한 유아무개(30, 당시 실험팀장)씨가 증인으로 나와 "실험실 문을 열다가

신교수가 기기조작 방법을 지도해주는 과정에서 유씨의 등에 손을 얹어 놓거나 팔을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을 여러차례 보았으며 그때마다 민망스러워 그냥 나오곤 했다"고 진술했다. '성희롱' 법정공방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강간, 추행 등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언어를 통한 성희롱의 한계와 피해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검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이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

윤금이씨 살해범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에 대한 상고를 담당검사가 포기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케네스 마클 일병의 담당 검사인 서울지검 신동희 검

사구에서는 이미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판례(미국, 80년 '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라인' 판례)를 통해 성적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역사적 이유 등으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희롱' 문제는 서구와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면서도 아직 검찰내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함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검찰의 즉각 상고 등을 주장하며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열려 형사적 책임과 배상 등 논의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의 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는 지난 18일, 19일 이틀동안 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2면 참조).

이번 합동연구회는 제1주제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실태, 제2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전체상, 제3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형사적 책임과 배상 등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8월 9일 동경에서 1차 연구회가 열린 바 있으며, 제3차 연구회는 동경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는 12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지난 8월 9일, 10일 일본동경에서 열렸던 1차 합동연구회의 연구성과와 과제를 이어받은 후속 연구작업결과를 교환하는 자리였다.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전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배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번 2차 연구회의 성과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과

- 1) 네덜란드의 군 '위안부' 제도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세아 여성들에 대한 군 '위안부' 범죄의 처벌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종차별임을 확인하였다.
- 2) 피해자들이 군 '위안부' 생활로 인해 받은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해명하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 3)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식민지 지배 및 침략상황에서 일어난 민족문제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 4)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으로서, 명백히 국제법위반이고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대한 죄'에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군위안부」는 완전히 무권리 상태에 놓여진 「성노예」임이 명백해졌다.
- 5)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반보낸 교수의 배상의 범주, 즉 진상조사, 개인적 배상을 포함하는 피해회복, 형사처벌, 재발방지 등의 조치가 「군위안부」 제도로 인한 인권유린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 6)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정부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남겨진 과제

- 1) 「위안부」, 정책의 피해국간의 비교 연구에 있어서, 각국의 문화의 차이, 식민지와 점령지에 대한 일본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종군위안부, 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중 학문적으로 가장 정확한 용어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 3) 민족성 발달과 민족발달정체간의 개념, 범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민족발달의 의도를 가지고 일본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과제로 남았다.
 - 4)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배상을 위한 국제증제 재판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
 - 5) 2차세계대전 전후에 걸친 국제법의 발전과 전쟁범죄 재판의 선례에 의하여 성립된 전쟁범죄 처벌에 관해서는 국내법의 제정 등을 포함하여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계속해서 제3차 한일 합동연구회를 개최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준강간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간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함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존속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존속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④ <생략>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신체장애로 함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9조(강간등 삼해·치상) ①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등 살인·치사) ①제5조 내지 제8조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준강간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생략>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제331조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거리음악제
오늘은 2시 탑골공원 앞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보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목요집회를 해왔으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43년이란 세계에서 가장 긴 감옥생활을 하시는 김선명 선생님을 비롯하여 1993년 11월 26일 현재 322명의 양심수가 수감중입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정대협 제100회 「수요시위」

오늘 12시 일본대사관 앞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92년 1월 8일부터 매주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개해온 「수요시위」가 12월 22일로 100회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수요시위」는 정대협 회원단체와 여러 사회단체, 정신대피해자 할머니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전화 : 763-9633)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미수범) <생략>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서,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1조·제12조(제1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관찰)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③ ④ <생략>

제17조(보호감호) <생략>

제18조(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고소기간) ①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소한다. ② <생략>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결정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22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제23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 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이하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호시설의 업무) <생략>

제27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23조 2항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허가의 취소 등) 제30조(경비의 보조) <생략>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 <생략>

제33조(의료보호)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를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 <생략>

제4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과태료) <생략>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전박

최형우 내무장관이 「말」지 1월호 인터뷰에서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다짜야” 한다며 ‘고문’을 인정하고 있어, 국민을 불안에 몰아 넣고 있다 (O래 참조). 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 해도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의 인권의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나 내

정의식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모습을 닮고 있어 문민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위 ‘문민’ 정부가 출범했다는 울레 들어서도 배병성씨, 노태훈씨, 김삼석·김은주씨 등을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잠안재

우기 고문, 심지어 성고문 등을 자행했음을 비추어볼 때 최 장관의 발언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문관행을 부추길 위험을 안고 있다. 최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인권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말」 1월호, 인물연구/고개 숙인 실세 최형우의 진심
- 조유식 「말」지 기자**

“(앞 생략) 이제는 소위 민주주의가 안되었다고 얘기할 사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김영삼 정권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김영삼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화 안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많고…….
“지금 안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 예를 들어 안기부에서 잠 안 재우는 고문…….
“(말을 끊으며) 아 그런 거 다 고쳤단니까요.”
- 아니 여전히 가능합니다.
“누가 잡혀 가봤나. 누가 잡혀 갔어요? 이야기해보요.”
- 안기부에 김삼석 남매가 잡혀 갔지요.
“그거는 무슨 사상문제겠지.”
- 사상문제라고 해도…….
“(목소리를 높이며) 사상문제라면 철저히 다뤄야지. 그거는 국가문제거든. 지금 사상문제를 다루지 마라카면 큰일 나요.”
- 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문제…….”
이 대목에서 기자는 잠시 귀를 의심했다. 고문은 사상문제로 무관하게 금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아닌가.
- 잠깐만요,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상문제로 잡혀온 사람은 안기부에서 잠 안 재우는 고문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지요.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은 안되지. 국민들만 사람에게 물어봐도 한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양심수 석방요구 집회, 다시 갖지 않기를’
민가협 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22일 2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를 탑골공원 앞에서 가졌다.

민가협 회원 50여명과 박현서 교수(한양대), 이수갑씨(민족정기수호협 회장),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제6기 전대협 의장 태재준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형권씨(93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가 어머니가 아들이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임수경씨가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안옥희 민가협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런 거리집회를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올해안에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임수경씨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은 감옥에 가야 할 죄를 결코 짓지 않았다”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양심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지난 9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집회’를 열고, 주마다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조작간첩 진상규명과 석방 촉구’, ‘유서대필’ 사건 촉구

기훈씨 석방’ 등의 주제로 목요일집회를 열었으며, 특히 지난 17일부터는 ‘매일집회’를 가졌다.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법적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이효재)는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100차 수요시위'를 22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진 후 탑골공원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92년 일본 수상이 방한한 직후인 1월 8일 제1회 수요시위를 가진 후 이날 100회째를 맞이한 '수요시위'에는 정신대 할머니, 정대협 관계자를 비롯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박현서 일본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진관 불교인권위 대표 등 80여명이 참가하여 위안부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일본의 태도를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군위안부' 피해자인 강덕경 할머니는 “이북·이남의 할머니들이 단결하여 통일을 이루어 일본이 저지른 죄의 댓가를 받아내자”고 주장했다.

집회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는 아직도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 정책이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성명서 참조).

이어 집회참석자들은 “위의 요구가 일본 정부에 의해 이행될 때까지 수요시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동안 수요시위는 정대협 회원단체가 각 단체의 성격에 맞게 매주 한 차례씩 순환하며 해왔다.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

시행령 마련에 참여 방침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12월 16일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해 일단 '환영'을 표시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개정안에 장애인, 부모,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었고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의무교육이 명시되지 않은데 대해 “예산마련이 어려워 조기의무교육을 명문화하지 않은 국회와, 일반교육과의 형평성을 들어 조기의무교육을 반대한 교육부” 등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공대위는 앞으로 “법안의 시행령과 규칙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는 1992년 1월 8일을 최초로 하여 매주 수요 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에게 정신대문제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 이행, 교과서 개정 등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일본정부의 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신대문제가 50여년만의 침묵을 깨고 제기되자 처음에는 '군위안부 문제는 잘 모르겠다. 민간업자들이 한 일로 알고 있다'라고 부인했다가, 두번째는 '군이 위안소의 경영에 일부 참여하였다. 그러나 모집에서는 강제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가 최근에는 '모집과정에서도 군의 강제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이행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제 100회 수요시위를 맞이하면서 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일 호소카와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정책이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였음을 인정하라. 일본정부는 지난번 일 호소카와 수상의 방문에서 보여 주듯이 그들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불법적 침략전쟁을 인정하는 대신 가해자로서 모국어 교육박탈, 창씨개명,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 이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한일 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은 '위안부'문제 등 과거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식민지 정책이 전쟁범죄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

2.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지난 93년 8월 4일 미와자와 정부는 제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부분적이거나 강제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일본정부는 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 명령의 책임소재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전체규모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적 책임이행 문제에 있어서도 한마디 언급도 없이, 기금 운운하며 군위안부 생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그들이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축소, 회피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3.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반대한다. 즉각 철회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

일본정부는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 개입을 인정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 운운하며 기금창설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을 단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 동정의 입장에서 그들의 전쟁범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의 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규탄한다. 일본은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법적으로 배상하라.

우리는 일본이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올바른 한-일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가 일본정부에 의해 이행될 때까지 이 수요시위를 멈출 수 없으며, 우리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1993년 12월 22일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 100회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김선명씨 44년째 감옥살이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김영삼 정부는 23일 89년 동해시 보물선지에서 후보 매수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서석재씨를 '구출'하기 위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74명에 대한 징계 형사 사면, 정치권인사 13명 사면·복권, 44명의 '공안사범'과 1,343명의 일반형사범에게 가석방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교조 해직교사와 과거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 대해 민가협 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양심수의 석방을 염원하는 눈물겨운 집회를 벌여왔는데 결과적으로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로 끝나버렸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또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 어머니 권태평씨는 “기훈이를 형단기 이를 앞둔 내년 광복절에 특사로 내보내면서 생색낼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민가협’과 민주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에 대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간헐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 정부가 감히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 의지가 완전히 퇴색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민가협 회원 19명은 23일 오후 4시 청와대로 항의방문을 갔으나 닭장차에 태워져 미사리에 내팽개쳐졌다.

성명(발췌)

정부가 12월 24일자로 단행한 사면·복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조치였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2월 20일 석방대상자 320명, 사면복권 대상자 731명에

대한 명단을 정부에 전달하여 사면복권의 대폭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 양심수인 문익환, 김근태, 장기표, 유남봉, 이창복, 고영근, 윤석양, 강기훈 등 우리 당이 요구한 민주인사의 대부분이 이번 사면복권에 제외된 것을 보면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 의지가 완전히 퇴색한 것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중략)

정부는 '서석재를 위한 들러리식 사면복권 조치'가 국민적 반발을 야기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이제라도 깨닫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사면복권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1993. 12. 23.
민주당 인권위원장 강수림
76호는 12월 28일(화)에 발행합니다.

성명

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조치는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인 서석재를 사면복권하기 위해 몇 사람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볼 때 김영삼 정권의 민주화 의지가 완전히 후퇴한 것임을 틀림없다. 이번 개각 조치에서도 보여지듯이 김영삼정권은 이제까지 외쳐온 '변화와 개혁'이라는 허울마저 벗은 채 지지세 선거를 겨냥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완전히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시대 어려운 정치환경 속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의 공민권 회복”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부정선거, 뇌물공여등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간헐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은 김영삼 정부가 감히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총 322명(12월 23일 현재) 양심수 중에 13.6%에 불과한 44명의 가석방 조치를 보면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세계신문에서 1년을 추가하려 하는 김영삼 정부의 비인간성에 대해 분노한다.

2. 정부는 93.10.25. 6공 수배자 230명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해놓고도 같은 이유로 구속된 송갑석·김종식(전대협 4, 5기 의장)와 한충목(한청협 부의장)등 청년, 학생, 노동자들을 석방조치하지 않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 법질서를 위배한 행위이다.

3. 이번 조치는 만기석방을 앞두고 있는 양심수 44명을 조금 앞당겨 석방시켰을 뿐이다. 가석방된 양심수 중에서도 만기일을 이를 앞둔 양심수가 2명-김정동(계명대생), 박원택(동영알미늄 노동자), 나을 앞둔 양심수가 2명-임지수(성대), 이형용(충북대)이고 44명의 40%가 2개월내로 만기석방될 양심수였다.

4. 이번 조치는 형기의 54% 복역이라는 정부의 가석방기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이번 가석방조치의 기준이라는 형기의 2/3복역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해놓고도 이에 해당하는 양심수를 제외시킨 것은 양심수를 정치적 불모로 가둬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강기훈(3년형, 2년6개월 복역, 77.8%), 장의균(8년형, 6년6개월 복역, 81.3% 복역)씨와 7년이상 복역한 장기수 70여명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1. 43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69세)씨를 비롯한 장기수는 이번 가석방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43년이라는 부끄러운

1993. 12. 2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763-2606)

발표문(발행)/법무부
 <앞 생각>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
 들중 현재까지 공민권이 제
 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
 민권을 회복시켜 교단에 복
 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지난 시대 어려운 정치환

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
 치권 인사에게 공민권을 회
 복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성적이 우
 수한 일반형사범과 재범의
 우려가 없는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에 대해 특별
 가석방과 가퇴원을 실시하
 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으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
 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
 니다.<이하 생략>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가석방대상자 명단(총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대상자	범죄사실요지	재판 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총련연계간첩	징역7년, 95.2.22. 종료(76.7%)	전향
임동광(44세)	재일북한공작원포섭 간첩	징역4년, 94.12.17 종료(74.5%)	전향
김종환(36세)	월북기도	징역2년, 94.6.11 종료(76.4%)	전향
전문환(25세)	임수경 밀입국 배후조종, 전대협평축준비위원장, 서강대4	징역4년, 95.2.11 종료(71.4%)	
이승미(29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징역1년6월, 94.3.18 종료(85.1%)	
한경임(27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 이적표현물 배포, 서울대3	징역1년6월, 94.3.23 종료(84.2%)	
조현일(25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 이적표현물 배포, 경남대3	징역1년6월, 94.4.30 종료(73.4%)	
정덕영(28세)	사노맹 가입, 성대4	징역2년, 94.5.7. 종료(81.5%)	
임지수(23세)	민학련 가입, 이적표현물소지, 성대4	징역4월, 93.12.28 종료(97.5%)	
한삼현(25세)	민학련 가입, 불법시위주도, 외대3	징역2년, 94.5.2 종료(81.9%)	
최일봉(32세)	IS그룹 총책, 이적표현물제작·소지·배포, 외대강사	징역1년6월, 94.4.30. 종료(77.1%)	
김진철(34세)	민노투맹결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서울대4	징역4년, 95.1.30 종료(72.3%)	
김정기(33세)	법정학련 구성, 불법시위주도, 전대협 대변인, 한양대4	징역2년, 94.8.13 종료(68.0%)	
정성준(27세)	법정학련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인천대4	징역2년, 94.8.18 종료(67.4%)	
이세란(30세)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노동자대학 개설, 성대3	징역2년, 94.2.3 종료(94.9%)	
이용철(25세)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파출소화염병투척, 청주대4	징역4년, 95.3.5 종료(70.0%)	
김호상(25세)	인공기 개양관련 불법시위주도, 북한영화 상영, 진대4	징역1년6월, 94.4.27 종료(77.6%)	
김정동(28세)	민자당 대구서갑 지구당 점거, 화염병 투척, 계명대4	징역2년6월, 93.12.26 종료(99.9%)	
이현웅(24세)	교내시위참가, 진압경찰관 상해, 충북대4	징역2년6월, 93.12.28 종료(99.6%)	
진성준(26세)	교내시위주도, 전북대	징역1년6월, 94.4.28 종료(77.4%)	
정남규(23세)	교내시위참가, 화염병 투척, 청주대2	징역1년, 94.4.3 종료(71.5%)	
박일진(25세)	파출소 화염병 투척, 가두시위참가	징역3년, 94.11.6 종료(71.1%)	
이종원(23세)	불법집회 개최, 화염병 투척, 진압경찰관 상해, 경북대4	징역2년, 94.8.17 종료(67.5%)	
하진경(31세), 유창호(34세)	불법노사분규 주도, 기아기공	징역1년, 94.1.28 종료(89.6%)	
박원택(33세)	경찰관에게 황산·신나등 투척, 동양알미늄	징역2년6월, 93.12.26 종료(99.9%)	
라재봉(41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회사간부 감금, 동양알미늄	징역3년, 94.6.28 종료(82.8%)	
송두실(27세), 하종하(25세), 문상호(27세)	회사간부 감금, 진압경찰관 상해, 동양알미늄		
정승영(26세)	경찰관에게 황산신나등 투척, 동양알미늄		
안상목(28세)	회사간부 감금, 진압경찰관 상해, 동양알미늄		
신승철(29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회사간부 감금등, 기아산업	징역2년6월, 94.1.20 종료(97.3%)	
정하백(29세)	진압경찰관 감금 상해, 기아산업	징역2년6월, 94.1.23 종료(96.9%)	
이병현(32세)	불법노사분규주도, 기아산업	징역2년6월, 94.3.6. 종료(92.4%)	
김현준(29세), 송철원(34세)	불법노사분규주도, 삼미특수강	징역1년6월, 94.4.4 종료(81.7%)	
오성훈(26세)		징역1년6월, 94.5.9 종료(75.4%)	
황종하(30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현대자동차	징역2년, 94.1.29 종료(94.7%)	
이현구(32세)		징역2년, 94.2.11 종료(92.9%)	
강정철(29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화염병 투척, 현대중공업	징역1년6월, 94.1.7 종료(97.6%)	
방봉수(27세)	불법노사분규주도, 삼양금속	징역3년, 94.8.2 종료(79.6%)	
김동수(26세)	학생회장선거서 비운동원학생 폭행, 수원대4	징역1년6월, 94.4.26 종료(77.8%)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CBS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송년특집 '93년 인권상황 점검'

문국진씨 부인 윤연옥씨 첫회 출연

「주한미군 운동본부」 공동대표 전우섭 목사, 민가협 남규선 총무 등 출연 예정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오
 늘과 내일」 프로그램에서
 는 27일(월)부터 5일간 93
 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송년특집을 마련하여 방영
 중이다.

이양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상황 송
 년특집 첫날인 27일에는 고
 문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문
 국진씨 부인 윤연옥씨가 출
 연하여 문씨에 대한 소개,
 현 상황, 결혼하게 된 과정,
 고문후유증에 대한 소송제
 기 진행상황등에 대해 20여
 동안 대답을 가졌다.

윤씨는 "현재 문국진씨는
 86년 청량리경찰서에서 당
 한 고문 후유증으로 6개월
 째 고려대 부속병원에 입
 원중이다"고 현상황을 전
 하였다. 문씨는 지금 진행

중인 고문후유증에 대한
 소송과정으로 오늘중으로
 법원이 지정한 연대 병원
 에 15일 이상 입원하여 신
 체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오늘과 내일」 송년특집은
 제1부 올해 5대뉴스에 이어
 제2부인 올해 인권상황 점
 검은 7시 40분부터 8시까지

방영된다.
 오늘(28일)은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
 부」 공동대표인 전우섭 목
 사가 나올 예정이며, 29일
 민가협 남규선 총무가 나
 와 양심수 현황을 전한다.
 30일·31일에는 배병성씨와
 김기용 순경을 출연시키기
 위해 교섭중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성탄을 맞이하여 단행된
 이번 사면, 복권, 가석방 조
 치는 김영삼 정부 이후 세
 번째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금번에 이루어진 1천3백43
 명에 대한 특별조치에 공
 안, 시국관련자는 단지 44
 명뿐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만기일이 3-4일 남은 양심
 수가 4명이고, 40% 이상이
 2개월내 만기석방될 예정
 인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문민정부하에서도
 190여명이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었고 현재도 양심수
 가 340여명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
 는 진정으로 민주화와 국

그동안 「인권운동 사랑방」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인권운동 사랑방」 구성원들은 그
 동안 많은 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원을 가슴깊이 새기
 고 인권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에도
 충실할 것입니다.

복사기 구입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인권하루소식>을 위해 복사기 구입에 많
 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연수 이기욱 이덕우 이오영 박연
 철남에게 지면을 빌어사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엔 마련한 복사기로 「인권운동 사랑방」이 비축한 자
 료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제공해 드릴 예정입
 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공 판 안 내 ◆

- 28일(화)
 ·정용후, 특가법(뇌물), 서울형사고법 302호, 10시 선고
 ·김석,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318호, 10시 선고
 ·유승운, 특가법위반, 서울형사지법 318호, 10시 7회
 ·이상욱,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423호, 2시 속행
 ·삼양식품의, 보건범죄단속법, 서울지법 318호, 3시 20회
 ·권혁명,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311호, 15:30 선고
- 29일(수)
 ·황석영, 국보법, 서울형사고법 302호, 2시 1회
 ·김종인의, 특가법(뇌물), 서울형사고법 302호, 3시
 ·김영록, 특가법, 서울형사지법 311호, 10시 1회
- 30일(목)
 ·김승연, 외국환관리법, 서울형사지법 320호, 10시 1회
 ·박동수의, 국가법, 서울형사지법 423호, 3시 속행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고문용인 발언’ 최형우 내무장관에게 사과 요구

민가협 등 8개 인권단체

민가협, 전국연합 인권위, 민변 등 8개 인권단체는 28일 ‘고문용인 발언’을 한 최형우 내무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약에 조속히 가입할 등을 요구하였다.

고문후유증 국회에 청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은 29일 국회에 고문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대책과 생활대책 등을 세워달라는 청원을 넣 예정이다.

한편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문국진 씨는 28일 신체감정을 위해 6개월 동안 입원중이던 고대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다.

성명서 /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용인 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사상문제라면 고문해도 된다.”

이 발언은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말」지 1월호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비록 최형우씨가 내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도 해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치명적인 고문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의 커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중략)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슬하해 행해진 고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과거청산을 염원해 왔다.

그러나 현정부 출범후에도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배병성씨를 4일간 잠을 안재우는 등의 고문으로 범인으로 몰았으나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 안기부가 김삼석·김은주씨를 수사하면서 잠을 안재우는 것은 물론이고 성기고문까지 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중략)

우리는 고문은 비인간적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과 제도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을 다짐하면서 출범한 ‘제2기 내각’이 인권침해 방지와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에 가장 앞서야 할 내무부장관에 감히 ‘공개적으로’ 고문을 용인하는 발언을 한 자를 임명한 저의를 의심하며, 또한 국제화, 미래화를 특히 강조하는 현 정권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국민에 대한 고통의 강요 및 인권경시를 조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국민 인권보호에 앞서서야 할 신임 최형우 내무장관은 공개사과하고, 정부는 인권보장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구체적인 인권보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과거 음습했던 고문의 기억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을 즉각 구속하라.
3. 정부는 연말에 가입하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2월 28일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 사랑방 / 천주교 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2·3면)

이인모 노인 43년만에 귀향

김기웅순경·배병성씨 억울한 옥살이

pc통신까지 구속시킨 국가보안법의 위력

UN 인권위 차별소위, 종군위안부 특별보고자 임명

직업병 대명사 원진레이온, 치료대책 노사합의

UN 인권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장의군

김성만·황대권씨 자의적 구금 결정, 석방 권고

강기훈씨 사건관련 홍성은씨 양심선언

케네스 마클 유죄판결 및 윤금이 공대위 활약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 실시

유엔 세계인권대회 25년만에 열려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밝은 일들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78호는 새해 1월 5일(수)에 발행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편집자 주: <인권하루소식> 편집진은 소위 '문민정부'를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독재정권시절에 폄박받았던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했습니다.

올해 인권과 관련된 사안중에서 우선 38개 항목을 선정하여 인권단체와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발송하여 의견을 물고, 이를 토대로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된 10대 뉴스 이외에도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들의 법조개혁 건의' '안기부 법 부분 개정' '민가협 목요일집회' 등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인권하루소식> 발간'은 당사자로서 기초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인모 노인 43년만에 귀향 '통일되면 꼭 만나자'

이인모 노인(76세)이 3월 19일 판문점을 통해 43년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노인은 부인 김순임(66)씨와 딸 현옥(45)씨 등 마중 나온 가족들과 42년 7개월만에 상봉을 했다. 2년동안 이 노인을 모셔왔던 김상원(51세)씨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하라'며 눈시울을 붉히자, '통일되면 평양에서 꼭 만나자'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50년 8월 인민군 종군기자로 활동하던중 52년 전 전線로가 되어 88년 출소할 때까지 34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다시 고향땅을 밟은 이인모노인 송환을 계기로 이북에 고향을 두고 있는 출소장기수인 김국홍·함세환 노인 등의 송환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김기웅순경·배병성씨 억울한 옥살이 사라지지 않는 가족·고문수사

현직 경찰관인 김기웅(27세) 순경은 살인범 누명을 쓰고 92년 11월30일 연행된후 1년이 넘도록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잡혀 93년 12월 16일(379일)에 풀려났으며, 또한 93년 6월 12일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김춘도 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하였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되었던 배병성씨(외대 용인캠퍼스 3)도 12월 20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김순경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동료 경찰들이 잠을 안재워 지친데다 싸우다 실수로 죽었다고 하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 해주고 탄원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핏에 빠져 형사가 부르는대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김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에 연행된지 5일(1백33시간)이 지난 후 발부되었으며, 1심,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아 사실심리까지 마친 상태였다.

배씨 또한 93년 6월 27일 연행되어 4일만인 7월 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잠을 안재우고 목과 등을 폭행하는 등의 가혹수사와 "자취방에서 나온 메모지로 국가보안법을 걸어 구속하면 더 큰 죄가 된

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자술서를 쓰게 했었다.

pc통신까지 구속시킨 국가보안법의 위력 문민정부 출범 첫해 구속자중 7% 국보법 적용

pc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동호회에 실은 김형렬씨(20세)를 12월 7일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하여, 문민정부 첫해에 국보법 폐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적용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민가협에 의하면 11월 말 현재 320여명의 양심수중 247명이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77%를 차지하고 있다.

작가 황석영씨, 국보법에 관한 책을 냈던 조국교수, 인권 활동가인 노태훈씨, 정당을 준비중인 민정련 원주·광주지부 회원들, 평화와 근속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김삼석씨, 금강산 경치에 찬탄했던 철책근무자 박영생 병장, 심지어 자신이 대표인 pc통신 동호회에 토론자료를 올린 김형렬씨에 이르기까지 올해도 국가보안법은 그 위력을 떨쳤다.

UN 인권위 차별소위, 종군위안부 특별보고자 임명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활동 성과

정대협은 92년 1월 8일 시작한 일본 대사관앞 수요시위를 93년 12월 22일 제100회까지 한주도 거르지 않는 끈질긴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정대협은 일본의 관련단체, 필리핀·대만등 공동의 피해국들과 연대활동을 펼치는 한편 93년 8월에 유엔 인권위 차별소위에 대표를 파견하여 종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 일본의 전쟁범죄의 규명과 배상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로 올 8월 25일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를 위한 소위원회'는 린다 차베즈(Ms.Linda Chavez)를 특별보고자로 임명하는 결의안을 투표로 통해 채택했다. 이 결정으로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인권기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일본이 전쟁중에 조직적으로 저지른 성노예 범죄가 역사적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직업병 대명사 원진레이온, 치료대책 노사 합의

수많은 직업병 환자 발생으로 관심을 모았던 원진직업병 문제가 11월 9일 '원진비상대책위원회'와 회사가 '원진재단법인 설립' '폐업수당 지급' 등에 합의하고,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93년 12월 현재 310명이 이환화단소 증독 직업병 환자로 판정되고 이중 퇴직자가 66%이상 차지해 현지·퇴직 노동자를 불문하고 잠재적인 직업병 환자로 인식이

되어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이다.
 90년 34명, 91년 42명, 92년 96명, 93년 1백 10명 등 직업병 발병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원진노동자들은 필사적으로 원진직업병 전문병원 설립, 재취업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8월 24일-28일, 9월 21일-2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UN 인권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장의균·김성만·황대권씨 자의적 구금 결정, 석방 권고

UN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93년 4월 30일 장의균(42세)·김성만(37세)·황대권(40세)씨의 구금은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 기준에 위배되는 불법구금이라고 결정하였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고문·인체실험의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여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이 결정에 따라 사건을 재조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장기수들이 이에 해당되고 있어 주목된다.

장의균씨는 87년 7월 5일 연행되어 9월 4일 발표될 때까지 고문수사를 받고, 8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성만·황대권씨는 85년 6월 6일 연행되어 8월 5일까지(60일간) 고문수사를 받고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발표되었다. 김씨는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기로, 황씨는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강기훈씨 사건관련 홍성은씨 양심선언 검찰의 협박으로 거짓진술

'유서대필사건'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인 강기훈씨가 10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결백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조작수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홍성은씨는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강신욱 부장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너도 구속시키겠다'는 협박과 60시간이 넘는 수사과정에서 심신이 피로했던 상태에서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 진실을 밝히려 하였으나 송명석 검사가 집으로 전화를 하고 검찰수사관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증인출석을 방해한 사실도 폭로하였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0월 23일 방영하기로 했던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가 대법원 등의 압력을 받고 취소되었다.

케네스 마클 유죄판결 및 윤금이 공대위 활약 0.7%만이 기소되는 주한미군 범죄에 경증

92년 10월 28일 케네스 마클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이씨 사건을 계기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60여개가 넘는 단체가 참가하여 결성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케네스 마클의 단죄를 위한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유죄판결을 받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윤금이씨 살해사건 이후에도 서초동 레벤호프 주인에 대한성폭행(5월 28일), 미군의 열차안 난동사건(6월 25일), 김경실씨 폭행사건(10월 8일), 김대웅씨 폭행사건(10월 21일), 한창열씨 대검상해사건(12월 16일)등 미군의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져 이 문제를 담당할 상설기구로 10월 26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미군이 들어온 후 10만여건, 하루에도 5건씩 일어나는 미군범죄중 0.7%만이 재판에 회부되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주한미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 실시 초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의 인권보호 노력

경찰 수사단계 등 기소이전에 형사피의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한 당직변호사제도가 93년 5월 1일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직변호사 수는 3백50여명에 이르며 11월까지 하루평균 3-4건, 총 6백35건의 접견의뢰를 받았다. 부산·대구·대전·대구·수원·인천 등 6곳의 해당지방 변호사회에서도 당직변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된 수사기관의 불법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의 수사관행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 세계인권대회 25년만에 열려 국내 인권단체 공동참여로 모범 보여

유엔 세계인권대회가 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다. 90년 유엔총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던 세계인권대회는 68년 테헤란대회 이후 25년만에 열려 냉전시대 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인권문제가 논의되었다.

대회에서 채택한 「비엔나선언」은 인권보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각국 정부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였으며, 빈곤에 의한 인권침해, 개발의 권리, 여성과 아동의 권리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엠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민간단체들이 강조한 인권고등판무관제를 유엔총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하여, 12월 20일 총회에서 신설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내에서는 13개 민간인권단체들이 3월 12일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6월 17일에 '아시아 국가들의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가장 조직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인권하루소식

94년 1/2월

(제78호 - 제100호)

<이달의 주제 - 고문>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고문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민사소송 제기 문국진씨 신체감정중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이하 문국진 모임)은 지난 12월 29일(수) 고문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치료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서 「문국진 모임」은 '고문은 국가적인 범죄'이고 '가장 잔악한 인간과괴적인 범죄'라며 고문실상의 조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문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문 근절과 고문피

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하여 고문근절 의지를 보이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변호사, 의사 등 1천2백여명이 서명하고 이기택 민주당 대표, 강신욱 민자당 의원, 한영수 의원(통일국민당)등 의원 79명의 소개(대표 소개인 임제정의원)를 받아 이루어졌다.

청원에 앞서 박정기(고 박종철 아버지) 「문국진 모임」 대표 등 대표단이 민주당 이기택 대표위원과 가진 면담에서 이 대표는 '고문당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문민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국진(34세)씨는 고문후

유증으로 정신질환이 재발, 지난 해 6월 26일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했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고문후유증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현재 신청감정을 받기 위해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이다. 지난 해 10월 문국진씨의 고문후유증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해 11월 18일 첫 공판이 열린 바 있다.

민언협, 「93년 10대 왜곡·편파 보도사례」 선정
백운두 선장 생존설,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홍성은씨 기자회견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장 정동익) 모니터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 '93년 10대 왜곡·편파 보도 사례'를 발표하였다. 「모니터위원회」는 '10대 왜곡·편파보도 사례'로 *무리한 특종육에 짓밟힌 인권-서혜혜리호 백운두 선장 생존설 *확인취재 무시, 진실보도 외면-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홍성은씨 기자회견 *왜곡·오보 일관-아폴로 산업 파업 *북핵관련 익명기사 남발 전쟁위험 고조 *무소신·대안부재-쌀개방 보도 등을 선정했다.

무리한 특종육에 짓밟힌 인권
서혜혜리호 백운두선장 생존설보도가 그 대표적인 예. 이같은 돌이킬 수 없는 오보사건은 *검찰등 정부부처에서 나온 정보는 '사실'로 인정하는 취재관행 *확인취재 소홀 *타사에서 치고 나오면 지지 않겠다는 오기 등 '특종'과 '선정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지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확인취재 무시, 진실보도 외면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은 목격자 증언이 엇갈리고 사건발생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에도 언론은 '경찰이 데모대에 맞아 죽었다'는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인정,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 홍성은씨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검찰강압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은 침묵하고 말았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인권운동 사랑방」 일동

신년특집/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2면)

「인권하루소식」이 구독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고, 같이 인권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늘어나는 발송비의 부담등으로 부득불 구독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제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팩스가 없어 받아보시지 못한 분이나 보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주1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풍부화합니다.

해외 인권소식을 정기적으로 실을 예정이며, 국내 5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인권관련 기사색인 및 인권주평을 주1회 실을 예정입니다.

신년특집/한승현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이 아니다

□ 93년에 하신 변론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해주시시오.

◇ 지난해에 내가 변론을 맡았던 사건중에서 통일운동가인 김낙중 선생과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세상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힘껏 변론했으나 두 분 모두에게 중형이 떨어졌지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지식인들을 '죄인'으로 다스리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라든가 북한당국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일 수 없다는 논리를 법원이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위의 두분이 감방에서 쓴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한 장문의 진술서나 항소이유서가 기억에 남습니다.

□ 올해 인권운동의 최대과제를 두세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선 1)양심수 내지 시국사범의 석방 및 완전 복권, 2)현행법령중 인권침해조항의 개폐, 3)국제인권규약 준수의 감시 등으로 간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 올해는 행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80년 12월 22일에 미흡하게 개정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 개정방안에 대한 전망과 이를 위한 민간단체등 인권단체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형법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구금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유엔이 제정한 '피구금자 최저기준 규칙'에 미달되는 부분을 고쳐야지요.

□ 93년 6월 비엔나 UN 세계인권대회에서 한승주 위무장관이 연말(93년말)까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형우 현 내무장관이 '사상범은 잠을 안 재워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이 이루어질런지요. 또 고문근절을 위해 우리 주변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정부 당국자는 자기가 국내외적으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미루는 것은 자칫 현정권의 도덕성에 손상을 자초할 염려마저 있습니다. 내무장관의 '사상범 고문' 발언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처절한 고문의 피해자도 한번 집권세력이 되고 나면 것처럼 달라질 수 있는가 싶어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만일 그 발언이 본심의 발로가 아니고 단순한 실언이었다면 앞으로의 장관노릇을 통해서 실증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지켜보고자 합니다.

□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인권문제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무엇보다도 수사중의 가혹행위가 근절되어야 하고 구속영장의 남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시국사범의 재판에 대한 법원의 타성이 바로잡혀야 합니다. 행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양형상의 불균형도 반성해야 마

땅합니다.

□ 94년은 세계 가정의 해입니다. 인권운동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 가정 내의 폭력을 예방하고 비인간적인 남녀차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93년에는 국제연대활동(비엔나 UN 세계인권대회등)이 활발했습니다. 올해 국제연대활동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우리나라 인권활동 관계자들이 그런 세계적인 대회에 참가한 것만도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현정권에서도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억울한 옥살이가 끊이지 않는다면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국제연대활동은 필수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권침해나 양심수가 아주 소멸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대해서 국내외에 바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청산 문제가 물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현 정권은 당초에는 과거청산을 전제로 하는 개혁을 내세우기에 한 때 기대를 걸어 보았으나 선별적인 사정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집권자와의 관계여하에 좌우되는 이중성도 드러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갑자기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이 아닙니다.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묘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범정 안팎에서 말과 글로써 주장을 펴놓아 왔습니다. 남북 유엔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됩니다. 국회가 그 법을 폐지할 때까지 국민 각계가 꾸준히 법폐지운동을 전개하는 길 외에 달리 '묘안'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 변호사님의 올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재판의 성실한 수행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임무이겠지요. 그밖에 동학배주년 기념사업단체와 김대중선생 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도 충실하고자 합니다. 수상집도 한 권 낼 작정입니다.

□ <인권하루소식>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인권하루소식>은 팩스전송의 방식부터가 뉴스의 신속성을 살려주고 있으며 지금도 신문·방송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인권문제를 빠트리지 않고 매일 책상 옆에까지 전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고 고마운 매체가 되었습니다. 넉넉치 못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수신자(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운동 차원의 캠페인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관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주제 - 고문>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양심수 군문제 해결 요구, 81일째 농성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해결 촉구' 국방부는 겹쳐히 받아들여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이하 양군모)이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시작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감옥에 갇다른 사람들의 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이 오늘(1월 6일)로 81일째를 맞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해 12월 17일에 '양군모' 회원인 김성중(27세)씨등 10명이 제기한 청원에 '이들이 수배·구속·수형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 과거의 정치적 합의를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정부에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묵살하며 현재까지도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양군모' 회원들은 국방부가 계속 어정정한 태도를 보일 경우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농성규모를 100여명으로 확대하여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주간'으로 정해 국방부 앞에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등, 이하 회생에 대한 치료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정부에 보낸 바 있다.

한편 93년 12월 30일 '대책위'와 '양군모'는 국방부 앞에서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 및 국회결정 이행촉구대회'를 가졌다.

5·6공화국에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한두번씩 수형생활을 하였으나, 지난 89년 3월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04조의 '2년 이상의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된다'는 조항 때문에 480여명이 군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81일째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이끌고 있는 '양군모' 대표 김정훈(27세)씨는 "과거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수배생활을 한 양심수의 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군사정권의 잘못을 청산한다는 대의에 비추어서 정부는 당연히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 김형렬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pc통신 '천리안'에 '사노맹'관련 글을 올려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때문에 480여명이 군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81일째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이끌고 있는 '양군모' 대표 김정훈(27세)씨는 "과거 정치적인 이유로

알림

'인권하루소식'이 구독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같이 인권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늘어나는 발송비의 부담등으로 부득불 구독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계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팩스가 없어 받아보시지 못한 분이나 보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주1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구독료 위와 같음).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풍부화합니다.

해의 인권소식을 정기적으로 실을 예정이며, 국내 5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인권관련 기사색인 및 인권주평을 주1회 실을 예정입니다.

□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집회'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일시 : 94년 1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앞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창립 5주년 기념식 가저

·1994년 1월 5일(수) 오후 6시, 민주법연 사무실
·3대 회장에 박도현 교수(방통대 법학과) 선출(연임)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소식2호 발간

·발행일 : 94년 1월 1일
·주요내용 : 고문피해 보상등의 국회청원 소식/고문후유증의 사례(2)-김복영씨의 경우/문국진씨의 현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이전

·주소 :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지하 1층
·전화 : 263-2802 / 팩스 : 263-2803

□ '안기부 고문, 조작간첩' 김삼석·김은주씨 2차공판

·1월 7일(금) 오후 2시 311호

「인권하루소식」 12월분 총목차(58호-77호)

일일	호	면	기 사 제 목
12/1	58	1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자결권 무시한 침략 결과" 알카티리서 인권운동 사랑방 세미나 가져, 30일 오전 민주당 강수립 의원등 만나/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찬양으로/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수형생활 제자들의 군문제 해결촉구 교수단 기자회견/알림(자료집-동티모르: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 월간 '함께 걸음', '인권', 11월호
		2/3	인권하루소식 11월분 총목차(37호-57호)
12/2	59	1	세계인권선언일 전후로 인권단체 다채롭게 행사 준비중, '헌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양심수들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고문피해사례보고, 등/원진레이은 파산선고, 30일 의정부지원/민가협 열번째 목요일집회, 오늘 2시 거리음악제 마련
		2	단체탐방 5-한국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12/3	60	1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정구로 정보기관의 '도청' '검열' 제한, 1일 본회의 통과, 전화이용 폭언·협박·희롱 상대측 번호 요구 가능/"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라지 않아", 문익환 목사, 강기훈씨 등 양심수 석방 요구/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명확한 해석과 감시 필요/반민주·반통일 악법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기장총회 주최로
		2	통신비밀보호법(요약)
12/4	61	1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고문·양심수의 체포등 여전/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배병성씨 5차공판 부검의 증언/알림-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집회 등
		2,3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박원순
12/7	62	1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정법 개정 계기되어 야/부당징집 폐지 합의방문, 양군도 9일까지 국방부앞/직장내 성희롱문제 토론회, 오늘 '성희롱 공대위' 주최/공판안내/알림-조영래 3주기 추모토론회, 불교인권위 창립3주년 토론회 등
		2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청구(전문)
12/8	63	1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혁신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씨 끝내 연행, 컴퓨터 통신내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김대영·박영생 1년6월 선고
		2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변호사 이종걸
12/9	64	1	북한 적십자회, 출소 장기수 김국홍·함세환노인 송환 요구, 7일 한국적십자사에 전화통지문 보내 '엄연한 전쟁포로' 주장/국방부, 시국관련 수형자 보충역편입 거부, 인사국장 6일 보도자료 배포, 양군도 반발/경찰 김형열씨 구속, 컴퓨터통신 관련 최초
		2	단체탐방 6-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평화로운 세상 올바른 믿음의 교회 고난에 동참하는 가족공동체
12/10	65	1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이석태 변호사
		2	AI 사형집행 중지·사형제도 폐지 요구, 법무부 새정부 출범때 관례따라 사형집행 안하기로/시국 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받아들여 본회의에 넘겨/조영래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국제엠네스티 사무국 보도자료(발췌)-12월 8일
12/11	66	1	문민적 정부 출범 첫째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석방 등 이루어져야, 기념행사 줄이어,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필요-불교인권위 기념토론회, KNCC 인권위 기념식, AI 한국지부 '실종' 캠페인, 대한변협 심포지움
		2	검찰, 헛갈리는 목적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원진레이은부정 보고대회, 11일 구리민방위교육장/성명서-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KNCC 인권위)
		3,4,5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UN 인권관련 기구표
12/14	67	1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등 고소, 11월 26일 방양균씨(서경원의원 방북사건), 안종택 담당검사도 고소/"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성폭력위기센터' 문열어, 성폭력상담소/김삼석씨 고문 고발인 조사, 13일 서울지법/'장애인복지정책' 심포지움, 장애인 인권문제연구소/불교법률상담소 개설, 부산불교인권위/'원진노동자 후원회' 결성, 13일 일본
		2,3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하루소식」 12월분 총목차(58호-77호)

일일	호	면	기 사 제 목
12/15	68	1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14일 국방부 앞에서 양군도회원 등 500여명 국방부 결단 촉구/김삼석 남매 구의회 결성, 10일 일본 동경/오늘 '빈곤과 장애' 토론회, 15일 장애인 실태 조사에 앞서/알림-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 1호 발간 등
		2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한상범 동국대 교수(불교인권위 공동대표)
12/16	69	1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등 16명
		2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12/17	70	1	윤금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합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함의/pc통신 최초로 기소, 김형열씨 국보법 위반으로
		2	단체탐방 7-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우리누이 윤금씨의 아픔을 듣고 일어난 민족의 자존을 다시 찾는 작은 불씨/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엮서보내기 운동
12/18	71	1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목인/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등 13명 구속, 수사 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여전/양심수 군문제 청원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
		2,3	김삼석·김은주씨 모두진술서
12/21	72	1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김·경 무리한 수사 제동/공판안내
		2	지체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기관도 장애인의무고용 지키지 않아/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잡은 택시기사들 엄중처벌 약속받고 해산/"성폭력 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쟁
12/22	73	1	서울대교수 성희롱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공판 "신교수 성희롱 장면 목격했다" 주장/검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씨 살해범 케네스 마를 상고포기 고려/'위안부'문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 열려, 형사적 책임과 배상 등 논의
		2,3	위안부 문제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12/23	74	1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말' 1월호, 인물연구/고개숙인 실세 최형우의 진심-조유식 말지 기자(발췌)"/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양심수 석방요구 집회, 다시 갖지 않기를', 민가협 집회
		2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법적 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 시형행 마련에 참여 방침/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12/24	75	1	김선명씨 44년째 감옥살이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제시 사면복권에 들러리/성명-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가협/성명(발췌)-민주당 인권위원장 강수립
		2	발표문(발췌)-법무부/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대상자 명단
12/28	76	1	CBS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송년특집 '93년 인권상황 점검', 문국진씨 부인 윤연옥씨 첫 회 출연, '주한미군 운동본부' 공동대표 전우섭 목사, 민가협 남규선 총무 등 출연 예정/성명서-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KNCC 인권위/공판안내
		1	'고문용인 발인' 최형우 내무장관에게 사과 요구, 민가협 등 8개 단체/고문후유증 국회에 청원,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성명서-최형우 내무부장은 고문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등 8개 단체
12/29	77	2	<인권하루소식> 선정 '93 인권 10대 뉴스'-이인모 노인 43년만에 귀향, '통일되면 꼭 만나자' / 김기웅순경·배병성씨 억울한 옥살이, 사라지지 않는 가혹·고문수사/pc통신까지 구속시킨 국가보안법의 위력, 문민정부 출범 구속자중 77% 국보법 적용/UN 인권위 차별소위, 종군위안부 특별보고자 임명,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 성과/직업병 대명사 원진레이은, 치료대책 노사 합의
		3	UN 인권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장의관·김성만·황대원씨 자의적 구금 결정, 석방권고/강기훈씨 사건관련 홍성은씨 양심선언, 검찰의 협박으로 거짓진술/케네스 마를 유죄판결 및 윤금이 공대위 활약, 0.7%만이 기소되는 주한미군 범죄에 경종/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 실시, 초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의 인권보호 노력/유엔 세계인권대회 25년만에 열려, 국내 인권단체 공동참여로 모범 보여

<이달의 주제 - 고문>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44년 옥살이 김선명씨 언제까지

민가협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일집회'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

민가협은 새해에도 300여 명의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목요일집회를 매주 갖기로 하고, 6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목요일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은 관계자는 "지난 93년 9월 23일 목요일집회를 시작할 때는 93년을 마지막으로 이땅의 양심수가 모두 석방되리라 기대를 갖고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지난 24일 성탄 특사에서 서석재 등 부정선거, 뇌물공여 등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

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고, 더욱이 세계 최장기수라는 부끄러운 세계신기록에서도 1년을 더 추가하는 문민정부의 비인간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현정부의 처사를 규탄하면서, 김선명씨를 포함한 3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석방될 때까지 목요일집회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사노맹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백태웅씨의 어머니, 간첩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16년째 복역중인 김태룡씨 누님들이 나와 "문민정부라면 양심수를 더이상 차가운 감방에 가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시도 김선명씨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1월에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70세, 44년 복역)씨와 안학섭(65세, 41년 복역)씨에 대한 석방 요구 캠페인을 벌인다고 알려졌다.

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2명 또 연행 경찰, 연행장소 안 알려

6일 오전 8시 30분경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강점일(34세)씨, 이정현(30세)씨 등 2명이 금호타이어 노조사무실과 자택에서 긴급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남도경 대공과 형사들에 의해 동시에 연행되었다.

연행된 이들은 6일 오후 6시 현재까지 가족들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을 연행하면서 연행장소 등을 가족에게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씨는 연행당시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 선거가 무기연기되자 다른 조합원과 함께 노조사무실에서 10일째 단식농성 중이었다.

이중 강점일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연행때 연행되었다가 무혐의로 석방된 바 있다.

이번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들의 연행장소 등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김기용순경, 배병성씨

한편 국제 앰네스티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김두회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사회주의 과학원」, 사진 관련자 황주석씨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어 사무총장은 조국교수와 다른 사람들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사회주의 과학원」이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점과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의 무죄석방과 신인 최형우 내부부장관이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랑방' 이성훈씨 호주 외교훈련과정에 참가

'인권운동 사랑방'의 이성훈(34)씨가 1월 10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DTP(Diplomacy Training Program, 외교훈련과정)에 참가한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대학의 부설로 운영되는 '외교훈련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단체 및 진보적 운동단체와 운동가를 위한 국제연대 및 외교활동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이 훈련과정은 유엔 등 국제단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이론과 실무를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훈련시킬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 신설 결의문

편집자주: 「인권고등판무관」이 지난해 12월 20일에 유엔총회에서 신설되었다. 이 결의문의 문구가 지지자측이나 반대자측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고의적으로 애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번역이 미흡한 점은 추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의 제2부의 18절의 권고를 고려하며

1. 인권고등판무관직 창설을 결의한다 :
 - a) 높은 도덕성과 성실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고 객관적이고 비선택적이고 효과적인 고등판무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인권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지녀야 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
 - b) 유엔사무총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고, 지역별 순환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 c) 사무차장급의 위치로 한다.
2. 인권고등판무관은 :
 - a)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기구들과 국제법의 구성 범위안에서 기능하며 주권과 영토보전과 국내사법을 존중한다. 그리고 모든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시키고 모든 인권수행을 신장시키며, 이것을 숙지한 속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의 전체틀에서 모든 인권증진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진정한 관심임을 인식한다.
 - b) 모든 인권 -시민, 문화, 경제, 정치, 사회적-은,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독립적이고 상호연관되어 있음을 기준으로 삼고 국가들의 의무는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구조와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지도지침을 삼는다.
 - c) 모든 국민을 위한 균형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과 개발권 선언의 제정으로서 개발권 실현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 인권고등판무관은
 - a)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기구들과 국제법의 구성 범위안에서 기능하며 주권과 영토보전과 국내사법을 존중한다. 그리고 모든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시키고 모든 인권수행을 신장시키며, 이것을 숙지한 속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의 전체틀에서 모든 인권증진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진정한 관심임을 인식한다.
 - b) 모든 인권 -시민, 문화, 경제, 정치, 사회적-은,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독립적이고 상호연관되어 있음을 기준으로 삼고 국가들의 의무는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구조와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지도지침을 삼는다.
 - c) 모든 국민을 위한 균형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과 개발권 선언의 제정으로서 개발권 실현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5. 고등판무관에게 자신의 수입사항에 따른 활동을 매년 인권위원회에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6. 인권고등판무관의 사무실은 제네바에 위치하며, 연락사무소를 뉴욕에 둔다.

7. 사무총장은 고등판무관에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 유엔의 정규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한 실무진과 자원을 제공하고, 유엔의 활동과 발전계획으로 전용함이 없이 고등판무관의 수입사항을 이행하도록 힘을 주어야 한다.

8. 사무총장은 제49차 회기에 이번 결정의 실행에 대해 보고한다.

4. 인권고등판무관은 사무총장의 지도와 권위 아래서 유엔의 인권활동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지닌 유엔의 공직이다.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권위와 지도의 전체적인 틀속에서 인권고등판무관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a) 모든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향유를 증진, 보호시키며
- b) 인권영역의 유엔 구조의 적절한 기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신장시키는 관점에서 권고를 행한다.
- c) 개발권의 실현을 증진 보호하고, 이 목적을 위해 유엔조직의 관련기구로부터 지원을 촉진한다
- d) 관련국가와 보다 적절하게는 지역인권기구의 요구

시에, 인권분야에 대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센터와 다른 적절한 기구를 통하여 조인하고,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보조를 제공한다.

e) 인권에 관련된 유엔의 교육 및 공공정보 프로그램들을 조정한다

f) 현재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모든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전세계에 걸쳐 있는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막는데 있어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g) 모든 인권을 보다 잘 존중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수입사항을 실행함에 있어 모든 정부와 대화한다

h) 모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향상시킨다

i) 유엔 조직을 통하여 인권을 증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한다.

j) 능률과 효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인권분야에서 유엔 기구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견고하고 유효하게 한다.

k) 인권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5. 고등판무관에게 자신의 수입사항에 따른 활동을 매년 인권위원회에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6. 인권고등판무관의 사무실은 제네바에 위치하며, 연락사무소를 뉴욕에 둔다.

7. 사무총장은 고등판무관에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 유엔의 정규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한 실무진과 자원을 제공하고, 유엔의 활동과 발전계획으로 전용함이 없이 고등판무관의 수입사항을 이행하도록 힘을 주어야 한다.

8. 사무총장은 제49차 회기에 이번 결정의 실행에 대해 보고한다.

'살인미수범' 미군 병사 23일째 수사 못해

93년 12월 16일 칼로 한창열(32세, 승진운수 택시기사)씨의 목을 찌르고 달아나다 붙잡힌 미 2사단 제82전투지원대 공병대 소속 더프 리차드 씨 알, 햄 브리안 엘 등 2명의 미군에 대한 재판권행사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사건발생후 23일이 지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미행정협정상 재판권 행사가 결정된 뒤야 국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미군병사들은 지난 12월 16일 새벽 0시 20분경 한창열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중 경기도 파주군 삼릉물산 통일로 앞 도로상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씨의 뒷목을 찌르고 달아나다 지나가던 택시기사들에게 추적당해 애드워드 부대 정문 앞에서 붙잡혔다.

한편 한창열씨는 미2사단 민사처에 생활비 및 치료비를 요구해서 800만원을 수령했다.

<이달의 주제 - 고문>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말」 「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김은주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최형우 내무장관의 고문 용인발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김삼석·김은주씨 남매에 대한 2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에 서울지법 제23부(부장판사 김황식) 심리로 311호 중법정에서 50여 명의 방청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차 공판은 지난 해 12월 17일 1차 공판에 이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루어졌다(2면 참조).

김삼석·김은주 남매는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며, 특히 검찰의 공소장의 문구가 악의적인 부분이 많아 방청객들의 조소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이나 「말」지도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으로 보고 있어, 소위 '문민정부'에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공안검찰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차 공판에서 김은주씨의 방어권을 위하여 배인오씨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 검찰은 "입건이 된 적도 없으며, 안기부 요원도 아니고, 조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검찰의 발언은 김씨가 배씨의 부탁으로 사람을 만난 것이어서, 부당한 사람과 만났던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김씨만을 연행한 점에 더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날 공판에서 김삼석씨가 검찰의 신문 내용이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투쟁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은 1월 10일(월)부터 17일(화)까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주간’으로 정하고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유력층의 ‘양심수 군문제 해결촉구’ 서명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거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수형·수배 등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군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난해 12월 17일의 국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국방부가 경솔하게 수용할 것을 ‘총력주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별로 이 기간에 김영삼 대령과 이병태 국방부장관 앞으로 같은 취지의 촉구서한을 보낸다.

매일 아침 국방부 청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는

많은 혼동되므로 기록을 하면서 답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황식 부장판사는 “자기 기억에 따라 대답하면 되니 굳이 그걸 기록할 필요는 없다. 또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으니 피고인이 기억하세요”라며 거부하였다.

이들은 이 ‘총력주간’에 광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이부영 국회의원 등 4-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군모’의 ‘총력주간’은 국회의 의견서가 정부에 이송된 지 오늘로 3주째를 넘고 있어 국방부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 설정되었다.

89년 3월 25일 ‘공안합수부’를 발족시킨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 103조가 2년 이상의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바뀌어 530여명의 ‘시국관련’ 양심수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도 곧 군대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89년의 이전의 시행령 103조는 1년 이상의 형선고·2년 이상의 징역유예를 받으면 소집이 면제되었다.

◆ 알 림 ◆

□ ‘이지문 중위 환영대회’ 및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총회
·일시 : 1월 9일(일) 오후 2시
·장소 :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사무실
·주최 :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대표 한준수)

「인권하루소식」이 구독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같이 인권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늘어나는 발송비의 부담등으로 부득불 구독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제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팩스가 없어 받아보시지 못한 분이나 보판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주1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구독료 위와 같음).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풍부화합니다.

해의 인권소식을 정기적으로 실을 예정이며, 국내 5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인권관련 기사색인 및 인권주평을 주1회 실을 예정입니다.

김은주씨에 대한 검찰 신문내용(요약 발췌)

(편집자주:함귀용 검사가 김은주씨에게 직접신문을 하였는데, 내용이 많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실는다. 괄호안에 샘플체 부분은 김은주의 답변내용이다).

-가. 92년 1월 김삼석의 집에서 피고인이 일본에 직접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본어 공부할 정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자 김삼석이 내 가 지난해 4월 일본에 가서보니 운동단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들은 우리 운동가들이 찾아가면 적어도 찬반대우는 하지 않을 것 같다(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으며, 오빠보다 제가 먼저 일본에 갔었다) 일본에 가서 지난 9월 발간한 '청년과 군대'를 일본의 운동단체에 배포하여 우리 군대의 실상을 알려주면서 나의 운동역량도 평가받고 싶다(이런 이야기도 없었다) 나도 일본에 가서 한통련 기관지를 발간하는 '민족시보사'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통일문제에 대해 대화도 나누고 싶다(이런 말 한 적 없다)

-나. 92.4.하순경 피고인집에서 김삼석으로부터 일본에서 '반핵기지 국제포럼' 회의가 개최되는데 참석자는 김승국, 이상을, 김용환등 3명으로 정해졌다, 김승국이 너를 통역으로 데려가기를 희망해서 함께 가게 되어(국제포럼이 열리는 데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며, 같이 갈 사람들은 나중에 알았다).

5월 2일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반핵기지 국제포럼'에 참석하는 동안 '한통련' 부의장 김은태, 중앙본부 부의장 양동민, 대외협력국장 신귀성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을 만나고(이 포럼에 참석하고 있어서 본 것이다)

-라. 92.5.23. 권용부의 집 응접실에서 권용부로부터 "내가 보내는 사람이 서울에 가게 되면 안내를 부탁한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락하고(일본사람이 서울에 가면 안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마. 92.6.26. 한양대 앞에 있는 한마당 서점에서 서총련 노래단, 노래마을, 통일한마당 노래장면 등의 테이프 각 2개등 운동권에서 의식화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노래테이프를 구입하고(어떤 테이프인지 기억에 없다) 월간 「말」지와 「길」지를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고(「길」지는 사지

않았다) 그 내용으로는 '미국의 김영삼 대통령 공작'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연합 대선전략' 등 각종 사회문제를 비롯, 최근의 국내 정치·사회·노동·학원·재야등 각분야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사정보가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고(내용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최근호라서 산 것이다) 하여튼 「말」지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상황이 실리기 때문에 이를 권용부에게 제공할 경우 최근 국내정세 파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입하고(일본에서도 보기 때문에 국내정세 파악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산 것이 아니다)

92.6.27. 김포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왕십리역에서 한겨레신문을 보고 동신문에 '노동통령, 미국방차관 만나' '연내 공공요금 동결' 등이 게재되었음을 확인하고 권용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1부를 구입함으로써(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고 산 것이 아니며, 기내에서 볼려고 산 것이다) 비행기 처음 타본 것이니까(아닙니다) 기내에서도 신문을 나누어주는데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기내에는 한겨레신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차. 93.3.24. 김포공항으로 가던 중 왕십리전철역에서 한겨레신문을 보고 동신문에 '보수-개혁 균형 민주개편 마무리, 실세를 당운영 고무 참여를 마련' '공무원, 공공기관 정원 3-10% 감축' 등 최근의 국내정세와 시사문제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하고 권용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3부를 구입함으로써(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내에서 보기 위해 산 것이다. 3부가 아니라 1부이다)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카. 93.3.24. 김포공항에서 남누리역 상 대표 배인오를 만나(배인오가 나와 있었다) 신귀성 및 강상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잠바 및 서류봉투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하여 전달하였고

-너. 93.8.12. '잠수함호프'에서 배인오와 만나 동인으로부터 한통련에 전해달라고 '조국통일 전진촉진단결 10대강령' 등의 북한원전 소재자 2부를 건네받고(소재자 받은 적은 있

으나 제목은 모른다)

-러. 93.9.6. 피고인의 근무지로 배인오가 "근처에 와 있는데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화연락을 해서 만나, 9.8.이나 9.9경 일본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자기가 아는 사람이 일본에서 오는데 한국말을 모르니 통역을 부탁한다) 그날 오전 중에 근무지로 연락을 할 것이니 연락이 오면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 달라고 하여 동인에게 그 사람의 신문을 묻자 일본에서 '강'이라는 사람이 보내 들어오는 사람이다(그날 '강'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9.8. 11:00경 피고인의 가게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강'이 보내서 온 사람인데 지금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추석귀성표 예매소 앞에 와 있다(그 사람이 '강'이라고 말했다) 라는 전화를 받고 배인오씨가 부탁해서 오신 분 같은데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배인오씨에게 연락을 해보겠다, 10분후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한 후 배인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일본에서 은위 사람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배인오씨가 지금 연락이 안된다, 제가 나가겠다고 하자 '나는 키가 작고 상의는 노란무늬가 있는 반소매 셔츠, 하의는 녹색계통의 검은색 바지, 구두는 고동색을 착용하였고, 주간조선을 들고 돌보기 안경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인상착의를 알려주어(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것은 안기부 수사관이 말해 준 것이다. 그때 전화로는 '노랑색 옷도리에 검정색 바지, 안경을 쓰고 있으며 잡지를 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11:40경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추석귀성표 예매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접촉, 동인에게 제가 김은주입니다라며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동인이 '김정일선집 1·2'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4' 등 북한원전이 들어 있는 비닐쇼핑 가방을 건네 주며(안기부에서 연행할 때 빼어갔기 때문에 내용물을 본적이 없다) 빨리 가라고 손짓하여(이런 사실 없다) 이를 받아 현장을 이탈, 도주하다가 검거됨으로써(도주한 것이 아니라 배인오한테 전해주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가게로 오던중이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운반하였다.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고 박종철 열사 7주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씨 '복직조치', '무죄판결' 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92년 11월 29일 관악구 '청수장 여관 살인사건'으로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가혹수사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13개월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잡혀 '구속취소'로 16일 석방된 김기웅씨에 대한 법률적 무죄판결과 경찰의 김씨에 대한 복직조치, 그리고 가혹행위를 한 김·경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무죄임이 확실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혐의자인 김기웅씨에게 대법원은 1심 및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리한 수사 및 가혹수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김씨가 작년 파면직후 곧바로 제기한 파면 취소 행정소송이나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찰의 억지수사로 김씨를 살인범으로 만든 만큼 판결이전에 사실상 무죄인 김씨에 대한 경찰의 복직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검찰·경찰 고소장 내 지난해 24일 서울지검 한편 김기웅씨와 강수림(민주당 인권위원장)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담당 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

남지방경찰청 차장등 12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2·3면 참조). 김씨와 강 인권위원장은 고소·고발장에서 “억울한 살인누명을 쓰고 피눈물나는 13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고소인의 가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픔을 감내하여야 했다”면서 “다시는 고소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고소와 고

발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일(토) 「인권운동 사랑방」에 들린 김기웅씨는 “무엇보다 현재의 ‘유죄’ 상태를 벗어나는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자신 이외에도 “구속되어 있는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체험했다. 제 스스로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기 이전에 얼마나 인권보호에 무신경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이라며 “경찰에 복직하여 미려하나마 인권개선에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기웅 순경 사건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MBC ‘PD수첩’ 11일 밤 10시 55분 방영

문화방송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11일(화) 밤 10시 55분에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관-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1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붙잡혀 구속취소로 석방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다룬다. 사건현장에서 유력한 증거였던 도난당한 수표, 없어진 203호 방열쇠, 시트위의 운동화 족적 등의 수사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추적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유일하고 확실한 증거로 채택한 사체사망시간 추정의 결정적인 오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사,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밝힌다. 한편 경찰의 인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수사관행이 남긴 문제점을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한다. 또한 사건 전과정을 재현하여 협박, 고문 등 잘못된 수사관행과 1·2심 재판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PD수첩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인권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오늘 발행하려던 인권관련 신문색인은 지면관 계상 내일자 83호에 실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이 구독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같이 인권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늘어나는 발송비의 부담등으로 부득불 구독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계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팩스가 없어 받아보시지 못한 분이나 보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주1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구독료 위와 같음).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풍부화합니다. 해외 인권소식을 정기적으로 실을 예정이며, 국내 5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인권관련 기사색인 및 인권을 주1회 실을 예정입니다.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민중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이하 민정련)은 지난 해 12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근 ‘민정련’ 회원들의 구속이 잇따르자 공권력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민정련’은 ‘문민정부 시대인 지금도 잠안재우기 등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고문 및 가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 ‘민정련’은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과 대립되고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하며 *법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고 박종철씨 7주기 묘소참배
9일, 모란공원 묘지

고 박종철씨 7주기 추모 묘소참배가 9일 12시 30분 모란공원 묘역에서 가족과 교우, 진관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대 강경원 총학생회장 강경원씨의 추모시 낭독에 앞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운영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종철이가 고문으로 죽었는데 ‘문민정부’에서도 고문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고문없는 세상과 민주주의의 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14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추모식 및 기념강연을 갖는다. 이날 김근태(새정치모임 대표)씨의 기념강연과 문국진씨의 부인 윤연옥씨의 고문피해 사례발표가 있다.

◆ 공판안내 ◆

- 1월 11일(화)
 - 10시, 김주옥, 집시법 위반, 3회, 317호
 - 1월 12일(수)
 - 10시, 정형근, 국가보안법 위반, 312호, 선고, 93년 한총련 ‘전화회담’ 사건
 - 14시, 노태훈, 국가보안법 위반, 319호, 항소심
 - 1월 13일(목)
 - 16시, 이진삼, 폭력행위, 422호, 속행, 양순직 의원 테러사건
 - 1월 14일(금)
 - 10시, 임성호, 군무이탈, 서울고법, 303호, 항소심
 - 14시, 강태중, 군무이탈, 광주고법, 항소심

◆ 알림 ◆

- 김남주 시인 입영·투병중(혜장암)-고려병원 623호
- 김남주 시인 돕기 모임(국민은행 019-21-0596-067 예금주:이승철)
- 전화 : 313-1486(작가회의, 이승철)

□김기웅 순경 □ 고소·고발장

고소인 성명 : 김기웅
고발인 성명 : 강수림

피고발인

- 1) 경무관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 2) 경 정 김종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3) 경 정 김승곤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 4) 경 감 이희승 관악경찰서 방법 순찰대장
- 5) 경 위 이양구 경찰청 수사2과
- 6) 오수길
- 7) 경 위 윤승렬 관악경찰서 강력반장
- 8) 경 사 김경록 은평경찰서 불광1파출소 부소장
- 9) 경 장 이재억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 10) 경 위 김영길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 11) 성명불상 1인 키 180cm정도, 눈이크고 신체 건강
- 12) 경 사 김홍일 서울지방경찰청

고소·고발의 이유

억울한 살인누명을 쓰고 피눈물나는 13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고소인의 가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픔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 공갈, 폭행, 잠안재우기, 공문서 은닉, 직무유기 등을 일삼아온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고소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고소와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고소·고발 내용

1. 김종우는 92년 11월 29일 관악구 신림6동 소재 청수장 여관 203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관하여 관악경찰서로부터 12월 1일 18:00시경 고소인을 서울경찰청 강력과로 송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고소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12월 1일-12월 4일까지 갖는 잠안재우기 고문과 폭행을 지시하고,
2. 김종화는 1992. 12. 1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고소인이 가족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5-6차에 걸친 거부로써 접견권을 침해하고, 가족에게 탄 말을 하지 말라는 조건부로 형사 20여명이 둘러서서 위협하고, 아버지와 누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서에서 자백한 대로 말해’ ‘그대로 말을 안하면 시경 특수대로 넘겨서 무섭고 혹독하게 고문을 시킬 것이다’ ‘그리로 가면 꼼짝없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된다’ 라고 협박하고 부하직원인 피고소인 이양구, 오수길, 김경록, 김영길, 이재억, 성명불상 1인 등을 시켜 고소인을 불법 감금, 폭행 그리고 잠안재우기 등 고문을 자행한 자임.
3. 김승곤은 1992.11.29.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중으로서 고소인이 12.1. 10시 사이에 3-4회 걸친 면담시 ‘저는 절대로 범인이 아닙니다’ ‘가족과 한번만 면담회를 시켜 주십시오’ 하고 통사정하였으나 콧방귀를 치며 ‘지랄하고 있네.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 ‘헛소리 하지 말고 까불지마 임마’라는 등 수사책임자로서 짜맞추기 수사에 급급하였으며, 피고소인 윤승렬, 성명불상 관악서 형사 등을 시켜 잠안재우기 고문을 시키고 눈이 저절로 감기면 발로차는 등 벽에 기대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12.1 17시까지 불법감금, 폭행, 고문 등을 자행하였으며, 4 이희승은 관악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1992. 11. 29. 10시 관악구 신림6동 소재 청수장에 발생한 살인사건을 인지하고 강력반장 윤승렬등 관악경찰서 형사계 형사 20여명을 지휘, 감독한 자로서 1992.11.29. 10시부터 12.1. 17:00시까지 불법감금, 잠안제우기 등 가혹행위를 지휘하면서 '재판부에서 누가 너의 말을 믿어 주겠느냐' '국과수에서 하는 말을 더 믿지'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와 네 가족은 게임이 안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안죽었다고 고집피우면 살인죄로 처벌되고 너는 경찰관이니까 언론을 타게 되어 재판받을 필요도 없이 언론의 영향으로 20년 이상 징형으로 때린다' '아예 한술밥 먹는 우리가 처음부터 조서를 잘 꾸며주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부검도 너에게 유리하게 해주 수 있다. 아무 걱정 말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우리가 이런 저런(일)을 한두번 하는 줄 아느냐. 우리를 믿어라. 같이 한술밥 먹는 직원이니 우리를 믿어라' '강력계 형사들은 아주 무섭고 혹독한 고문을 한다. 몸이 약한 너는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한다. 결국 너는 30년 형으로 된다' '우리가 탄원서 써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마' '과실치사나 폭행치사로 하면 집행유예로 나가게 해주겠다' '왜 바보같이 감옥에서 30년을 살려고 하느냐. 너는 살인범이니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라는 등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잠을 못자게 하는 고문을 자행하였으며, 11.30. 21:00시경 피고발인은 밖에 시경 강력계 형사들이 혹독한 고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인계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고소인은 피고발인의 버지를 잡고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절대 범인이 아니에요'라고 수없이 매달리고 호소를 하였으나 '웃기지만 이 새끼야 각오하고 있어'라는 등 불법감금, 폭언, 협박, 회유를 한 자임.

5. 이양구는 1992.11.29.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장으로 재직중이던 고소인을 용의자로 무조건 지목 단정하고 은폐수사하면서 상기 이희승과 합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협박, 회유, 폭언,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으며 잠을 계속 못자게 하면서 혹독한 고문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조성하였으며 시경경찰 강력과로 이송된후 밀실에 가두고 수차례 걸쳐 밀실로 와서 '너의 아버지 고향도 충청도이더군, 나도 너의 아버지와 같은 고향이니 내말을 믿고 살인죄로 되면 큰일나니까 고집부리지마라'면서 회유하고, 상기 이희승, 윤승렬과 합석하여 '우리가 서울경찰청에 데려가기 전에 여기서 말을 들어야지, 시경으로 가면 너의 체력으로 절대 못견디어, 쓸데없는 고집부리지 말고 자백해'라는 등 자백강요와 협박, 회유,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으며 '구치소에 가면 책 많이 읽어라, 내가 책도 넣어주고 면회도 갈게, 그리고 경찰보다는 사안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니 노력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길이 있어, 내 친구도 리어카 팔면서 고물장사하다가 지금은 운전기사 두고 자가용 굴리고 있지, 그 친구를 만나면 내 자신이 경찰이라는 게 후회된다, 그러니 너도 경찰에 대해 미련 갖지마, 오히려 이런 기회가 너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이 사건은 폭행치사로 마무리되었으니 작은 돈으로 합의하여 해줄테니 변호사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다'라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밀실에서 회유하면서, 잠을 못잔 고소인이 졸려서 눈을 감으면 옥박치고 눈을 뜨고 대답하라고 때리면서 발로 차는 등 고문과 불법감금을 자행한 자임.

6. 윤승렬은 1992.11.29. 관악경찰서 강력반장으로 현재 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로써(중략) 과실치사사로 하면 1-2년 형이 되고 우리들이 중간에 합의하여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주면 10개월내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으니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등 협박, 회유, 고문, 불법감금을 자행한 자임.

7. 이재억은 김경록과 공동하여 1992.12.1. 서울경찰청 강력과에 재직하였던 자들로서 1992.12.1. 14:00시경 신림9파출소 숙직실에서 고소인에게 2번째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기에 고소인은 '나는 죽인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런 씨새끼가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빨리 자술서 작성해, 이런 새끼말은 들을 필요없어'라며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폭행과 폭언을 하였으며, 이때 고소인은 '정말입니다, 저는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왜 신고한 나를 조사합니까, 여관에 투숙한 사람들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수갑이 채워진 고소인을 또다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눈을 부릅뜨고 주먹으로 내리치자 옆에 있던 2명이 동료들이 말했으나 고소인의 손을 위로 젖히고 수갑을 채워 파출소의 1층과 2층 그리고 정문밖까지도 끌고 다니면서 치욕감을 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 새끼 밀실로 끌고 가서 잠재워 버려야겠어, 너 이 새끼 죽을 준비하고 있어, 너는 죽는 목숨이다'라고 폭행, 공갈, 협박, 불법체포, 감금하였으며 12.1. 17:00시경부터는 서울청 강력과 밀실로 강제연행하여 성명불상 1인(키 180cm가량 눈이 크고 신체 건강함 검정색 가죽잠바 차림)과 합석하여 목을 옆으로 비틀고 당수로 뒷목을 힘껏 내리치면서 '너 이새끼 고추가루 물고문 들어왔지, 너하기에 달려 있어, 저런 새끼는 말이 필요없어, 죽어야돼 잘해주면 안돼'라면서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는 고소인을 의자에 앉혀놓고 양손에 수갑을 각각 채워 손잡이에 시승하고 양손을 위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눈을 뜨고 앞만 쳐다보게 하는 고문을 자행하였다.(중략)

8. 김영길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감식계 근무경위로서 1992.11.29. 14:30분 사건현장에 입장하여 현장임장 일지를 작성하였으나, 즉시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철하지 않고 뒤늦게 제출하여 공문서를 은닉한 자임. 현장임장 일지를 즉시 편철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국과수에 92.12.4.자로 통보한 사체소건중 '사체경직이 현저하며 지관절까지 경직이 나타나 있다'는 내용(수사기록 36, 기안자 김영길)에도 없던 내용인데 아마도 이는 현장 임장일지대로 '완정 경직 시반 배면 전신'일 경우 사후 경과 7-8시간까지, 즉 07:00 - 08:00시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공판기록 236 참조) 전문서적을 보고 사후 경과시간이 10-12 시간이 되도록 사체소건 내용을 고쳐 통보한 것으로(공판기록 236참조) 의심되는 내용이며 또한 기물 보일러를 11.29. 07:00-09:00까지 2시간동안만 가동했다고 청수장 여관 주인이 진술하였음에도 11.29. 15:30분까지 보일러가 계속 가동된 것으로 공문서 허위작성, 공문서를 은닉한 자임.

9. 검사 김홍일은 1992.12.4.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송치된 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고소인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망 이현실이 소지하고 있던 4개의 수표추적 요청과 거짓말 탐지기의 반응검사, 유전자 감식, 침대위의 족적 2개소, 분실된 청수장 203호 열쇠의 행방추적, 사건현장의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 미진, 중대한 살인사건을 검사의 직접신문이 아닌 입회계장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한 자임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고 박종철 열사 7주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10일 KNCC 인권위 북한 가족들의 편지 통일원에 보내기도

작년 3월 이인모씨 송환에 이어 김인서·함세환·김영태씨에 대한 복송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목사)는 지난 10일 이영덕 통일원장관에게 "김인서·함세환씨를 송환하는 일이 남북의 대화와 교류에 도움이 되는 일"이며 이들에 대한 송환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편 '한교협 인권위'는 10일 '김영태노인 송환 및 가족상봉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북한 점령지역의 재야단체들이 '김인서·함세환 노인 송환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통일원장관, 국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등에 두 사람의 송환을 호소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7일 북한 적십자회 이성호 중앙위원장 대리는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들에 대해 "엄연한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면서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억측한 옥살이 김기웅 순경 대법원에 탄원서 "무죄확실한만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

김기웅씨는 1월 11일(화) 대법원에 계류중인 자신의 사건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을 냈다. 김씨는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는 것은 인권보호라는 법의 기본이념이 무시되는 것"이며, "그동안 받은 악몽을 피고인석에서 다시 되새기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이 구독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담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같이 인권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지회들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늘어나는 발송비의 부담등으로 부득불 구독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제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팩스가 없어 받아보시지 못한 분이나 보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주1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구독료 위와 같음).

<이달의 주제>에 실을 글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매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월달의 주제는 고문입니다. 고문근절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글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알림 ◆
-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이전
·주소:(137-070)서초구 서초동 1575-1 고려빌딩 301호
·전화:522-4706, 팩스:523-7381(전화·팩스는 전과 동일)
- <평화의 일꾼>(94년 1월호)-천정현 장기수 후원회
·내용:후원회 모임안내(제2회 통일 찾는 잔치-1월 22일 오후 5시)/후원회원 글(부끄러움과 포근함에 대하여 등)/성탄절 특별사면(?)/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설날 선물용 십전대보탕(가격 4만원) 판매
·출소장기수 운영 민중탕제원(969-8726)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별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 >안의 숫자는 월,일을 표시하며 ()의 영문은 주요 5대일간지인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을 지칭합니다. 범례/ <1.1>(D) "1월1일자 동아일보"

-인권일반, 법, 사법제도, 판례-

- <1.1>(D)신년사/사법제도개혁 지속적 추진/윤관 대법원장
(D)신년사/법치주의 구현 모두 힘쓸때/조규광 헌법재판소장
(HA)사설/"양심선언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 <1.4>(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서준식씨에게 듣는 인권과제/"고문·가혹행위 뿌리채 뽑자", 조기 인권교육 중요, 형법 개정등 제도적 결실 이뤄져야
(D)상고허가제 위헌발상/대한변협 제도입반대
(J)사법개혁 「사공」 많아 난항/변협·변리사회·검찰 자기 주장만/대법 "집단이기"수용못해"
- <1.5>(C)대법, 「변협건의서」 반박/공식성명 '상고심사제 반대는 職權이기주의/양측 갈등 커질듯
(HA)대법원, 상고허가제 강행/내달 제도발전위 상정/1.2심 동일판결 사건들은 불허
(HA)사설/상고허가제에 앞서 할일
(D)변협-사법위 「개혁논란」/제도개혁안 짜고 의견대립 노골화
(D)사설/상고허가제를 실시하려면
(J)사법개혁 변협건의/대법, 강력비난
(J)사설/대법원과 변협의 장외대결
- <1.6>(H)기자의 눈/사법제도개혁 불협화음
(D)대법원-변협 감정싸움 어디까지.../「상고허가제」 부활싸고 치열한 공방/"수입로 의식한 집단이기주의" 대법/"3심제원칙 부정 위헌적 발상" 변협
- <1.7>(D)국선변호인 선임폭 확대/월소득 70만원이하-농어민 혜택/대법원 시행
(HA)국선변호인 선임자격 넓힌다/대법원/월소득 70만원이하 피고인도 가능
(C)국선변호제 대폭활성화/월수입 70만원미만 근로자등 청구가능/대법원 예규개정
- <1.8>(H)특별기고/대법원을 살리자
(HA)사설/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향
- <1.9>(HA)대법원 부조리 개선안/감사활동 대폭강화 문책범위 확대키로
(HA)법관 신규임용 늘리기로/사법제도 변화로 수요 늘어 85-90명선/대법원 15-17일 신청접수
- <1.4>(J)국제화맞춰 법·제도 대폭 정비/환경·노동·소비자보호등 우선/행정규제 완화
- <1.5>(C)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도입/상반기/심리 1-2회로 종결..시간은 늘려
(D)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도입/윤상기중/1-2회 재판으로 신속종결
- <1.6>(H)교통사범등 경미한 범죄 불구속상태서 재판키로/서울형사지법
(D)파실범 불구속 재판/서울형사지법/영장심사 개선안 2월 시행/증거확보-도주우려 없는 경우 사안 관계없이 영장 기각키로/편의위주 구속수사관행에 쫓겨
- <1.4>(D)"시위피해 보험금지급 파망"/"소요 혁명사태로 불수없다"/서울민사지법/화염병피해 회사 승소 판결
- <1.10>(H)해외도피자 공소시효 정지/"범죄후 형사처벌 회피", 방지차원/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방침

-고문, 가혹행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4>(D)이혼요구 장애인아내 살해/20대영장/범행위장위해 부인 심장동 기증
- <1.6>(HA)아내 치어 숨지게한 용의자 살인혐의 입증안돼/단순교통사고로 구속
(HA)동네방네/"배짱수사"로 덮여온 살인혐의
(H)또 「케맛추기 살인」 물의/"장애아내 살해"는 고의아닌 과실輪禍/눈 기증은 유언/경찰 무리수사
(D)"장애아내 살해"고의없었다/"남편 특수차 조작범 몰라 사고"판명/장기 기증도 부인뚫/경찰 살인혐의 적용안해
- <1.8>(C)독자/나의 비평/"장애아내 살해, 오보 사과들
(H)장명수 갈림/케맛추기수사
- <1.6>(H)독자/"경찰 살인누명, 어처구니 없어
- <1.10>(J)"살인범 몰린 경관, 사건 조명/M-TV 11일 「PD수첩」
- <1.8>(HA)"편파수사로 옥살이"교사/검찰 수사관 처벌 요구
(C)"억울한 옥살이" 전직교사/검찰수사관 고소/"조사중 폭언-협박..편파수사"
- (H)검찰이 고소인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현직교사 억울한 옥살이/대법서 무죄판결

- <1.10>(HA)동네방네/검찰 정실수사 피해 어디서 보상받나
- <1.9>(D)"억울한 옥살이 6개월, 50대 주부의 절규/"깨진 가정 누가 책임지나"/땅사기꾼 몰려 수감..무죄판결/총격에 아들 자살 남편은 별거/경찰 무혐의의견 검찰서 목살
- <1.6>(H)"이근안 비호세력" 추적/검찰 수사자료분석 검거박차/"대공,팀 유대강해 은신처·돈 제공 가능성/"사망·해의밀항·독립행동설은 회박" 판단
(HA)이삭/"이근안 목격"제보에 출동 소동
- <1.9>(HA)만화초대석/올해엔 교육.../고문기술자 이근안
- <1.10>(HA)사진-박종철씨 7주기
(J)고 박종철 추모강연회 개최/이부영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 <1.9>(HA)사진/경찰 여대생에 발길질
- <1.10>(HA)대학생 폭력진압 처벌/서울경찰청 검찰조사/지휘관도 문책
(HA)동네방네/국민관심 식었다고 폭력진압 하다니
- <1.5>(J)이전개 전고검장/정신병동에 수용/지난해 11월말
(D)형설수설(이전개 정신병동 입원관련)
- <1.10>(D)경찰관도 실명시대/담당자 쉽게 찾도록 책상마다 이름표/형사들 "책임 더 막중"/시민반응 좋아
- <1.9>(D)안기부도 「경쟁력」 갖춘다/김덕부장 신년훈서서 "국제화 대비"역설/"부내 경쟁체제 도입"등 새 위상정립 관심
- <1.10>(HA)안기부, 국제화전략 따라/해외경제요원 30명 특채
- <1.4>(HA)독자/사면복권된 전과 정정 지연/10개월 지나도록 경찰 신원조회에 남아
- <1.5>(J)독자/수감때 모욕감주는 검사 개선율
- <1.6>(HA)피의자 전화규제 구태 상존/경찰, 영장발부전 외부통화 엄격제한/대기실선 사용배려..「선심허락」 일쑤
(HA)독자/공안사범 인권침해 여전/교도소내 처우 '개악' 군사문화적 발상
- <1.9>(HA)독자/출소자 공업단지 세우자/'전과자' 취업보장으로 살길 열어야
- <1.7>(HA)사노맹 관련 2명 또 구속

-불처벌, 의혹사건, 의문사, 군대-

- <1.4>(D)국회, 백범암살 조사착수/법사위/오늘 안두희씨 소환
(HA)안두희씨 증언듣기로/백범 시해진상규명소위
(J)국회, 백범시해 진상조사 착수/법사위, 안두희씨 소환
- <1.5>(HA)사진-병상누운 채 증언
(HA)"백범암살 장은산이 지시"/안두희씨 국회증언/법사위, 정부에 관련서류 제출요구
(HA)국회법사위 백범암살 조사활동 시작/이승만·미국 개입여부 초점/안두희씨 국회차원 첫조사/증언 새로운 사실 없어
(D)사진-안두희의 「눈물」
(D)백범암살 배후 신성모씨등 지목/안두희씨 국회증언/"범행 1주일전 이대통령 만났다"
(D)조명/안두희 끝내 입다무는가
(J)안두희씨 들것에 실려 국회출석/실어증으로 「백범시해」 증언못해
(J)취재일기/증언선서도 못한 안두희씨
- <1.6>(H)장명수칼럼/암살자
- <1.9>(HA)더불어 생각하며/역사의 심판은 '보복'이 아니다/권중희
- <1.10>(D)독자/안두희조사 검찰에 맡겨 역사진실 밝히라
- <1.8>(HA)화제의 무대/극단 토박이 '모란꽃'/아몰지 않은 5월광주 아픔 담글질
(HA)더불어 생각하며/6.25 양민학살 이제는 밝혀야 한다/최강선

-중군위안부, 성폭력,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 <1.7>(H)일, 중군위안부 보상안 연내 마련
- <1.6>(HA)재해를 여는 사람들/성폭력위기관리 '지킴이' 이제서씨/"성폭력, 남자가 함께 풀어야"/여성문제 생각하는 남자 많을 때 사회구조 변해
- <1.7>(J)"남성에도 육아휴직을"/여성개발원, 제도 개선방안 발표/"애보기는 엄마의 몫" 발상은 여성고용 꺼리게 하는 요인
- <1.10>(J)스웨덴의 육아제도/부부교대로 15개월 육아휴직/"가정이해 깊어지고 활력" 남편 9% 참여/최소 한달간 아빠가 키우게 법추진
- <1.4>(HA)탁아시설 1백20곳 신설/서울시/4천여명 이용가능
- <1.10>(D)나의 의견/신축아파트 탁아시설 의무화하자/김애실
- <1.4>(HA)"개가 시각장애인 길안내"/특수장구 통해 장애물등 주변상황 전달
- <1.5>(D)맹인인도전 무료기증운동/삼성그룹 캐나다산 2마리 첫 국내사육/훈련 어려워 1,000마리중 1-2마리 성공

- <1.6>(H)盲導犬 「국내훈련」시대 열렸다/삼성서 성공 2마리 무료기증/“시각장애인의 눈”역할 푹푹히
- <1.9>(J)“맹도견 무료로 드립니다”/수원, 이삭애견훈련소 이형구씨/5마리 키워 맹인목사·교사에 기증
- <1.8>(C)“장애인끼리 경멸 표현 이제 그만”/수화도 「국제화」바람/美서 동양인·흑인 차별 수화 개정착수

-노동, 산재, 환경-

- <1.5>(D)생리휴가 무급전화 추진/노동부 「출산유급휴가」 90일로 확대/여성단체등 반발예상
- (C)유급출산휴가 12주로/생리휴가는 무급 전환/노동부/남편 간호휴가도 추진
- (HA)「출산휴가 90일·생휴 무급」 추진/노동부/남편 육아휴직도 검토/생휴 유급폐지 논란
- <1.6>(HA)사실/모성보호 외면한 「근로여성 복지계획」
- <1.10>(H)생리휴가 무급화 여성계 논란/“기업부담 줄여 고용촉진”-“현실무시 성급한 조치/여론수렴과정 정부안 진통 겪을듯
- <1.1>(J)재계 「변형근로시간제」추진/주·월로 합산한 후 시간외수당 지급
- <1.4>(HA)상당수 업체 파업중 임금지급/전노협 93년조사/전액지급 50%·일부 14% 달해/‘무노동 무임금’ 행정지침 실효 없어
- <1.5>(HA)사실/‘무노동 무임금’과 현실 사이
- (HA)노동현장/올 노사관계 기상 맑지 않다/물가·노동법개정 등 마찰요인 많아/제야노동계 임무활성과 준비 박차
- (D)올 노사관계 악재 많다/물가 연초부터 「뺨박질」, 임금인상률은 「내리막」, 노동관계법 개정 「불씨」/실업률 0.1% 높아질듯/노동연구원 전망
- (J)대기업 노사분규 긴급조정권 적극 활용/노동부, 노사관계 개선안 마련/자율타결 안될땐 즉각 발동/정의행위전 직권중재등 예방활동도 강화
- (J)긴급조정권 적극활용 왜 나왔나/악성 노사분규방지 교육책/임금협상 4-5월까지 매듭유도/하반기엔 본격 경제활성화 추진
- <1.6>(HA)재벌 노사안정대책 고심/“임금 대폭인상 어렵다” 판단/인사 후생 복지 개선치중
- <1.8>(D)‘94경제과제(4)/물가불안이 물고골 「노사불안」/서비스료등 인상 임금협상 압초/노동관계법 개정 논란도 변수로
- (HA)조선노협·현총련·전노대 내사착수/노동부·검찰/공공임금교섭등 연대유지임 차단/위법 드러나면 사법처리 강경 대응
- <1.9>(H)“임금가이드라인 올해도 없다”/정 부총리/노사단체 자율합의로/물가등 안정기조유지에 주력
- (HA)정부·노동계 간담회/노동계 “물가 임금협상에 반영”/정부 “가이드라인 조기 설정”
- (HA)노동계 임금협상 늦출듯/노총·전노대등/“물가불안지속 조기교섭 무의미”/상반기 마무리 정부방침 치질 예상
- (HA)사실/심화되는 권력과 노조의 대결구도
- (HA)정부, 대규모사업장 노조연대 강경대응 파문/노동정책 보수회귀 신호탄/노사안정 명분 3자 개입금지 적용 들먹/조선노협·전노대등 저지루쟁 불사 주목
- (J)연초부터 물가 줄줄이 인상/올 임금협상 난항 예상/“노사간 합의 의미없다”/정부참여 3자협의안 추진/노총
- <1.10>(D)노동관계법 개정 하반기로 또 연기/노동부
- (HA)노동법 개정 하반기로 연기/임금협상 조속 마무리 급선무 판단따라
- (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최은석씨 소망/“노동악법 개정 절실”/제3자 개입·복수노조 금지 등 철폐해야/개방·국제화 빌미 노동통제 악용우려
- <1.5>(HA)자보노조 35일째 밤샘농성
- <1.6>(HA)서울 노동청/한국자보 노무관리 진단/부당노동행위 여부등 조사키로
- <1.10>(D)“정당도 직장·급여제 도입하자”/당직자 요구에 곤혹스런 민주·정책정당 탈바꿈위해선 불가피/노조결성 통제력 약화될까 우려
- <1.5>(HA)산재율 높은업체등 30곳 안전보건계획 대상 선정
- (J)안전관리자 형사책임면제/사업주에 조인임무 다했는지만 문도록/노동부 지침시달
- <1.8>(D)인간공학으로 직업병 막는다/의자 작업대등 체형따라 설계/피로줄고 생산성올라
- <1.9>(J)일본 남성 파로사 무방비/년 2천5백시간 노동/경제기획청 보고
- (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광원출신 도의원 성희씨씨 소망/“진폐환자 치료확대를”/해마다 3백명이상 사회무관심속 방지
- <1.5>(D)환경파괴논란 군훈련장 인제군에 설치 확정/그린피스와 연대 적극저지/환경연합
- <1.6>(D)군훈련장 설치발표 인제군민 거센반발/“생존권 수호차원 강력저지”/국회호소·시위·자녀등교거부등 계획
- (HA)“인제 군사훈련장 반대”/환경운동연합 성명
- (HA)20세기 사람들/데이비드 맥타가트/핵폭탄 속으로의 항해.. ‘그린피스’ 선봉장/축망받는 사업가에서 환경운동 상징으로/목숨건 저항통해 대기권핵실험 중단 성과
- <1.10>(J)그린피스 레인보우호 4월 한국서 환경운동/‘반핵의 달’선포등 다양한 활동계획
- <1.7>(C)동해해투기 공동조사 연기/3국이전·2월이후로
- <1.10>(J)동북아해양오염 방지 5개국협력기구 추진/정부/일·중·러등 참여
- <1.8>(C)‘환경운동기금’설치 추진/민간단체 재정지원/기부금에 세제혜택/환경저

-통일, 평화·군축, 국제-

- <1.6>(HA)제미언론인 심재호씨 북한을 가다/북·미 이산가족 편지교류 빈번/백갈등 심해진뒤 가족재회는 주춤/월북자들 “남녘고향 그림자” 눈시울
- <1.9>(HA)33년 비전향 장기수 가족상봉길 열려/김영태씨 3국서 북한주민 접촉 승인
- (HA)그림으로 본 뉴스/북한서 가보고 싶은곳 ‘88%가 백두산’
- <1.10>(HA)세해 종교인 남북교류 길넓힌다/기독교협 내달 북한대표 초청계획/김추기경 방북 이뤄질까 관심쏠려/‘북한 선교수복지구’ 시각 교정시급
- (H)‘민족통일 중앙협’ 5백60명 설문/한국인 61% ‘10년내 통일’ 예상/통일논의 너무 정부중심적 43%/국제변화에 비해 남북 경색 70%
- (J)이산가족 상봉 위해 판문점 면회소 추진/이 통일부총리
- <1.5>(D)“북인권 거론할때 됐다 현단계선 이산가족문제부터 풀어야”/이 통일부총리 밝혀
- <1.6>(J)“북한인권 거론할때 됐다 원칙안맞으면 대화불용”/이 부총리
- (J)취재일기/시의안맞는 통일장관의 발언
- (HA)“북한인권 적극 제기”/이영덕 부총리
- (H)“북에 인권문제가할것 남북대화 원칙 어긋나면 불용”/이 통일원 밝혀
- (H)“이영덕통일원, 변화하는가/대북정책 갈등지양 조화역점/“북에 싫은 말도 하겠다” 보수색도/관련부처와 업무영역엔 융통성
- <1.7>(D)사실/새 통일원장관의 현실감각
- <1.8>(D)이 통일원 북인권 거론/북, 남북대결격화 비난
- <1.1>(H)인체방사능실험 전 서류조사 지시/에스핀 미국방
- <1.5>(HA)미국방사능 인체실험 70년대까지 계속했다/미 하원의원 폭로
- (J)방사능 인체실험 70년대까지 계속/미국/미 하원의원 폭로
- (D)미 70년대까지 방사능 인체실험/7백여명에 플루토늄 주사/마키의원 폭로/30여년간 31건 체계적 실험/백악관 “진상조사후 피해보상”
- <1.6>(D)방사능 인체실험 피해 소송비 4백억원 지불/미정부
- (H)미 방사능인체실험 파문확산/민간연구단체 “CIA서 자료폐기” 폭로/피해자들 정부상대로 집단소송 낼듯
- <1.8>(H)정박아 2백여명 동원/미, 신약품개발 실험
- <1.6>(HA)고엽제피해 미회사 상대소송/텍사스 주법원/내국인 2백4명 3억달러 배상요구
- (H)고엽제 후유증 2백여명 美社 상대 3억불 손해소/‘3천만불에 소취하, 제의 거절
- (D)고엽제 미사 소송 來4월개 첫재판
- <1.4>(HA)세해 첫날 ‘원주민폭동’ 멕시코 유행 57명 사망
- (D)세해 지구촌 표징/테러.. 폭동.. “아득한 세계평화”/멕시코 정부군-마야족 충돌 50여명 사망
- <1.5>(C)사진-삼엄한 멕시코 거리
- (HA)멕시코 ‘농민봉기’ 확산 1백명 사망
- (HA)멕시코 ‘원주민’ 무장봉기 배경/빈곤·차별로 ‘벼랑’물린 절규/‘나프타’로 생업인 농사 불가능 생존위기/야당·교회도 동들려..요구 관철 힘들듯
- <1.6>(HA)멕시코봉기 거의진압
- (J)농민반군 거점 폭격·소탕작전/멕시코 정부군
- <1.8>(HA)지구촌풍경/농민봉기 호도하는 멕시코정부
- (C)멕시코, 농민점령지 모두 탈환
- (C)세계를 보는 눈/“붉은 이념” 부활한 멕시코 폭동/봉기날짜-동시다발등 작전계획 치밀/나프타에 불신가중..정치-경제등 개혁시급/옥타비오 파스
- <1.9>(D)멕시코농민군 수도위협/모든 공항 경계명/반군 “계속 진격”
- (HA)멕시코봉기 테러화/송전탑 파괴..공함에 비상경계령
- <1.10>(H)멕시코 수도 잇단 폭탄테러/군부대·상가·송전탑등서 폭발사건/농민군 확산위험후
- (H)세계의 조류/LA타임즈/“멕시코소요” 협상통해 해결하라
- (C)멕시코시티 3차례 폭탄테러/군부대·상가·송전탑서/반군 “주요등 3명 중재면 협상” 전문
- (HA)멕시코 대규모시위/해방군 휴전제의실
- (D)멕시코시티 폭탄테러 확산/군부대 상가 송전탑등 피해/농민군, 맨추 중재조건 협상제의
- (D)반군지도자 마르코스 누구인가/25세 직업혁명가..외국어 능통
- (D)멕시코 사태 원인과 전망/원주민정책 변화없을땐 장기화/극심한 차별·빈곤에 반발/인접국선 “불통 될까” 우려
- (J)멕시코시티 잇단 폭탄테러/이틀새 6건/정부군, 장기계달라선 태세돌림
- <1.5>(D)베네수엘라 재소자 유행충돌/백50여명 사망

<북한 핵관련이나 남북회담등 통일관련 기사색인은 분량이 많아 생략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고 박종철 열사 7주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엄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연초부터 철거나서 주민들과 충돌

양천구 신정5지구 재개발지역 경찰, 주민들만 연행조사중

연초부터 재개발지역 대상 주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왔을 위험에 처해 있다. 12일 오전 9시 서울시 양천구 신정 제5지구 재개발 지역에 '경비용역' 전문업체인 적준개발 '직원' 70여명이 신정 7동 제5지구 재개발지역(일명 칼산 재개발지역)에 대한 철거작업에 착수하자 이에 '칼산 철거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문근식)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임산부인 유남숙씨 등 주민 3명, 적준개발 '직원'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주택 3채가 전소 혹은 반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근식, 김경선, 양상호씨등 주민대표 3명이 현주전조물방파,

치상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양천경찰서의 한 경찰관에 의하면 경찰은 문씨 등에 대한 구속을 종신할 예정이다. 문씨 등이 받고 있는 '방화' 혐의에 대해서 신정 재개발 지역의 한 주민은 "조직폭력배로 구성된 적준개발이 집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주민들이 불을 질렀

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문씨 등에 대해 치상 혐의를 두고 있는 반면 신정7동 주민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겠다"만 밝히고 있다. 한편 양천구청장은 지난 해 11월 19일 이 지역에 대한 철거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동절기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외국인노동자도 기계는 아니다”

13명 경실련서 10일부터 농성중 산재치료·보상등 요구

네팔·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13명은 *체불임금 지급 *국내 산재보상법에 준하는 산재치료와 보상 등을 요구하며 10

터 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은 호소문에서 “한국에 노동하러 왔다가 공장에서 산재해해를 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며 농성이 유효를 밝히고 있다(2면 참조).

또 이들은 잦은 구타와 폭행에 시달렸다면 지난 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많은 한국인이 이국땅에 나가 고난을 받았던 심정을 생각하여 가난한 나라에서 온 자신들을 사람으로, 이

웃으로 맞아주길 호소하기도 하였다.

'소사장제' 반대 단식농성 '경기유리' 노조위원장

경기도 미금시 소재 '경기유리' 주동회(41세) 위원장은 11일부터 노조탄압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소사장제'를 반대한다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유리'(사장 엄기영, 61)는 지난해 12월 31일 노조비상총회에서 '소사장제'는 노조와 검토한 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 제11회 여성동아대상 수상

월간 「여성동아」는 지난해 한해동안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여성에게 주는 '여성동아대상' 제11회 수상자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을 선정하였다.

'여성동아'는 최영애씨가 지난 91년 4월 최초로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한 이래 성폭력문제를 여론화하고 피해자를 돕는데 앞장서왔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 알림 ◆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민가협 목요일집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
·13일(목) 오후 2시 탑골공원앞

□양심수 군문제 해결 기금 마련 토종골 등 판매
·지리산 토종골/북한술 및 진도홍주 판매(즉시 배달)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784-4665)

「인권하루소식」이 구독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같이 인권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늘어나는 발송비의 부담등으로 부득불 구독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계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팩스가 없어 받아보시지 못한 분이나 보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주1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구독료 위와 같음).

<이달의 주제>에 실을 글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매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월달의 주제는 고문입니다. 고문근절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문해진 고문현실 (Torture moves into the shadows)” (요약)

-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 -

영국 옵서버신문 : 국제앰네스티 베엘 싸네 사무총장 인권선언일 인터뷰

93년 12월 12일,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베엘 싸네 사무총장은 영국의 유명 일간지 Observer(옵서버)지의 인권선언기념일에 맞춘 인터뷰에서 “냉전이 끝난 지금 세계는 확실히 더 불안한 상태다. 지구 모든 곳에서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싸네 사무총장은 많은 나라 정부들이 인권 침해사실을 감추고 좋은 이미지를 선전하는 기술이 점점 세련되고 있다고 평하면서, “정부들은 자국의 피자유 어린 인권침해기록이 그들의 국제적 위신에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인권기록을 만들어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긴다. 거짓말을 반복한다. ... 이들의 위신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한국의 외무장관은 '저는 한국이 인권이 꽃피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진실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한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저는 여러분앞에 서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주후에 남한 경찰은 저명한 인권운동가 노태훈씨를 체포해 10일동안* 협박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는 4개월 후인 10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는 법에 의해 1년 징형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위신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싸네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무대에서 즐겨 인용하는 주장으로서 이른바 「배부름의 태제」(「인권보호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우리는 이런 논리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자유 모두를 필요로 한다. 고문과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비교해 상대적 중요성을 논해서는 안된다. 양자가 모두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노태훈씨는 한국 외무장관이 위 연설을 하는 비엔나 회의현장에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가 경실련 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정리한 것임.

우리들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처음왔을 때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밖에서 열매가 채워진 공장안에서 일을 했고, 일이 끝난 후에도 갇힌 채 살기도 하였습니다. 일을 할 때는 공장 사장이나 관리자들로부터 “빨리 빨리” 또는 “이 시키야”라는 말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과였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을 좁은 좁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노동자들은 잦은 구타와 폭행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몇달씩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들에게 월급을 달라는 이유때문에 또다시 맞고는 공장에서 도망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들은 월급을 주지 않고, 회사를 몰래 팔아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또 사장들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이라며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고는 집에 가겠다고 해도 주지 않아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에 온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오늘 이곳에 항의농성을 하러온 우리들중 대부분은 손가락이 몇개씩 잘리고, 팔이 심하게 부숴졌지만 보상은 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사장은 사고 당시 지불한 병원비가 아까워서 불구가 된 한 팔로 일을 시키기도 하였고, 입원비가 들까봐 손가락 4개가 잘렸는데도 당일 밤만 전문병원 입원시켜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음날부터는 조그만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하여 지금은 손가락 절단 부위의 뼈가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금뿐만 아니라 일한 월급조차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송금해달라고 말건 개인돈이나 항공권료까지 빼먹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중 몇 나라안 체타스타(네팔인)씨는 사장이 보상해 주지 않자 상담소를 찾았다는 이유때문에 회사에서 구타를 당하다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헝씨의 개인짐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상담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단체들과 함께 기업주를 만나고, 경찰이나 노동부에 요청도 하였으나 불법취업자라는 이유때문에 모든 보호를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출국할 때는 적게는 50만원에서 200여만원에 이르는 벌금까지 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불구가 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낫설은 이 한 국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없어서 부득이 처우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법노동자라고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피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많은 한국인이 이국땅에 나가서 고난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우리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사람으로, 이웃으로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Ali Amjad 등 방글라데시 3명
Manjo Thapa 등 네팔인 9명등 13인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고 박종철 열사 7주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사상법에 대한 고문용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형우 내무장관이 현재까지 공식사과나 고문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소위 '문민정부'가 고문근절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지난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끝에 숨진 고 박종철 열사의 7주기다.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7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오늘 오후 6시에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갖기로 하였으며, 85년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았던 김근태씨(새정치모임 대표)의 기념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김근태씨 강연에 뒤이어 '문국진씨와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에서 그동안 조사한 고문피해 사례보고를 문씨의 부인 윤연옥씨가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문피해 사례로서는 최영미씨(34세, 81년 인천 안기부에서 고문당함), 김복영씨(30세, 86년 4.19 시위때 연행과정과 구치소에서 폭행당함, 연대 정외과 84학번), 김환용씨(중대 법대 86학번, 86년 11월 13일 신길동 시위때 구속) 등이 있다.

'문국진씨와 함께 하는 모임'의 박래군 총무는 "고문은 한 인간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소위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잠을 안재우거나 검찰·경찰의 고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고문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씨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선 유엔고문방지협약에의 가입과 고문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다.

고문방지법에는 현행법에서 '가혹행위'나 '독지폭행' 등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을 고문으로 규정하고, 가중처벌규정까지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인 만큼 시효를 두어서는 안되며, 고문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상·생계 대책과 아울러 사회복귀대책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과거와의 화해는 가해자인 5·6공의 권력핵심자와 할 것이 아니라 고문피해자의 치료대책, 이근안 등의 고문기술자의 처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국보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일병 1심선고에서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희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군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단체탐방-8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사 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호소 해본 적이 있는가? 끝을 모르 고 추락하고 있는 느낌,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까마득한 밀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 오르게 되는 힘, 그 힘이 어느순간부터 강하게 모아지는 경험, 그리고 손잡아주는 이를 만나는 감동...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은 이런 과정속에서 태어났다.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정신병원의 의사가 "아이큐 130이 넘는 우수한 두뇌와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으며 또한 필력이 뛰어나 사회에서 한몫을 단단히 할 사람"이라고 평한 젊은이가 있다. 현재 고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청년의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회의 어두운 곳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알았던 한 건 강한 젊은이에게 휘둘러진 '잠안재우기,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이라는 이름의 칼날과 맞선 참혹한 전쟁이 있었다.

그가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후 그를 만나보았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문국진씨(34세)가 아니어서 너무나 당황하고 "고문이란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하고 뼈저리게 느꼈다는 윤연옥씨(문국진씨의 부인)는 그의 고통을 저버릴 수 없었다. 어렵지만 소중하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러나, 겪어내리라 생각했던 고통은 예상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다. 딸 해인이를 임신한 7개월 되던 때, 생후 7개월 되던 때를 비롯하여 문씨는 발병과 입원의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딸을 안고 울었고, 끝까지 문씨와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자신의 품에만 안고 신음할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인한지 그놈들에게 꼭 보여줘야만 한다. 우리 가정을 꼭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편의 문제가 절실했지만,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꺼려서, 혹은 자포자기 상태로

하는 재판소송도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모여 지난 93년 10월 13일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발족하였다. 박정기(고 박종철 열사 부친)씨를 대표로 하여 부대표 4인, 실무를 담당하는 7인, 40여인의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들은 신병 치료와 법정 투쟁등을 위한 모금활동과, 고문으로 인한 정신분열에 관한 자료수집과 영문자료 번역, 고문피해 사례 수집 등을 위해 몸으로 뛰는 일들을 거꺼이 돕고 있다.

이 모임의 상근자가 된 윤연옥씨. 문씨의 대학동기들이 생활비를 담당하기로 하여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직접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활동 초기인 지금,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고문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자료를 비롯한 고문에 관련된 자료가 국내에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의 관련단체와 관계를 맺고 자료를 구해야만 하며, 자료를 구하더라도 번역하고 분석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크다. 엠네스티 아시아분과 담당자가 내한했을 때 면담을 통해 고문후유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후 연락을 취하고 자료를 받고, 소식지를 영문화하여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15일에, 고문행위 및 고문후유증 발병후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18일에 소송서류와 청량리 경찰서의 책임회피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가 제출된 1차 재판이 있었다. 아

울러, 29일에 고문피해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을 냈었다. 문제가 되는 어려움은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고문의 특수성으로 인한 증거의 부족과 시효가 지났다는 점(고문은 시효가 없다는 국제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 당시 목격자인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상세한 사항에 대한 기억이 회

미한 점 등이 있다. 그동안 고문피해 사례를 수집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고문유형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세심 발견하며 고문 사례 보고(1월 14일,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추모식)도 하게 되었는데, 그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이 크고, 단순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유엔고문방지조약에의 가입등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통해 얻은 보람을 윤연옥씨의 말을 빌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씨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큰 심적 괴로움이 되지만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남편의 고통에 대해 이전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초기에 가졌던 의구심(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함께 해줄 수 있을까)이 함께 해주는 분들에 대한 감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개인적인 심정에서 시작했지만 고문의 문제를 깨달으면서 인권문제에 대해 배우게 되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자신들의 고통을 털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과 그 역할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다.

"우리의 삶과 사랑이 얼마나 강인한가, 소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고문의 썩은 냄새를 치유의 향기로 바꿔나가기 위해 오늘도 많은 이들이 문국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강사: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1994년 1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다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뚫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열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애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활동해왔는가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을 모시고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인권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독료를 보내주신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십시오.

늘어나는 발송비의 부담으로 부득불 구독료를 받기로 한 '인권하루소식'에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드립니다. 구독료를 보내주시는 때는 꼭 연락해 주십시오(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주1회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제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이달의 주제>에 실을 글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매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월달의 주제는 고문입니다. 고문근절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글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6호(15일자)부터 고문피해사태를 연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고 박종철 열사 7주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 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 열려

‘박종철 민주열사 7주기 추모식 및 기념강연’이 14일 오후 6시 30분에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3부 고문피해사례 보고에서 현재 고문후유증으로 6개월째 병원에 입원중인 문국진씨 부인 윤연옥씨가 나와 “문정부는 과거청산을 하려면 마땅히 고문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어 “87년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이후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으나 제도적 정체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전 고문이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지난 9월에도 김삼석·

김은주 남매가 성고문, 장안재우기 고문등을 당한 바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고문방지법을 제정하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여 “한 인간을 처참하게 파괴시키는 고문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씨는 고문이 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자고 호소했다.

고문피해사례보고에 앞서 열린 1부 추모식에서 문익환 목사는 추모사를 통해 “여러 민주열사의 조사와 추모사를 할 때마다 꽃다운 젊은이들을 민족의 제단에 바치게 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며 죽음으로 항거한 젊은이의 뜻인 분단의 장벽을 허물자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을 대표해서 추모사를 한 강병원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박종철 열사에 대한 기억은 단지 한 역사적 시기의 치열했던 생명에 대한 추도로 끝나지 않고, 80년대의 치열했던 저항의 불꽃으로 남아

이제 90년대의 새로운 저항운동의 뿌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2부 기념강연에 나선 김근태 새정치모임 대표는 김명삼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이 아닌 현실의 심판의 대상자인 전두환·노태우를 청와대에서 만난 예우를 청와대에서 만난 예우를 들며 “94년은 세계 역

사로부터 잔인하게 다가왔다”고 언급하고, 김영삼 정권이 지난 상처를 치유하기 보다는 벗어나게 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이제 민주세력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주적 민족통일을 하겠다며 6·10 항쟁의 동지로서 만나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익환 목사를 비롯 김찬국 상지대 총장, 한준수 전 연기군수, 김진균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sbs ‘투맨쇼’
15일, 성희롱 토크쇼나 마련 서울방송의 ‘투맨쇼’에서는 15일 오후 9시 45분 성희롱에 대해 얘기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이종걸 변호사, 최영애 성폭력상담소장, 성희롱피해자 최옥주씨가 출연한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강사: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1994년 1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다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꿰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열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애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활동해왔는가를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을 모시고 함께 토론했 보고자 합니다.

인권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독료를 보내주신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십시오.

늘어나는 발송비의 부담으로 부득불 구독료를 받기로 한 「인권하루소식」에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드립니다. 구독료를 보내주시실 때는 꼭 연락해 주십시오(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주1회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제일은행 낙원지점 128-10-131017 서준식)

<이달의 주제>에 실을 글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매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월달의 주제는 고문입니다. 고문근절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글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최영미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편집부주: 여기 고문으로 인한 한 맺힌 절규가 있습니다.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아 이 ‘절규’를 씁니다. 다소 거칠은 내용이지만 되도록 가감없이 실겠습니다.

1. 인적사항
생년월일 : 1961년 1월 11일생
학력 : 83년 대한공업전문대 통신과 졸업
주소 : 인천주안
현재 어머니, 오빠 내외와 살고 있음.

2. 병명
정신분열증(의사는 원인불명으로 진단)
1982.4.-1987.4. : 17차례 입원

3. 사건개요
1981.6.10. (대학1년 재학중) 오전 7시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중앙정보부 인천본실 소속의 직원 3명이 “잠깐만 물어볼 말 있다”면서 영장도 없이 연행한 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11시간 동안 조사 후 당일 오후 7시경 전화해 데려가라 함. 오빠가 데리고 왔음.

오빠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겁에 질리고 창백해 있을 뿐 별말이 없었으며, 다만 “부모가 왜 일본에 갔느냐고 자꾸만 추궁하면서 최영미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주더라”고 조사내용을 말함. 그 편지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었음. 부모님은 황해도 출신임. 그 당시 부모님은 결혼후 일본에 살고 있는 딸이 박람회 초청장을 보내와 일본에 간지 하루 뒤의 일이며, 20일간 체류하고 왔음. 그 후 부모님이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별일 없었다고 함.

그후 1-2달 후부터 최영미가 이상해짐. “누가 들어온다”며 문을 잠켜놓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며 2층에서 넥타이로 목매달고 동맥 끊고 자살 기도함. 이후 이런 식의 자살을 수차례 시도함.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최영미는 “살아서 뭐하느냐, 죽고 싶다” “그놈들이 ‘너 여기서 있던 일 말설하면 너희 식구들 다 몰살하겠다’고 했다”면서 그 말이 생각나서 “우리 식구들 모두 죽일 것 같다”고 함. 최영미 하도 고통스러워하며 안기부에 가보자고 하기에 어머니와 최영미 인천 안기부에 갔더니 큰 개가 사납게 짖었으며 검문하는 직원이 최영미를 한참 쳐다보다가 “예전에 와서 조사받았던 학생이구나!”하며 최영미를 알아보았다. 최영미 위 직원에게 “편지 입수된 게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함.

1982. 2월 첫 발작 일어남.
악쓰고, 부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소리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감. 옷 벗고 인천 안기부 앞에 앉아 있는걸 어떤 목사님이 집으로 데리고 왔음. “두 사람은 나이가 먹었고 유독 한 사람이 더 심하

게 했다”며 악을 악을 씹음.
그후 서울대병원에 두달 반 동안 입원시킴.
병원에서도 의사들보고 “저놈들 다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며 날뛰었으며, 창문틀에다 목매고 자살 기도하다 떨어져 뇌진탕에 걸려 3일만에 깨어났음. 병원측에서 약물치료 중단하고 6개월 동안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으나 부모님은 병이 악화될 것을 염려해서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퇴원때 병원측에서 자퇴서 쓰라고 요구했으나 이후 서울대병원에서는 입원안 시켜줌. 이 당시 의사들에게 원인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원인불명이라고 함. 이후 1년에도 몇차례씩 짧으면 20일, 길면 3개월간 입원 치료했으나 퇴원후에는 다시 나빠지고 별효과 없음.

1985년 청와대에 탄원서 냄.
1986. 2월 안기부에서 나와 아버지(경찰관 출신)의 회사(퇴직후 택시회사 경영하던 상태)로 찾아와서 좋은 회신이 올 거라고 함.
1986.6. 아버지 뒷병으로 죽음.

1987.7. 또다시 어머니가 청와대에 탄원서 냄.
이때 법률구조사무소(주안 소재. 부모님은 연락한적 없음)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효가 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함. 이에 어머니가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다음날 안기부(?) 직원 2명이 나왔음. 어머니가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었어. 보상금을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고 이전 치료비는 우린 책임질 수 없다. 지금부터 평생토록 최영미씨 치료비는 책임지겠다”고 함. 이 당시 어머니가 편지의 입수동기를 물었더니 “주안에서 20년동안 약국하던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 간첩이었다. 최영미 부모님이 일본에 갔길래 한 번 조사해봤다”고 답함. 영미 편지 내용이 어렸느냐고 부모가 재차 묻자 안기부 직원들 우물쭈물함.

1987.9-1992.10.30까지 5년 동안 관비로 치료받음.
1987.9-1988.4 용인정신병원
1988.4-1992.10.30. 삼영정신병원 입원 (인천시 서구 심곡동 소재) : 의료보험 해당기간은 40만원 선이며 의료보험 비해당 기간은 100만원 선임.

1988. 사회복지로 명칭 바뀌면서 관비 처리. 이때 보호자가 요양원으로 되어 있

으므로 가족이 자유로이 입·퇴원시킬수도 없었으며, 5년동안 의학은 2번정도 했음.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면 관비 처리 안될까봐 퇴원도 못시켰음.

92년 1년간만 의보처리(어머니가 영미를 단독 세대주로 해서 의보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92년 의보 나눔). 이후 정부에서 동회에 감사 나와 부모형제가 있고 부모가 자기 집이 있으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수 없다며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시, 구청, 동회에서 함께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직원이 “영미씨가 불쌍해서 해주었다”면서 시 탈서를 썼음.

이 사건 이후 의보증 회수되었으며 치료비 지급도 중단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모 신문기자가 안기부에 전화해서 그 당시 생활보호자 처리를 해주어 관비치료를 받게 해준 박씨를 찾았으나 “그런 사실 없다, 치료비 대준적 없다”며 딱 잡아 팠. 어머니가 다시 안기부에 가서 박씨를 찾았으나 전혀 다른 사람이 나눔.

최영미는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하실 골방으로 끌고다니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외치고, 주위 사람들이나 의사들을 보고도 “저놈들 다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놈들이다”라며 쭈뼛받았던 당시 상황을 상기해 당시의 심리적 두려움과 압박상태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같이 사는 조카가 “고모 헛소리 좀 하지만, 나 무서워”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차라리 나 죽기전에 내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겠냐”며 눈물을 흘림.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농성이라도 하고 싶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군사정권에 의해 고생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 치료비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안기부 직원이 치료비를 대준 일조차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 기가 막히다고 함.

4. 현재상태
1993. 5월 탄원서 다시 냄(치료만 해달라는 내용).
최영미는 현재 발작도 하고 상태가 안 좋다. 그러나 치료비가 없어 입원도 못시키고 또 입원시켜봤자 낫지도 않는다. 혼자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어머니와 같이 다닌다. 라디오 음악방송 때 엽서 보내는 일이 유일한 소일이고, 일주일에 한번 어머니와 함께 성당 나가 고약타러 가는 일이 유일한 외출이다.

<1.12>(D.30)영장각각된 '국고생방화살해 용의자/경찰 재청구 또 기각/인친지법 "물증없다"
(HA.19)이삭/여자국고생 방화살해혐의 중학생 구속영장 또 기각
<1.13>(H.30)「여고교생 살해」영장 재기각 의미/"증거없는 수사 불용" 거듭확인/진술-정황만 의존한 영장남발 방지 계기/범행사용 흥기 찾을 때까지 장기화 전망
<1.11>(H.19)「김순경사건」 TV서 재조명/MBC 「PD수첩」
<1.12>(D.30)輪禍가해자 조작 收賂경관등 구속
(C.13)독자/「역지사지」 단정 유감
(HA.19)여대생에 발길질 순경 징계
<1.16>(D.17)독자/언론 "장애아내 살해" 성급보도 남편 페톤아 몰아
(HA.10)독자/시위 대학생 연행후 경찰 인권유린 답야
<1.12>(D.30)경찰 비상돌입/강력범 소탕령
(C.30)민생사범 소탕령/오늘부터 백80일
(HA.18)내무부 민생치안확립 시달
<1.13>(J.22)「강력범 못잡으면 직위해제」/경찰 70% 민생치안 투입/각급지휘관 지역책임제 철저시행 방침/제2차 범죄소탕 백80일작전 착수
(D.19)독자/경찰 실적위주 불심검문찾아 행인 불편크다
<1.14>(HA.18)너러바위/"수뇌부 실적주의 발상"
(C.30)강력사건 해결 못하면 일선지휘관 직위해제/서울경찰청 비상근무
(H.29)「강력사건 해결 못하면 일선지휘관 직위해제」/경찰청
<1.15>(H.27)민생침해법 강력단속/대검, 소탕본부 가동
(D.31)민생침해법 집중단속/대검 전담반 편성
<1.17>(C.19)독자/또 범죄와의 전쟁 실적위주 안된다
(D.30)「범죄와의 전쟁, 비웃는 잇단 강경도/」추락하는 경찰사기/"거기"점수제로 「에방」 뒷전/형사과등 격부부서 기피도/"급여-인사제도 개선등 뒷받침을"
<1.14>(HA.14)국방예산안 유출조사/기무사, 조순환의원 전 보좌관·비서관 연행
(HA.2)기무사, 조순환의원 전 보좌관 조사안팎/2급 비밀서류 「분실」 관련 주목/대공용 「사건」 관계 추정...단순분실때 비난클듯
(C.1)의원배포 군미밀문서 분실/전 보좌관등 2명 연행/기무사/국방비 관련...복유출 조사
(H.31)의원 보좌관이 군사비밀 분실
(D.2)조순환의원 전보좌관등 2명 연행/"군예산설명서, 유출수사/기무사
(J.22)군예산 秘文 유출 수사/조순환의원 전보좌관등 연행
(J.4)「국방자료」 분실 왜 일어났다/의원들 비밀서류관리 구멍/보관용 금고도 없고 감독체계마저 허술/취급자 신원 철저확인등 보안장치 시급
<1.15>(HA.2)조의원 보좌관·비서관/기무사, 참고인조사
(D.4)기밀 「분실혐의」, 못찾아/기무사, 조의원 전보좌관등 커가조치
(D.4)「기밀문서 분적없다/분실경위도 몰라」/조순환의원
(D.4)국방예산설명서 분실 파장/국회 정보위 「기밀보호」, 새논란/여 신원조사 강화주장...야도 예의주시
<1.16>(H.23)대북관련 혐의 못찾아/관리소홀로 분실한듯/의원 군사자료 누출
<1.17>(J.4)기무사령부 수사 진전없어/국방비밀문서 분실 혐의 못찾아 제자리/조순환의원 측근들 한결같이

유출부인/파기했다해도 군기밀누설죄 적용 안돼
<1.15>(D.19)독자/취업용 「신원진술서」, 기재사항 95개.. 개선질심
<1.17>(H.30)郵政研 해체안한다/검열기능 축소/폐지론 의견 반발일듯
<1.15>(H.17)독자/"보호회 생산품 이익 어디로 가나..."
<1.16>(HA.10)독자/미결수 재판출점 대기때 용변 억제강요 비인간적
<1.17>(C.31)북한학생과 통화 수배 범정학원 부의장구속
<1.12>(H.15)김남주 시인 격려 모금/불교인권위원회
(HA.4)아침햇살/김남주 시인의 천국과 지옥/김종철(논설위원)
<1.11>(HA.19)비전향 장기수 김영태씨 북한송환 촉구
<1.13>(HA.18)동네방네/40여만에 받아온 가족편지
(C.15)「민중미술 15년, 제작 총정리/3백18명 국립현대미술관서 전시회/내달 5일부터...압수된 작품 특별전 시실도
(D.14)5,6공 반체제-저항그림 「민중미술」/화려한 「공민 전시회」/국립현대미술관 2월 5일부터 개최/조각 판화 벽화 걸개그림등 400여점/입옥상동 318명출품...「탄압 특별코너」도 마련
(H.15)민중미술 대규모 전시회/국립현대미술관서 처음 연다/15년 발자취 더듬어...來5일부터/3백18명 4백여점 출품/"압수-거부당한 작품, 별도 전시/공식적 장소 개최-위상인정 "의의"
(J.13)국립현대미술관 「민중미술 15년展」의 의미/"民美" 미술사적 역할 제도권에서의 복원"/판화-걸개그림 등 4백여점 선배, 「탄압미술작품전」도 꾸며질 예정

-불처벌, 의혹사건, 의문사, 군대-

<1.11>(HA.1)「5.6공 화해앞서 「과거」치유를」/양심수-해직자들 미해결 문제 산적/야권 "비리규명 뒷전 개혁의색" 우려
(HA.1)과거화해 국민통합 시사/김대통령, 새 전직대통령 청와대 초청 회동
(C.1)「국가경쟁력 제고」협력 요청/김대통령, 최-전-노 전대통령과 오찬/6공구속인사 선처 요청/전-노 전대통령 화해 권유
(C.2)기자수첩/「청와대 4자오찬」
(H.3)사실/착잡한 현-전대통령 대좌
(H.3)청와대 4자회동 무얼남겼나/"포용의 정치문화" 정착 새전기/국민통합-범어권 결속에도 도움/5.6공인사 활동반경 넓어질듯
(D.1)김대통령-새 전대통령 회동/"화합조치, 필요하다"/김대통령 국정운영 적극협조 요청/전대통령 개혁-경제회복 추진 지지/김대통령, 전-노씨에 불편한 관계 해소당부
(J.31)독자/전-현직 대통령 회동 찬-반토론/찬성-통치 기간중 얻은 경험 마땅히 나눠야/반대-전직 대통령과 오 문혀버릴까봐 우려
<1.12>(HA.3)사실/정산해야 할 「과거」와의 악수/"문민"과 「개혁」은 내세우지 말아야
(D.4)기자의 눈/5.6공비리와 「화합」
<1.16>(HA.10)독자/전직대통령 만나면 화합되나/"독재자 보호" 분노...과거정산 이뤄져야
<1.12>(HA.14)독자/"단체장 선거 파기" 심리 서둘러라/헌법소원 제기 2년째...위법여부 반드시 가려야

<1.11>(C.31)임관동기 진급탈락 항의 간호장교 30명 진정서/"구제안되면 집단전역서 내겠다"
(J.22)「동기 모두진급 안되면 전역」/간호장교들 집단진정/유군선 "일단락 됐다"
<1.17>(C.19)독자/간호장교 진정서 군개혁 계기돼야
-종군위안부, 성폭력,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4>(D.16)「남편 성폭행, 국내서도 심각/美사건계기 재판심/매트는 아내 절반이 상습피해 호소/미 영 불 "범죄"처벌...한국 아직 판례없어
(C.5)이규태코너/보비트사건
<1.15>(D.29)11회 「여성동아 대상」 시상식
(D.25)잠깐...「성폭력 심각성 이해높이려 계속 노력」/"여성동아 대상" 수상 최영애씨/상담소 개설 피해자지원 인정받아 영예/범죄행위 근절 "감추기"로는 해결안돼
(J.2)분수대/남자와 여자
<1.17>(H.29)폭력남편 흉기살해
(H.11)세계가정의해/"가정신문을 만들자"/84년 국내첫선 전국 150여곳 확산/전가족 참여 갈등해소 화목 지름길
(C.21)「위기의 남자」,론 미서 출간봄/여성운동에 저항남성자아 되찾기/슬픈 자화상 그리며 「단결」주장/미 인류학자 슈테더교수 뉴욕타임스 서평서 분석 화제
<1.11>(D.16)「할머니들 보세요」 「여성노인」,발간/여성개발원, 여가활용 건강관리등 정보실어
(HA.14)독자의 눈/고령자 취업정책 적극적 추진필요
<1.12>(D.16)평생현역/"노인취업 사회관심 아쉬워요"/30년 근무벗고 사회복지기금 봉사 박춘식씨/업체면접때 동창 근무조건 내 일처럼 쟁겨
<1.11>(C.5)이규태코너/모독 수화
(H.13)독자/장애인 표지차 파인단속 불쾌
(J.17)장애인의 삶 「사랑사는...」 책낸 장애인 이태곤씨/"더불어사는 사회 간절해요"/"몸부림치는 장애자에 눈길을"/미화-과장없이 바닷 인생 잔잔히 그려
<1.13>(C.13)독자/정신지체야 학교 기숙사 운영하자
(C.21)「맹소니추방 공감대 형성되길」/4주년맞는 교통장애인협 임통일 회장

-노동, 외국인노동자, 산재, 농민, 환경-

<1.11>(HA.3)사실/미루고 또 미루는 노동법 개정
(J.2)근로기준법 개정정의/외국인고용-여성인력활용안 마련도 촉구/경계5단체장-민자당 간담회
(J.31)독자/여성근로자 근로기준 문제많다/야권-휴일근무 제한 오히려 「차별」불러
<1.16>(D.17)독자/생리휴가 무급전환 추진기사 방향제시 없이 사실전달 그쳐
<1.13>(HA.18)조선노협 정식 발족 선언/준비위 회견 "민주적 산별노조 만들겠다"
(D.31)「조선노협」 공식발족/현대 대우등 6곳/"노총-경총 임금합의 인정못해"
(C.30)조선노협 6개사 노조협 결성
(H.29)「조선노협」 30일 결성식/현대등 6사 노조연합/준비위 "노동법 개정주력"...윤 노사변수로
<1.14>(J.1)근로자의 날 폐지 노동절 부활키로/당정 방침정해
<1.15>(D.2)노동절 부활추진 민자당 적극검토
(HA.2)5-1 노동절 부활/민자, 법개정 추진

(C.2)5월1일 노동절 부활키로/당정/노동계 요구따라...근로자의 날 대체
(C.4)노동절 부활추진 안팎/노동계 「31년 숙원」해결/대선약속-춘부무마등 다목적/관련법 손질-사용자 공감대 조성 과제
<1.11>(J.23)중국고교 2명고용 2년동안 월급안책/복직주인 구속
<1.12>(HA.1)사진/사망 외국인 노동자 추모
(HA.16)동남아출신 노동자 결실현서 농성/'노동기계'로 망가진 몸 이국땅 실음 '눈물호소'/경실련, 각계참가 긴급대책회의 제안
<1.13>(C.1)만물상/(외국인 노동자)
<1.15>(D.29)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촉구/경실련
(D.19)나의 의견/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 적용혜택을
<1.17>(J.9)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업체 "임금체불 대비" 보증금 예치토록/기협 보호안 마련
<1.15>(D.29)휴식시간 운동경기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서울고법 판결
<1.17>(C.30)산재예방 우수업체 금융-세제지원 확대/노동부 추진
<1.12>(HA.18)쌀개방안 비준거부 운동/범국민비상대책위 선언
<1.13>(HA.16)대학생 겨울농활/'쌀아픔' 동참 풀죽은 들판 활력/사랑방 좌담-축적 촛극 「어깨동무」/새벽부터 잡일...국민투표 서명도
<1.11>(D.16)「시민운동도 전문가시대」/환경운동연, 작년 이어 정책간담회 공개채용
<1.12>(HA.18)올해는 달라져야 한다/서울환경운동연 여진구씨 기대/"안전한 식수 확보시급"/환경영향평가 방식 개선할 여지 많아
<1.13>(HA.14)독자/환경마크제도 외면현실 아쉽다/세금 등 제도적 혜택 뒷받침돼야
(C.5)환경학자 레스터 브라운 인터뷰/"환경비용" 무서운줄 알아야/"환경계 신설해야 기업 행동양식 변화/원전은 장기 에너지원 부적합...전력시장 민영화
(D.5)세계석학에게 듣는다/KBS TV 대담요지/환경경제학자 레스터 브라운/환경비용 경시해선 안된다/"지구신검,결과 숲줄고 사막화/예상위험 막아야하며 발전해야/소득세 부담줄여 환경세로 돌려야...부국 빈국돕지 않는 한 해결 곤란
<1.14>(D.16)올 환경운동/4단체 청사진/맑은물-그린라운드대응 역할/시민조직 활성화 한강살리기등 노력/쓰레기문제등 현안별 교육책자 발간도
-통일, 평화-군축, 국제-
<1.11>(HA.8)범민족연합 위상싸고 남북한 의장 편지논의 /백인준 "해소 반대...남쪽 운동가들 동요"/문익환 "한계 뚜렷...새 통일운동체 필요"
<1.12>(HA.2)「올해 남북 불자대화장자」/실천불교승가회/통일사업준비위 결성제안
<1.13>(H.7)「인체 방사능실험 노출 미국인 4천명이 신고」/에너지부 대변인
(HA.5)미 방사능인체실험 4천여명 노출 주장
<1.17>(J.6)방사능 인체실험 은폐-축소 기도/레이진 행정부
<노동, 환경, 통일 및 국제관련 기사색인은 분량이 많아 일부 생략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장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재중)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 성명에서 "인적 청산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사법부의 개혁은 제도개선보다 문제법관에 대한 인적청산이 더 시급하고 근원적인 과제인데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다가 이제와서는 지극히 형식적·원론적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초에 밝힌 문제법관 퇴진 등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법률신문과의 회견에서 인적청산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법관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며, 법관은 탄핵과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특정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퇴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중대한 위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등 결정 서둘러야

지난 88년 9월 개정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서 결정하지 못한 중요 장기미제사건은 국회 날치기 풍파 26개 법안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있으며, 이 사건들은 아직도 결정을 내릴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이래 올 1월 1일 현재까지 위헌법률심판사건 2백76건, 헌법소원심판사건 1천5백89건 등 총 2천60건의 사건을 접수, 81.2%인 1천6백73건을 처리하였으나, 3백87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판결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 등으로

계류중에 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미제사건도 89년 5건, 90년 11건, 91년 30건 등 상당수가 남아있다.

특히 지난 12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세중)가 주최한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민감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해 '거창하게' 출발한 것에 비추어 볼때 실패한 제도"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당신은 갔습니다

문 익 환

당신은 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지 않았습니
가는 듯 돌아오신 걸요
습 벗은 얼굴 웃음으로 돌아오신 걸요
돌아와 흰 눈 밝은 향기로
은누리에 가득하신 걸요
신음소리도 없는 아픔으로 가는 듯
밝은 노래로 돌아오신 걸요
돌아와 출렁이는 바다로
어기명차 푸른 하늘 말아올리시는 걸요

1985년 신달 그믐날
당신은 영구차에 실려 가셨습니
가서 언 땅에 묻혀셨습니
꽃무덤에 묻혀 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흙으로 허물어져 이 강산 푸른 마음이 되셨습니
푸른 마음 바람이 되어 휴전선 넘나드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아아아
나의 조국은 자유입니다
통일입니다

근 조

민족의 큰 어른 문익환 목사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인권운동 사랑방 -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2김복영씨 '형사들이 집을 도청한다며 필답으로 식구들과 대화'

편집부주: 여기 고문으로 인한 한뼨한 절구가 있습니다. 「문극진과 함께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아 이 '절구'를 싣습니다. 다소 거칠은 내용이지만 되도록 가깝없이 싣겠습니다.

1. 가족-출생
부친 김종진(58세), 모친 권운선(54세) 3남2녀, 경남 창원 출생
2. 연세대학교 정외과 입학(84년)
3. 씨클 <쿠사>에 가입
4. 84년 당시 <쿠사>에서는 운동 지향적 선배들과 그렇지 않은 선배들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김복영은 전자쪽 흐름에 속하게 됨. 별로 두드러지게 활동한 것은 없음(씨클 동료의 말에 따르면, "아주 푹푹하고", 외모나 마음이 "깨끗"했으며, 특히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함).
5. 84년 7월 여름농활에 참가.
6. 85-86년에 걸쳐 수많은 시위에 참가. 85년 후반기부터 86년 4월까지 이례적으로 약 8회나 잡힘. 이중 3회는 불심검문에 의한 것이었음-체포에 대한 강박증 보임.
7. 86년 4-19시 참정 중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잡힘. 기소되어 3개월간 구치소 생활.
8. 같이 연행당한 학생의 말에 따르면 연행당시 집중구타 당함. 시경에서도 집단구타. 구치소에 가족들이 면회하기도 거의 말이 없었음(당시 가족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 구치소 생활도중 교도관에게 동물을 퍼부어 독방에 갇힌 적 있음. 재판과정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재판을 참관한 친구의 말). 친구 말로는 최후진술을 했다고 하나 누나 말로는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함.
9. 7월초 집행유예로 석방
10. 석방 직후 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 가출, 약 한달간 씨클 동료 집에서 생활. 어느날 전화하러 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옴-본인의 말로는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형사가 자기를 감시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오는 길이라고 함. 이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음.
11. 집과는 일체 연락 두절-집에서는 3차 소집영장이 나오도록 소식이 없자 행방불명·주민등록 말소처리.
12. 가을무렵, 군징집을 피해 있던 친구와 함께 봉천동 보라매 공원 후문 근처에서 자취.
13. 자취방집 주인이 형사였다고

- 하면서 자취집에서 도망나옴.
14. 12월 경 수원집으로 귀가.
15. 이후 외출을 하지 않음. 형사들이 집을 도청하고 있다고 집안식구들과도 일체 대화하지 않음. 윗층에서 동료가 살육되고 있다는 등의 환청을 가족들에게 호소하기도 함. 가족들과 필답으로만 대화. 남동생과 함께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서 고향을 지르는 일도 생기.
16. 87년 3월 부산으로 가서 신경받음-결과는 면제
17. 이후 친구들과도 일체 접촉없이 집에만 있었음.
18. 87년 7월 경 가출. 약 한달뒤에 돌아와서는 지리산으로 무전여행을 하고 왔다고 함(이후 병원에서 쓴 일기에는 무병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뱀도 잡아먹고 했다고 적혀 있음).
19. 그후 상당히 표정이 밝아져서 식구들과도 대화하기도 했다가 다시 어두워짐.
20. 88년 2월 16일-첫 입원
88년 2월 16일 술먹고 돌아와서 작은 칼로 식구들을 위협-용인정신병원에 입원(의사 말로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증세인데, 병원에 너무 늦게 왔다고 함).
21. 6월 퇴원-이후 약 1년간 약간 타다 먹고 집에서 "식물인간"처럼 지냄.
22. 89년 8월-본인이 약을 끊고 병을 이겨내겠다고 함. 약을 끊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함. 복학도 고려. 약 2개월간 신문에 달하기도 함.
23. 89년 10월-재발, 방에서는 오그리고만 있었음.
24. 11월 1일-용인정신병원에 재입원.
25. 90년 5월-

퇴원
용인정신병원 입원당시 담당의사가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김에 따라 강남성심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타 먹음. 지하에 세든 사람의 아이를 칼로 위협하기도 함.
26. 91년 2월 -강남성심병원에 입원(전기치료만도 20여차례 받음).
27. 결박기에 정신이 된 듯하여 6월 26일 퇴원.
28. 주위의 권유에 따라 기로 치유를 한다는 스님이 있는 안양관음사에 감. 1주일도 안되어재발, 절에서 나옴.
29. 이후 집에만 계속 있다가 재발-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폭력적인 증상을 보임(뮤어서 8월 2일 용인정신병원에 입원).
30. 부친은 충격으로 직장을 관두고 나함.
31. 10월 10일-목은 상태로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김.
32. 12월-병원에서 의학나와서 집에 있던 중 자살기도(난간에 개줄을 묶고 목을 매었으나 줄이 끊어져서 살았다고 나중에 본인이 이야기 함).
33. 92년 4월-퇴원, 상태 좋아짐. 서울국립병원 낮병동에 다니면서 문예반과 편집 활동을 함.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강사: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1994년 1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참 가 비 : 3천원

다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열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애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활동해왔는가를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을 모시고 함께 토론했 보고자 합니다. 인권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활동가와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합니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민족의 큰별' 추모의 발길 끊임없이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목사님 겨레장, 22일 9시 대운동장

고 문익환목사의 빈소가 차려진 수유리 한신대 본관 2층에는 19일에도 애도의 발길이 끊임없이 줄을 이었다.

김대중씨, 이기택 민주당 대표, 한완상 전통일원장관 등을 비롯한 사회저명인사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민족의 큰어른을 잃은 슬픔을 같이 했다. 상황실에는 "민족의 큰별이 떨어졌다"며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장례위원회는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목사님 겨레장'으로 정하고, 장례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 고문에 김대중씨, 김수환추기경·윤이상씨·강석주 스님 등 13명, 장례위원장에게 계훈제씨·변형운 교수·이돈명 변호사·이기택 민주당대표 등 8명, 집행위원장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김상근 목사, 호상에는 박형규 목사로 정하고, 영결식까지 검은 리본과 헌수막 등을 달아 애도의 뜻을 표하자고 당부했다.

고 문익환목사님 겨레

장,의 장례식 일정은 22일 오전 8시 수유리 한일병원에서 발인하여, 자택과 4·19묘소를 거쳐 오전 9시 영결식(한신대 대운동장), 12시 노재(대학로 마로니에공원)를 한 뒤 1시에 장지인 마석모란공원으로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안구 기증수술이 차남 문익근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빈소 : 991-8321-5)

문익환목사 추모집회 민가협, 오늘 2시 탑골공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는 20일(목) 2시 탑골공원 앞에서 문익환 목사님 추모하는 집회를 연다.

매주 목요일 실시해왔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목요일 집회'를 문익환 목사의 뜻을 기리는 '목요일집회'로 하기로 했다고 민가협은 19일 밝혔다.

"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
 정대협 103차 수요시위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대표 이효재등)는 19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회원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회장 한명숙) 주관으로 제103차 '수요시위'를 벌였다.

이날 수요시위에서 정대협은 경과보고를 통해 일본이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전쟁범죄 시인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배상 *책임자 처벌이 없이 '보상에 대신하는 조

근 조

민족의 큰 어른 문익환 목사님의 영전에 삼가 애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 인권운동 사랑방 -

부의 해결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과거 전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부여 등을 운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대협의 이미경 총무 등 2명은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열리는 '부락해방동맹 오카야마 연합회' 주최의 '제5차 오카야마 반차별, 평화국제포럼'에 참가한다.

이 포럼에는 한국, 일본을 비롯 중국, 인도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늘, '고 황인철변호사' 추도미사 및 추도식

'고 황인철 변호사 추도 미사 및 추도식'이 20일(목) 가톨릭 수원교구 안성묘지공원(오후 2시30분)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를 1월 27일 목로 연기합니다

당초 1월 20일(목)에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라는 주제로 진행하려던 '사랑방 제8차 월례세미나'는 문익환 목사의 별세를 맞아 많은 인권단체 실무자들이 빈소에 결합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강사: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1월 월례세미나가 연기된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권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활동가와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합니다.

1994년 1월 27일(목)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참가비 : 3천원

과 명동가톨릭회관 3층 강당(오후 6시)에서 열린다 추도미사를 위한 차량은 12시에 명동성당에서 출발한다. 연락처는 천주교 인권위(322-4501/2).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

작년 12월 16일 0시 20분 경 경기도 파주군 삼릉물산 앞 통일로 상에서 한창열(33세, 승진운수 택시기사)씨를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미 제2사단 소속 더프 리차드 시 알, 햄 브리안 엘 등 미군 2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16일 경기도 파주경찰서와 미군범죄수사대에서는 범인의 신병을 인수하여 이들이 사용한 칼, 피가 묻어있는 옷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범인은 현재 미군영내에 구

금되어 있다. 한편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는 18일 4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94년 제1차 정기대표자회의를 갖고 간부진 선출과 사업 및 예산을 승인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운동본부'의 상임대표에 김재열 한교협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

정치적 살인·실종 반대 캠페인 AI 한국지부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지난 해 10월부터 '정치적 살인과 실종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한달에 3건씩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가두서명, 언론에 부고하는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 활동은 각 그룹별로 이루어지며 올 8월까지 25건의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성명서

1994. 1. 17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대법원장의 연두회견을 보고 우리는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운대법원장은 불과 110여일전 취임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제도개혁의 진행과 함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법원에 대한 사퇴를 공언한 일이 있었다.

실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외면한 채 권력의 편에서서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재판을 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법부의 개혁은 제도의 개선보다도 문제법원에 대한 인적청산이 보다 시급하고도 근원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음은 이미 법조내부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바탕위에서 운대법원장은 취임초 문제법원에 대한 사퇴를 주장한 일이 있었음에도 그후 실제로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오던 중 이제 와서는 인적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으로 후퇴한 것은 취임당시의 입장과 비교하여 크게 변질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법부의 개혁은 확고한 실천의지 없이 일시적인 눈가림이나 임기응변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자세로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본다.(이하 생략)

1994. 1. 1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

<국제인권소식>

아·태지역 주요민간단체들 상호협력체제 발전할 듯

지난해 11월 25-26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 주요 국제단체(Regional NGOs)의 대표 20명이 홍콩 '아시아교회협의회' 회관에서 모여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모임을 가졌다. 이 회의는 1992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아·태지역 범민간단체 회의인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계획 People's Plan for the 21c.'의 후속모임의 하나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그동안 인권과 사회정의분야에서 활약해온 아시아의 주요 단체들의 모임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참석규모에서도 의미가 있다. 11월 협의모임에서는 상호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협력체제의 발전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는데, 토론은 '인권분과', '노동분과', '발전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어 각 분야별 국제연대의 발전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또한 협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활동과 미개척 활동영역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제토론 외에 전문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었는데, 영상매체 활용법, 국제전산통신 네트워크, 국제 캠페인 전략, 정보체계화 및 연구의 기술, 재정확보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경제의 국제화로 인해 인권 및 사회정의의 문제 역시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모임을 통해 인권 및 사회정의의 문제의 국제적 공동대처도 발전할 것을 전망된다.

아·태지역 인권단체 국제회의 2월에 열려

지난해 유엔이 개최한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던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한국민간단체 공대위'는 오는 2월 2-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인권대회 후속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각국의 대표적 인권단체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회의 의제는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에 대한 평가와 후속활동의 준비이며 각국 인권단체들의 준비된 입장을 기초로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공대위'는 인권침해 급보체계, 범아시아 인권단체 연락체계, 아시아인권현황의 채택, 아시아인권정보, 국가별 인권위원회 등의 신설 및 준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기간에 맞춰 2월 21-23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인권단체 연락기구(NLC)' 회의에도 참석할 것을 검토중이다.

*** 유엔이 최근 채택한 인권고등판무관제(인권하루소식 80호, 1월7일자 참조)도 이 선언문의 주요 권고사항중의 하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운동 사랑방으로 문의바랍니다>

<이달의 주제 - 코두>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는 권리...보장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절실

ILO 『93노동통계연감』 노동시간·산재사망률 '국제적' 수준

「국제화」 '세계화'의 기치아래 특히 노동자에게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문민적 정부의 시책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펴낸 93년판 『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산재사망률 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에 하나로 나타났다(2면 표 참조).

「연감」은 국제노동기구가 주로 각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노조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93년 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92년 현재 주 48.7시간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38.8시간으로 가장 짧고 대만은 46.5시간, 홍콩은 43시간이었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30시간대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월급여총액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시간당 4.84달러로 대만(5.34달러), 싱가포르(5.37달러) 등의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적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10.55달러), 영국(10.56달러) 등의 주요 국가가 모두 10달러 이상이다.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로는 일본(17.46달러), 스웨덴(16.89달러), 독일(14.41달러)의 순이다.

ILO의 노동시간에 대한 이같은 통계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높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중대재해율(사망자수/노동자수x1000) 역시 우리나라는 88년 0.340을 정점으로 89년 이후 감소하다가 92년 0.340으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중대재해율은 홍콩의 0.092, 싱가포르의 0.150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이며, 스위스의 0.045보다는 무려 7배나 높았다.

문민적 정부의 여성정책 진단

「여연」 오늘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개최

김영삼 정부 출범후 1년간의 여성정책을 평가·진단하는 토론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숙·이영순·이미경) 주최로 21일(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다.

주제발표로는 최영희 석탑노동연구원 부원장의 「여성노동정책의 평가와 방향」, 임선희교수(충남대학교 교육사회학과)의 「양성 평등 교육정책의 평가와 방향」,

심영희교수(한양대 사회학과)의 「성 정책의 평가와 방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전문위원장의 「가족-여성복지정책의 평가와 방향」, 이영자교수(성심여대 사회학과)의 「여성정치전담기구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평가」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조우철 조경관(정부제2장관실) 등의 지정토론이 있는 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근조

민족의 큰 어른 문익환 목사님의 영전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 인권운동 사랑방 -

「통일의 선구자 고 닷봄 문익환목사 거례장」 소식

1. 북한 김일성주석 문익환목사 유족에게 조전
지난 19일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온 명망있는 통일애국인사 문익환목사를 잃은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큰 손실」이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2. 범민련 북측본부, 조문사절 파견 발표
-범민련 북측본부는 20일 이영덕 통일원장관에게 문목사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겠다며 21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와 아울러 범민련 북측본부는 문익환목사 장례위원회에 22일 오전 8시에 백인준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조문단을 판문점을 통해 파견하겠다고 알려왔다.
-장례위원회는 북측의 조문단이 방문할 수 있도록 21일 제헌제세, 김상근 목사 등을 청와대에,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과 조성우씨 등을 통일원에 보내기로 하였다.

3. 장례위원회 장례일정 확정
-발인식:22일 오전 8시 한일병원
-장례식:오전 9시 한신대 대운동장
-노 제:12시 대학로
-하관식:오후3시 30분 마석 묘원공원 묘원

4. 문익환목사 추모의 밤
21일 오후 7시 한신대 대운동장

“우리는 결코 문목사님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민가협 '문익환목사 추모 목요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는 20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문익환 목사를 추모하는 '목요집회'를 열었다.

집은 수전을 쓴 민가협 주최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에 당선인 손수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할아버지께'라는시를 주일날 교회에도 못가고 써서 낭독하였다"며 "이 시가 마지막 시가 될 줄이야"라며 울먹였다.

소에는 길거리를 오가던 많은 시민들이 분향을 하며 조의금을 내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민가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민가협이 주최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에 당선인 손수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할아버지께'라는시를 주일날 교회에도 못가고 써서 낭독하였다"며 "이 시가 마지막 시가 될 줄이야"라며 울먹였다.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후 첫 공판에서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한 전군수가 배포한 수표의 실제 사용자 신원을 조사해줄 것과 당시 연기군 관계기관대책

회의를 주재한 안기부 직원 임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한 전군수의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는데 위키의 사실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채택하지 않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병역특례문제 공청회 전해투, 28일로 연기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는 종로성당에서 오늘(21일) 열기로 한 '해고노동자 복지과 병역특례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지원대책위의 공동대표인 고 문익환 목사의 장례절차관계로 1월 28일(금)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는 김금수씨 사회로 김동환(지원대책위 집행위원장) 목사가 기초발제를 하고, 노동부·병무청·민자당·민주당·법조계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문목사 사면복권 및 훈장추서 요구

민주당 인권위는 20일 고 훈장추서를 요구하는 성명 문익환목사의 사면복권 및 을 냈다(아래 참조).

성명서

고 문익환목사에 대한 사면, 복권 요청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민족의 통일과 민주화운동을 위하여 수차례의 옥고를 치르시면서 민중과 민족을 사랑하는 위대한 정신과 업적은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 문익환목사께서는 형 집행정지자의 신분으로 별세하심으로써, 이 나라의 모든 민족통일과 진정한 민주화운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셨던 고인에 대한 정부의 도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김영삼정부는 법의 절차를 떠나 훈장의 추서와 사면·복권을 즉각 단행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에 대한 은전을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4년 1월 20일
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강 수 립

<주요국 중대재해율>

국가명	1988	1989	1990	1991	1992
한국	0.340	0.260	0.300	0.290	0.340
일본	0.010	0.010	0.010	0.010	
홍콩	0.065	0.089	0.090	0.092	
대만	0.028	0.022	0.030	0.021	0.024
미국	0.028	0.027	0.021	0.021	
브라질	0.200	0.190	0.230	0.200	

*중대재해율=사망자수/노동자수x1,000

<주요국 주당 노동시간>

국가명	기준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한국	a	53.8	54.7	54.0	52.6	50.7	49.8	49.3	48.7
일본	a	41.5	41.1	41.3	41.8	41.4	40.8	40.0	38.8
대만	a	47.3	48.1	48.1	47.5	46.5	46.5	46.5	46.5
홍콩	a	44.8	45.2	44.6	45.9	44.8	44.0	45.2	43.0
싱가포르	a	47.0	48.5	49.8	47.4	48.6	48.5	48.7	48.7
미국	b	40.5	40.7	41.0	41.1	40.0	40.8	40.7	41.0
멕시코	a	46.4	46.4	44.2	44.9	45.1	45.4	45.6	45.7
칠레	a	43.1	44.3	44.1	44.0	43.2	44.9	46.3	44.4
독일	b	40.7	40.4	40.1	40.0	39.9	39.6	39.2	38.9
프랑스	a	38.6	38.6	38.6	38.7	38.7	38.7	38.7	38.7
핀란드	a	32.3	33.4	32.1	32.1	31.8	31.3	29.6	
남아공	b	46.2	46.6	46.8	47.3	46.8	45.9	45.0	
수단	a		56.7	56.7		56.6		56.1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1993.
주 : 기준 a=실노동시간, b=지불노동시간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
 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보장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김기웅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등 서명

경찰의 강압수사로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지난 해 12월 16일 석방된 김기웅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한 시일내에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오늘 오전중으로 운관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 김재일 한교협 인권위원장을 포함 300여명의 정치인, 인권활동가 등이 탄원서에 서명하였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진범이 잡혀 모든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죄확정과 복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심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396조(파기자판)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직접 확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기웅씨와 김씨 가족들은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도 중요하지만 경찰도 판결전에 복직조치를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주었던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제2재판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작년 12월 28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소진(53세)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자판 한 선례도 있다.

장애인잡지 <열린지평> 94년 봄호(2호) 발간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특히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종합교양지로 계간지인 <열린지평>(발행인 최신례)이 지난해 10월 창간되어, 1월에 봄호(제2권)를 펴냈다.

2호의 주용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과 함께한 독일인 카리다스 수녀의 56년 봉사철학, 장애복지종합센터 「한국뇌성마비복지관」 등 장애인 단체를 소개하고, 장애인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5인의 체험기

등을 다루고 있다.
 <열린지평>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상식뿐만 아니라 재활정보 등을 실어 장애인들의 생활의지를 북돋우고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창간 의의를 밝혔다.

김삼석·김은주 남매, 변호인 반대신문 열려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21일 오후2시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신문 내용 2면 참조). 다음 공판은 2월 4일 오후2시 311호에서 열린다.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목사 거래장」 소식

- 장례일정 :
 - 발인식 : 22일 오전 8시 한일병원 영안실(집례:유원규 목사)
 - 친구경로 : 한일병원-419 묘지-고인생가-장례식장
 - 장례식 : 오전 9시 수유리 한신대(개식사:계훈재/조사:김대중,박순경/조목연주:정명화/문목사 육성철씨)
 - 운구경로 : 한신대학교-수유리-한빛교회-미아리-돈암동-대학로
 - 노 제 : 낮 12시 대학로(조사:이창복,김현준/조가:안치환,윤선애/통일맞이춤:강혜숙/조사:신경림,고은)
 - 운구경로 : 대학로-종로5가-동대문(유가협)-청담리-망우리-구리시-모란공원
 - 하관식 : 22일 오후 3시 30분, 마석 모란공원 장지
- 장례위원회 범민련복측본부 조문 문사에 '유감' '고 문익환목사 장례위'는 21일 낸 성명을 통해 정부의 범민련 복측본부의 조문단 파견반대에 유감을 표시했다.

근 조

민족의 큰 어른 문익환 목사님의 영전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 인권운동 사랑방 -

엠네스티 한국지부 집행위 23일 오후 1시

「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오는 30일 열릴 한국지부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23일 오후 1시에 연다.
 한국지부의 정식그룹 대표들이 참가하는 집행위원회는 94년 사업계획안 등을 수립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지부장 및 부지부장을 정기총회에 추천한다.
 정기총회는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대전 라이프관 광고 호텔에서 열 예정이다.

김삼석 반대신문(일부 내용)

□피고인은 1993. 9. 8. 정오경 피고인의 집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저지' 문제에 관한 원고를 집필중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 체포, 연행되었지요.(예)
 □피고인이 체포될 때 안기부 수사관들은 압수, 수색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작은 도서관'인 방에서 약 10여년간 모아오던 도서문헌들과 약 3년간의 군사관련 자료,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전후처리 관련자료, 신문스크랩, 디스켓 등과 신촌사진, 신촌비디오 테이프, 일기장, 예금통장, 피고인의 부인의 정신대 관련자료, 비디오 등이 담긴 사과상자 크기로 십수상자 정도의 물품을 빼앗아 갔지요.(예)
 □남산 안기부내로 연행되자 체육복을 입게 하고, 3-4일간의 잠을 거의 재우지 않으면서 수없이 몸을 구타하면서, '북한에 언제 갔다왔느냐', '일본에서 북한의 누구와 만났느냐', '국내연계조직을 대라'는 등 위협을 하면서 구타와 원산폭격, 서서 무릎조그리기 등의 기합을 당했으며 유도신문과 협박에 시달렸지요.(예)
 □위와 같이 온갖 고생을 당하던중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그 다음날 1993. 9. 10.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내용을 읽어보겠다는 요청을 수사책임자에게 하였으나 거절당했지요.(예)
 □피고인이 불법연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1993. 9. 15.경 화장실에서 160명 명찰을 단 수사관이 다가와 치솔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다마 넣었나 보자, 얼마나 큰가, 다마 넣지 않았네' 등 성적희롱을 하고 자기 손이 더럽혀졌다면서 비누칠까지 하였지요.(예. 수사책임자와 중감책임자인 '윤아무개'도 성적희롱을 하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당시 임신 8개월째인 부인을 연행조사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하였지요.(예)
 □피고인이 조사받으면서, 안기부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약 1년여에 걸쳐 미행하고 광범위한 전화도청, 사진촬영 등을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예. 수사관들은 장

모님과 집사람의 통화내용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잠안재우기, 구타, 협박, 희유, 성적모욕 등을 해가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견디다 못한 피고인이 그들의 요구대로 일본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왔다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요구대로 진술서와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지요.(예)
 □이에 견디다 못한 피고인이 1993. 9. 16. 경 허위자백을 한후 오른손 엄지 무인하는 부분을 입술로 깨물어 뜯으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으나 수사관이 강제로 조서에 날인을 시켰지요.(예. "중감책임자는 다시 한번 상처내면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으나 목살당했으며, 20여명의 수사관들이 번갈아서 허위자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1993.9.24. 안기부에서 검찰청에 송치되어 처음 1,2회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때,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등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등으로 인해 안기부 수사관에게 허위진술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검찰청에 간 첫날에는 저를 데리고 간 안기부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조서를 마치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수사관들이 빨리 읽으라고 하여 제대로 읽지 못했고, 또 군사관련이 있어 보안사에 가서 조사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한 후유증으로 머리와 꼬리뼈가 아파 온통 신경이 그곳에 가 있는데 곧바로 신문이 시작되어 안기부 논리대로 진행되는 데도 그냥 예, 예 대답하기 바빴습니다. 검사가 17회까지 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3, 4회 피의자신문조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읽어볼 여유도 주지 않았는데도 별생각없이 조서에 서명날인하였지요.(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제5회부터는 「알기쉬운 인권지침」을 읽은 후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요(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5,6,7회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편집자주: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이 18일(영국시간) 박용길 장로 앞으로 보낸 조전입니다.

박용길 장로에게

나는 엠네스티를 대표하여 당신의 남편 문익환 목사의 죽음에 슬픔을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 문목사의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익환 목사는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많은 활동과 오랜동안의 감옥생활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항상 그분의 정력적인 활동과 큰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석방운동을 벌여온 많은 엠네스티 회원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94년 1월 18일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인권운동사랑방」 제1차 국제동향 정보브리핑

국제연대 활동의 개방화! 상호협력과 이해!

「국제동향 정보브리핑」은 국제정세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국제연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연대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입니다.
 1차 모임에서는 국제연대 담당자들간의 소개와 모임의 의의를 확인하고, 현안이 되는 국제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
 -취지설명 및 인사
 -방콕 아시아 인권회의/제네바 NLC 회의/그린라운드/2월 유엔인권위(정대협 등)/세계여성회의/울살라대학 인권회의 등에 대한 정보교류

일 시 : 1월 29일(토) 오후 1시-4시
 장 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대 상 : 인권단체 및 각 단체 국제담당자
 참가비 : 3천원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
합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열악한 노동조건 비판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 등 주장

국제노동기구가 93년 노
동통제연감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가 높은 산재율, 긴
노동시간, 짊 임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이
를 증명한듯이 24일 오전
과 오후에 서울과 부산에
서 2명의 노동자가 고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
라 목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오전 상호운수(대표
우종석) 건물 1층 주차장
에서 이 회사 노조원 김성
운(62세)씨가 택시노동자
들의 열악한 현실을 비판
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
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됐다.

김씨는 대통령에게 보내
는 탄원서에서 "역대 정권
이 바뀔 때마다 완전월급
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며 "월
39만 6천원의 급료로는 자
녀교육은 물론 주거비도
되지 않아 집도 전세에서
사글세로 옮겨야 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명동
동 교통정체지역에서 승차
거부 및 부당요급징수를

할 때마다 가슴 아프다"며
"아버지가 택시기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 회사 방종열
노조위원장 앞으로 보낸
유서에서는 "어려운 현실
에 도움을 주고 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남은 동료들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공판

황석영씨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24일 오후 4시 서
울고법 합의4부(부장판사
신정치, 주심 배석기) 주재
로 309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장길산' 원작료 25만불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김보혜(영화제작자)
씨와 주동진(시네마 앰파
이어 대표)씨를 다음 공판
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에서 황씨의 변호인
은 문제가 된 '공작금' 25
만불의 성격을 제대로 밝
히기 위해 황씨가 쓴 소설
'장길산'을 영화화하기로

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대통령과 노조
조합에게 남긴 유서를 포
함, 이 회사 우종석 사장,
파출부로 일해온 자기 아
내와 딸 등에게 보내는 5
통의 유서를 남겼다.

숨진 김씨는 지난 71년부

남·북간의 계약을 맺은 사
람중 남측당사자 김씨와
이 계약의 중개인 역할을
했던 주씨를 증인으로 채
택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재
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공판에는 백낙청(서울대
교수)씨등 작가 30여명이
방청, 동료문인들의 황씨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황석영 석방을 위
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항
소심이 진행되는 2월중에
황씨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광주에서 '황석영 문학의
밤'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2월 4일 오후
2시 309호.

터 23년간 택시기사로 일
해왔으며 이 회사에는 80
년부터 14년간 근무했다.

또 이날 오후 부산에서는
산재로 다친 허리통증이
재발, 추가산재 처리를 요
구하던 한진중공업 도장탑
노동자 정인석(55세)씨가
오후 1시 5분께 승진 채로
발견됐다.

정씨는 유서에서 "회사는
장애 12급 판정을 받은 사
람에게 10m 정도의 긴 파
이프를 나르는 작업을 지
시할 정도로 비인간적이었다"며 "그러나 부양가족
생각으로 묵묵히 일해왔는
데도 회사는 사직을 유도
하는 등 삶의 기초권리를
짓밟았다"고 분변했다.

정씨는 그동안 회사쪽에
전직을 요구했으나 목살당
한 뒤 사직을 강요당하자
이를 비판해왔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기독교 성직자 1,517인

24일 김제열 한교협 인권
위원장 등은 세월 레스토랑
당에서 '양심수 정장적 사
회복을 위한 기독교 성
직자 1,517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가
수형양심수 군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상기하며
국방부에 성의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 공 판 안 내 ◆

- 1월 25일(화)
- 10시, 김주옥, 집시법 위반, 317호, 4회
- 15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속행
- 1월 28일(금)
- 14시, 신학철, 국가보안법 위반, 421호, 속행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강사: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1월 27일(목)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참가비 : 3천원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8일-24일)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자배
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
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
시면 연락바랍니다.

*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안은 신문
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일간지인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을 지칭
합니다. 범례/ <1.18>(HA.8); "1월18일자 한겨
레신문 8면"

-인권일반, 법제-

- <1.18>(HA.8)윤대법원장 개혁의지 퇴색/변형 성명
- <1.19>(J.31)독자/변호사보수 시간제로 청구토록/소장
금액따른 수입료는 형평 위배
- <1.23>(HA.10)독자/변호사 숫자 늘려야 법률서비스 등
향상 (H.21)변호사 자율납세 결정/국세청 협의과세 대신 실
수입신고/서울변호사회

- <1.21>(C.1)영장 실질심사제 도입/대법원 사법제도 발
전위/판사,필요따라 심문후 영장결정/기소전 보석제도
실시 (C.3)영장실질심사-기소전 보석제 도입안과/'인신구
속, 개선/수사편의 탈피 인권최대보장/조서만 의존
'무더기영장' 지양/수사중에도 보석...불구속 확대/검
찰 "수사 애로...체포장제 신설등 보완장치 필요"
- (H.31)영장 실질심사제 도입/사법발전위,대법건의/기
소전 보석제 빠르면 연내시행 (H.29)사법위서 대법원에 건의 영장 실질심사제 기소
전 보석제/피의자 인권보호 획기적 장치/수사편의 구
속납탈 방지-실질심사제/피고인 방어권 실질보장-기소
전 보석/검찰 "보완필요" 입법 논란소지

- (D.1)'영장 실질심사제,도입/사법제도 발전위/'기소전
보석제도,도 채택 (D.29)'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의미/피의자 보호에
법원적극 개입/구속후 증거수집 수사관행 제동
- (J.2)영장 실질심사제 도입/법원이 신문위 발부결정/
사법발전위 건의/기소전 보석제 신설도 (J.2)해설/불구속제관 관행확립...피의자 방어권 보장
/고문,자백강요 막아 수사단계서 인권보호 (J.3)사설/'구속당연시, 풍조 타파해야

- <1.22>(HA.3)사설/불구속이 원칙이다 (D.3)사설/실질적인 신체자유 보장 (H.3)사설/구속 함부로 못한다 (D.2)기자수첩/'영장실질심사' 전제조건 (J.5)취재일기/'영장심사제'에 불만 검찰

- <1.18>(J.30)독자/신원진술서 불합리 고치자/'좌익부
역, '해의가족'관동 시대에 역행
- <1.21>(J.20)사법제도발전위-변리사회 '특허법원' 설치
공방/개방시대에 대비한 전문화 마당-변리사회/'전문
가 조언 재판속성' 예외 안도-사법위

-고문·가족수사, 수사공안기구, 군대, 피의자.감옥,
양심수-

<1.18>(J.5)폭행검사 문책인사의 파장/'수사관행', 변화
불가피/日도 「불법행위 즉각 구속」 추세/'폭행과정 육
척가려야' 반발도 (C.18)검찰지방 해마다 감소/성적 40위내 단 한명뿐/
올해 판검사임용/판사신청 35명...4명 변호사로

<1.19>(H.31)살인누명 10개월 합소심서 무죄로
(D.31)살인혐의 2심서 무죄선고/서울고법/"증거없고
허위진술 심증"/피의자 "물고문엔 구타당했다"
(C.7)피의자에 경찰이 문신새겨/印 편잡주, 제거위해
의사고용 (HA.18)공문서 위조 정신병자로 몰아/경찰,40대아내
모의에 강제수용 서류폐쇄 (H.29)떡갈물의 형사 38명 전보발령

<1.21>(C.31)11시간 수감채워 수사/음주운전 혐의/경관
2명 징계조치 (D)'김순경누명'사건 진범 첫공판 열려
<1.23>(HA.13)동네방네/다방일 한다고 실종신고 안받아

<1.19>(H.2)"안기부 정보력 대폭강화"/'국가경쟁력 뒤풀
받침'을 기본목표로/업무계획 보고 (C.2)국가경쟁력 뒤풀 받침 정보력 강화 최우선/안기부
업무보고 (D.1)안기부 경제정보수집 역량/해의기술-환경부문/기
업-연구소에 정보서비스/올해 업무보고

(D.3)안기부 새해업무보고서 변화의지/경쟁력 제고
"첨병" 다짐/안보중심 벗고 경제정보 수집총력/'우물
안 개구리'식 구태벗을지 주목 <1.23>(H.5)메아리/이성춘 논설위원/새 안기부 대망론
<1.19>(J.2)장병 부식비 20% 인상/고기류 공급 2배 늘
려/국방부/대장급이상 조리사 근무원 채용추진

-사회보장, 여성, 교육, 아동, 노인, 장애인-
<1.20>(HA.6)통계청 분석 92-93 한국 사회지표/생활지
표 향상...사회복지는 제자리/80년 비례 소득 6배늘고
노동 4시간줄어/가출·윤락여성 등 노약자 보호시설 미
흡

<1.21>(D.3)사설/정신질환과 사회보호

<1.19>(HA.10)몇가지 유형을 통해본 여성들의 삶/여자
는 슬프다/유순하 지음 <1.21>(D.29)아내 상습폭행 이혼당한 남편 자녀면집권
10년간 유보/서울가정법원 "교육환경에 악영향" 이유
<1.22>(H.5)장명수칼럼/가족과 법 <1.24>(H.15)상습폭행 남편산해 구속 이순심씨 구명운
동 나서/한국여성의 전화

<1.23>(HA.8)문민정부 여성정책 '낙제'/여성단체연합
'세정부 1년 평가토론회'

<1.24>(H.15)정부 여성정책 "낙제점"/여성단체연합 노
동·교육등 5개분야 '1년성적 평가토론회'/고용불안.
'신인사제도', 노동정책 집중비난/국회의원 의석 여성
활동제 도입 강력 주장

<1.22>(J.4)성기절단 보비트여인 무죄평결/법정서 석

방, 곧바로 커가/남편의 학대·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혼인중 아내인권 보호문제 새판례될듯

- <1.23>(H.7) 남편성기절단 미 보비트 무죄평결/성학대 누적폭발 이상심리 인정/평결결과 싸고 전국서 찬반토론 성대결/여성측 "담연" 남성측 "성기제거 면허증"/남성성기감전 사망케, 필리핀판 보비트사건
- (D.4) 남편 강간-부인 성기절단 모두 무죄/미 보비트사건 '여론다른 평결'로 끝내/"성기절단행위 일시적 정신이상" 인정/남성단체들 "남편들 여성폭력앞에 노출"
- (C.7) 남편 성기절단 아내는 무죄/미 로리나 보비트 평결/"폭행 참다 못해 순간 착란"
- (C.6) "성기절단 무죄, 법정 탄압/에파도트 고향선 측제 분위기/남편 친척 "영티리 평결이다" 흥분/"여자 남성 폭력 접차증가" 우려도
- (HA.5) 남편성기자른 여인 무죄평결/"누적된 성폭행으로 일시적 정신이상"

<1.24>(H.2) 기자의 눈/보비트부인의 '무죄,'

- <1.21>(H.13) "국교정화구역, 철저 감독해야"/교육개발원 김홍주연구원 지적/처벌규정 강화... 위반시설 강제 철거도
- (H.13) 경찰청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계획안/횡단보도 신호등 주기 아동보호에 맞게 조정/등학교 교통통제 교장과 협의결정
- <1.22>(HA.5) 지구촌풍경/총맛아 죽어가는 미국 어린이들

- <1.20>(H.20) 컴퓨터가 본 2000년 한국/고령화 사회/65세 이상 향후 10년세 50% 증가/노인복지 큰 사회문제로
- <1.22>(D.27) 인천에 노인치매센터 건립/연내 완공예정/무연고자등 1백여명 수용

- <1.22>(J.23) 서울대 최초로 뇌성마비자 합격/입산공과 정훈기군 재수끝 영평/손가락 세에 불뼉끼고 답안작성 고부
- (J.17) 그때 그사람/77년 "청각장애" 서울미대 낙방 박평원씨/건축학전공 전문설계사로/"장애인들 끝까지 포기않는 자세 중요"/"모든 인간이 어려서사는 살기좋은 환경창조가 꿈"
- <1.23>(HA.15) '뇌성' 장애인 서울대 첫 합격/19년간 '가시밭길 싸움'... 산림공무원 희망/정훈기군 입산공학과에

-노동, 산재, 농민, 도시빈민, 환경-

- <1.18>(D.4) 기자의 눈/'부노동무임금' 노사신경전 (HA.4)'94 경제운용 진단/임금억제. 노사안정 역점/노동환경 개선없이 갈등/일할 여건 형성돼야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 <1.19>(J.3) 여야의원들 을 노사분규 적정/"물 파문뒤엔 춘투정국"/연초부터 물가올라 "분위기 심상찮다"/합의 여건 조성. 노동관계법 개정 관심
- (C.4) 노사협상/낙관기대속 "불안감"/물가급등 압초... 고용불안등 변수-정치권 시각/일단자를 맡겨... 분규뺄 초반 강수-정부대응/복수노동 등 야안에 당정선 부정적... 또 연기 방침-노동법 개정 (HA.1) 임금 실제지급액 기준 한자리수로 인상 억제/정부 방침/노-사협상 3월초 매듭 유도/을 인상분 작년보다 낮아 진통 예상

(HA.16) 노동현장/한국노동운동협 준비위 공청회/"노동자 발목 묶을뻔 경쟁력 강화 어렵다"/임금억제 등 부정적에 반론/명분시비 넘어 구제방안제시/노동3권 보장 경제민주화 주장도

- (HA.10) "과학 허울쓰고 인간문제 호도"/막스 더블린의 '왜곡되는 미래'/기술혁신의 노예로 전락... 노동소의 야기시커
- <1.21>(J.22) "임금 15%이상 인상요구"/전노협. 대기업노조 방침.. 을 협상 진통예상
- <1.23>(H.21) 경쟁력 강화 노동현 토론회/"노동의 새역할에 신경써라"/인력난등 환경변화 불구 경제정책 담보/노 비현실-사 수구자세 빨리 버려야

- <1.24>(HA.15) 전노협 새위원장에 양규현씨/정기대의원대회서 선출
- <1.20>(HA.2) 5월1일 노동절 읍부터 실시/김대통령. 노동 장관에 지시 (H.2) "노동절 읍부터 부활" 지시/김대통령

- <1.21>(H.29) 5월1일 노동절 부활/탈냉전기류 또다른 결실/"공산혁명 이용" 58년 폐지... 64년 법의 날로/재야행사계속... 노총도 88년후 복권요청
- <1.18>(HA.18) 광원재해인정 범의확대/대법원 판결 잇따라

- <1.19>(C.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관계법 적용 추진 (HA.2)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동등한 법적보호 받는다/남재외 노동 검토지시
- (H.29) 불법체류 외국 근로자 노동법 전면적용 추진/산재. 최저임금등 내국인과 동등보호/노동부 방안마련... 부처 협의/현재 5만6천여명 고용추정

- (D.15) 불법체류자에 '나눔의 자리'/'나환자요양원 성라 자로마을 성당/필리핀 근로자 70여명 초청 미사
- <1.24>(HA.15)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보상/이민주부터/불법취업 불구 내국인과 '동등수준' 지급

- <1.18>(H.18) 빈곤층 75만가구/해소위해 년1조8백억 필요/조세연구원 주장
- <1.19>(D.4) UR대책 의견 교환/이희장국무총리-윤정석 전농의장 (HA.3) 사설/농지소유제 변경 선결과제 아니다/농민의 삶과 국민경제 기여가 우선해야

- <1.18>(H.30) 낙동강오염... 대구지검 표징/벤젠방류 처벌 법조항없어 곤혹/국내선 검사제외... 관련업체 협의 못찾아
- <1.19>(D.3) 물관리/공사전화-민영화 추진/환경처 업무 보고/쓰레기버릴뻔 벌금 10만원/환경세 신설 배출부담금 확대/"환경정보 숨기지 말라"-김대통령, 위법처벌 강화지시

- <1.21>(D.3) 사설/이전 사회적 범피자
- <1.22>(D.3) 蘇 화학무기 동해폐기 충격/핵폐기 이은 '죽음의 바다' 공포/무기종류-성분 완화시켜 문제... 대책마련 시급

*2월 1일자에는 94년 1,2월달 주.월간 기사색인이 실릴 예정입니다.

<p><이달의 주제 - 고등> 고등행위의 피해자가 ...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장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p>	<h1>인권하루소식</h1>	<p>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p>
--	-----------------	--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씨 손배소송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고문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세)씨와 김씨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2면 참조).

김씨와 부인 오은자(41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9일부터 5일동안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경찰 들한테서 물고문·폭행 등 고문을 당했으며 살인누명을 쓰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과학수사 대신

'한건수사', '실적수사'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이 사건은 어이없게도 한 재미 교포의 '추측'에 의한 제보

통일원 김인서·함세환씨 방북 긍정 검토 북한 '동진호 선원송환 등에 성의 보일 경우'

통일원은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 신부)가 지난 10일 보낸 '비전향장 김인서, 함세환씨 송환에 대한 호소문'과 관련해 "두 노인의 방북 허용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경찰 들한테서 물고문·폭행 등 고문을 당했으며 살인누명을 쓰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회신에서 통일원은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자유로운 왕래는 정치·사상·제도와는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원은 "북한측이 1천만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61년 납북된 대한항공 여객기 승객과 87년 납북된 동진호 선원의 송환에 성의를 보일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김인서(69)씨는 지난 51년 체포되어 33년 동안 복역했고 현재 북한에 딸이 살고 있으며, 53년 체포돼 30년간 장기복역한 뒤 89년 출소한 함세환(63)씨는 북한에 누이가 살고 있다.

에 의존하여 시작되었다. 명확한 증거를 찾기보다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던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다.

김씨의 부인 오은자씨에 의하면 "경찰은 48시간을 넘기지 않은채 김씨를 끌고 다니다 어느날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전화를 받고 신문을 보니 김종경이라는 이름이 화성연쇄 살인범으로 둔갑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해 8월 3일 집에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자신이 고문당한 일을 밝혀달라"는 유서를 써놓고 부엌칼로 자살을 기도, 동수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인천에 지부 개원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가 1월 29일 인천 지부(대표 김예숙)를 연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월-금). 전화 032-529-2545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강사: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1월 27일(목)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참가비 : 3천원

"빈발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우리는 모두 예비장애인"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애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활동해왔는가를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을 모시고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인권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활동가와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합니다.

◆ 알 림 ◆

□함께걸음 94년 1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간
-주요내용 : '빈곤'과 '장애'의 악순환-빈민장애우 그 구조와 대안/살효성있는 집달체계 정비 시급하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그 방향과 전망' 심포지움에서
-정가 : 2,000원(문의 521-5364)

□후원회 소식-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발간
-주요내용 : 감옥에서 온 새해인사/새해의 희망-김남주 시인을 찾아서

□민들레-박노해 시인 석방추진위 소식지 2호
-주요내용 : 면회기-노해와 만나서(김문수)/비평-박노해의 '참된 시작'(임규찬)
-추진위 전화 : 279-2302
-후원회 계좌 : 국민 004-21-0412-794 문정현 앞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 김종경씨 '점장'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편집자주 : 여기 고문으로 인한 한탄한 절규가 있습니다.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아 이 '절규'를 실었습니다. 다소 거칠은 내용이지만 되도록 가감없이 실겠습니다.

1. 인적사항 :

42세/고등학교 중퇴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탄2동 196-156호
현재 : 부인 오윤자(41)씨와 2남1녀(고등학생, 중학생)와 함께 2,200만원 전세집 생활.
부인 오씨가 수원역 근처에서 주점(실내 포장마차)을 혼자서 경영하고 있음.

2. 증세 :

병원에 입원치료 한적 없으므로 정확한 병명은 모르나 두통과 헛소리를 해대는 등의 정신이상 증세 보여 약국 약을 계속 먹고 있음.

3. 사건개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날 당시 부근인 화성 정남에서 살았음. 그 당시 농장 일을 했었는데 사고현장을 항상 거쳐 다니니까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 같다.

1986년경 오토바이 타고 농장 다니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 나서 일도 못하고 면소재지에서 부인이 치킨가게 하다가 현재 사는 수원으로 방 팔린 가게 얻어 이사함(주점). 이후 김종경씨는 회사원으로 월 78,80만원 받으며 다님.

1991년 단골손님이 전화통 해 "밖에서 나를 좀 보자" 해서 만났더니 "김종경씨가 범인이니까 당신도 조심해라"는 말을 들었으나 부인 오씨는 무시하고 말았다.

이 당시부터 40대 재미교포 김해윤씨가 김종경씨를 미행하며 계속 경찰에 제보함. 김해윤씨는 미국에서 꿈결에 손바닥에 김종경이란 이름이 보여서 미국에서 집을 쳐보니 화성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믿고 이후 미국에서 화성과 수원에서 3년간 수시로 알게 모르게 탐문수사 벌임.

1993년 7월경 김해윤씨가 서대문서에 제보해 서대문경찰서 형사 5, 6명이 퇴근 후 가게에 있던 김종경씨를 "잠깐 어디 좀 갔다오자"며 서대문경찰서로 데려감.

서대문서 형사들은 48시간은 넘기지 않은 채 3번을 집과 서대문서로 끌고 다니다가, 전화로 부인에게 "김종경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다"고 했으며 전화 끊고 신문 보니까 이미 보도가 다 채 있었음.

내용은 "화성연쇄 살인범 자백 받았다"는 것이고, 수원의 김종경이란 이름이 크게 나옴.

오씨는 "성격이 고지식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사람이 절대 아닌데 앞이 깜깜하고 기가 막히더라. 정말로 이 사람이 화성살인사건 진범인가? 나도 모르게 범행을 하고 다녔단 말인가?"고 호소.

서대문경찰서에서 화성경찰서로 이첩. 화성서에서 조사해본 결과를 토대로 수원지검서 무혐의 석방. 그후에도 2,3명이 집앞과 가게에서한달 정도 감시함.

이후 헛소리 하고 아무나 보고 형사인냥 대하고 "내가 농장장으로 있었으니 돼지는 죽어도 사람은 안 죽었다"며 소리치르고 사람 오는 걸 무서워하고 형사들 들어온다며 이불 뒤집어 쓰고 있음.

1993년 8월 3일 밤 1시에 집에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자신이 고문당한 일을 확실히 밝혀달라"는 유서 써놓고

부엌칼로 20센티미터 복부를 찔러 자살기도 함. 한달 만에 동수원병원에서 퇴원함.

"이후 밤낮없이 술먹고 취해서 난동부리고 음식도 안 먹고 음식을 막 해쳐놓다가 잠을 자고 술깨면 괴로운 심정 글로 써놓고, 거의 폐인처럼 생활한다"

또한 부인에게 "너도 살인자로 엮어려고 했다"고 호소. 경찰이 김종경씨를 의심하면서 오씨의 가게를 빈번하게 들락거렸다고 함.

4. 현재상태

1993. 8. 3일 병원 갔을 때부터 경찰이 오지 않는다고 함. 그러나 "자살사건으로 수원 동수원병원 입원료 450만원을 하나도 못 갚고 있고, 누가 돈도 안 빌려준다. 그 전엔 가게수입만도 300만원 정도였으나 1993. 8월 이후부터 손님이 뚝 끊어지고 아는 사람 몇 명씩만 온다", "현재 수입은 100만원 정도로 남편 약값과 애들 학비를 대면 생활이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지 막막할 뿐이다"고 부인은 호소하고 있다.

김종경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맞아 머리가 아프고 수감체위 비틀어서 손이 마비가 온다.

선풍기 가재도구 등의 각종 사물을 보고 형사인양 얘기를 나누고 밖에서 형사가 권총으로 나를 쏘려고 하니 현관 문을 잠그라는 등의 헛소리를 함.

5. 고문사실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그런 사실 없"고 했으나 계속해서 범행 인정만을 요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한 후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사표 처리했다.

두번째 현장검증 준비해 수감체위 손을 비틀고 24시간 잠 안 재운 상태에서 구타. 뒷머리를 손으로 탁탁 치기만 해도 정신이 가물가물 해졌다고 함. 항상 5,6명이 조사함.

부인은 "몇년째 저 상태로 괴로워한다. 오줌, 똥도 못가린다"고 고문을 고백.

1993년 9월 김철준 변호사와 함께 국가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994. 1. 27일 수원지방법원 제7합의부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 2천 5백만원

◆ 알 림 ◆

□ 제104차 목요일회-「정대협」 주최

·주관 : 「정신대문제연구소」
·일시 : 1월 26일(수)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94년 정기총회

·일시 : 1월 30일(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 대전 라이프 관광호텔
(전화 042-253-5337-40)

·문의 : 전화 053-426-2533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장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외국인 노동자 18일제 농성중

경실련 강담 노동부에 향의 전화결기운동도 펼쳐

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처우개선, 노동자로서의 지위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경실련 강담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18일제를 맞고 있다.

농성이래 200곳 이상의 언론기관이 취재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앞을 닦아 격려방문을 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대책회의」(공동대표 송월주 등 5명)를 결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에서 지난 13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의 김재오 전도사는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3일의 방침천명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사회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면 일시 모면하려는 데서 나온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지난 해 11월 26일 서울고법"이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아키노 시바에(필리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 올 6월쯤 재판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의사를 26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전도사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3일의 방침천명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사회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면 일시 모면하려는 데서 나온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 대 책위」는 그동안 노동부 장

관 및 관계실국에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전화결기 운동을 해왔다. 그리고 26일 노동부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아키노 시바에씨에 대한 상고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결기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도사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6일 난민문제와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에 대하여 "한국은 이미 'UN 난민지위'에 관한 51년 협약'과 '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나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법률적 장치가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난민문제에 관한 한 무관심과 국민을 속이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자가 한국으로 오면 '키순용사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인권을 통해 한국사회가 대북한 우월성을 공표하고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91년 5월 '백골단 해체'를 요구하는 양심선언 한 후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석진 일경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2시 서울고법 309호실에서 열린다.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씨의 가족들은 순시중인 교도소장에게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수감에 채워 끌려가는 도중에 난동을 부렸다며 지난 20일부터 30일간의 금지처분을 받고 징벌방에 수감중이라고 밝혔다.

◆ 알 림 ◆

□ 「한울노동법 강좌」 창간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등의주제'
- 한울합동법률사무소, 한울노동문제연구소 발간
·주요내용 : 주요판례모음/노동법 해설(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취점-고용보험금을 알아본다/판례1.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변경후 입사자엔 무효 아님" 등
·문의 : 한울합동법률사무소,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전화:593-6501/3 팩스:595-1892)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회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
·노래,노래를 찾는 사람들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의 편지 낭독 등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바로 오늘입니다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강사: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오후 6시 30분/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참가비 : 3천원

“빈발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우리는 모두 예비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활동가와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합니다.

● 국제인권소식 ●

유엔 세계여성대회 소식(1)
- 95년 9월 4-15일, 북경 -

<배경> 유엔이 주관한 여성문제에 관한 세계회의는 각각 1975년, 1980년, 1985년에 모두 세차례 개최되었다. 회의 때마다 민간여성단체들의 세계회의가 병행되어 지금까지 여성단체들의 국제연대를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3차회의는 지난 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어 '유엔 여성의 해 10년'을 평가하고, 여성의 발전에 관한 장애요인을 규정한 뒤,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4차 회의> 4차 '북경여성대회'는 95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특별히'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북경이라는 개최지의 특성때문에, 강대국들의 인권외교의 목표물처럼 된 중국과 중국의 여성인권문제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의제는 '2000년 여성전략'에 대한 평가와 그에 기초한 '행동계획'의 채택이며, 지난 회의보다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목표다.

지난해 '유엔 세계인권대회'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민간단체들의 준비회의와 입장정리가 사전에 진행되며, 다양한 세미나와 세계 각국의 문화행사등 다채로운 병행행사가 북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간회의에 민간단체들의 참여는 유엔 자문자격이 없으면 제한되지만, 준비과정에 참여한 일부단체들은 참여가 가능하다.

<아태지역 민간단체 준비회의> '북경여성대회'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준비회의가 아태지역 차원에서 작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아태지역 37개국 8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경제중심의 발전전략을 비판하고 여성이 존중되는 새 모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12개분과로 나뉘어 주제토론을 거친 뒤, 각 분과의 결의안을 하나의 '행동계획'으로 모았는데, 이를 내년 북경대회에서 민간단체들이 공동 대처하는데 기초전략으로 삼기로 하였다.

(참고로 최근 민간단체들의 국제회의에서는 한국형 모델과 같은 경제중심의 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빈번해지고 있다.)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이집트 카이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지구 남북간의 격심한 경제격차, 환경법과 기술을 앞세운 강대국들의 세계전략이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엔이 주관하는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올해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회의에는 민간단체들의 세계회의가 병행되며, 의제는 '인구증가와 분포/인구와 경제발전과 환경과의 상관성/국제적 인구이동과 경제격차/인구문제와 여성의 지

위향상의 중요성' 등이 다루어진다. 의제만 보더라도 이 회의가 단순히 인구억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인구이동, 중국의 노동력 이동 등을 예상해 관심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이 회의의 영문명은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NGO Forum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이다.

'제5회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 진행중
시드니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 1월 10일부터 4주간

제5회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Diplomacy Training Program)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의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국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중견 활동가 25명이 참석하고 있다.

DTP의 사무총장인 호세 라모스 호르타(44, 동티모르인)씨는 "인도네시아군이 무력침공하기 3일전인 75년 12월 5일 동티모르를 탈출하여 뉴욕의 유엔본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할지 막막했다"면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경험을 아직도 착취와 부정의가 자행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운동가와 나누기 위해 89년부터 시작했다"고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강의는 주5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론학습과 함께 실제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의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강의내용은 첫주에는 인권의 개념,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및 유엔의 역사와 역할, 둘째주는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중 특히 경제사회이사회와 차별방지소위원회에 대한 민간인권단체의 이용방안, 셋째주는 지역과 전국 차원의 인권캠페인과 교육방법, 조직방법 그리고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준비하는 방법등의 언론활용방안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에는 팔레스타인 인권정보센터의 아메르(29), 호주 원주민 법률구조센터의 크레그(30)등 3명, 최근 파푸아 뉴기니아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버건빌의 릴리아(25), 프랑스에서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뉴칼레도니아 민족해방전선의 벤자민(28)등 2명, 필리핀 민주변호사회의 그레고리오 등 2명, 태국 3명, 방글라데시 5명, 한국 이성훈씨 등이 참가하고 있다.

송광영열사 어머니 이오순씨 별세

지난 85년 9월 경원대학교에서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주장하며 분신, 그해 10월 21일 사망한 송광영씨의 어머니 이오순(67세)씨가 26일 오후 6시 30분경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숨졌다.

고 이오순씨는 아들 송씨가 분신한 직후부터 '유가족'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장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택시노련 완전월급제 실시 요구

26일 대의원대회 사납금 폐지도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이광남)은 26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고 지난 24일 목매어 자살한 상호운수 김성운(62세)씨 사건과 관련한 성명에서 완전월급제 실시, 사납금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택시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김성운씨의 죽음은 "열악한 택시임금제도와 잘못된 택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15만 택시노동자들 모두의 죽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택시노련은 "고인이 유서에서 지적한대로 택시노동자의 완전월급제 실시가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허탈감과 배신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등의 철폐 *대통령 공약사항인 택시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택시노련은 단위노조별로 김씨의 장례비용을 모금하기로 했으며 장례식

이 진행되는 28일까지 검은 리본을 착용하기로 했다. 김성운씨의 장례식은 28일 오전 9시 상호운수 주차장에서 열린다.

고문피해자 보상대책 청원 26일, 법사위에 회부

국회는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주도로 1천2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해 12월 29일 제출된 '고문피해자 보상대책 등에 관한 청원'이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다고 지난 26일 대표소개의원인 임제정 의원(민주당) 앞으로 알려졌다.

김국홍씨 등 송환 재촉구 27일 송환추진본부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추진본부'는 27일 두 노인의 조건없는 송환을 재차 촉구하였다.

지난 25일 통일원이 '61년 납북된 KAL 승무원 등이 송환될 경우 방북 허용 및 가족상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요구 노동부에 전화걸기 운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송월주 등 5명)는 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부 전화걸기 운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실:503-9700 민원상담실:500-5543
노동보험국장실:500-5597 재해보상과:503-9764

데 대하여, 송환추진본부는 "두 노인은 전쟁시기 포로였으므로 제네바협정에 의하여 포로교환시 송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에 넘겨져 수십년동안 옥고를 치루었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건없는 송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의 인권현황' 논의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매월 인권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월례세미나가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실장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발재문 2면 참조).

김실장은 "정부 및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동정과 시혜의 차원에 호

르는 경향이 많다"며 장애인이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탈영병은 누구인가" 박석진, 함소심 최후진술

양심선언한 후 탈영병으로 구속·기소되어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석진 일경에 대한 함소심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박일경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도형제들에게 최후를 쓸 수 없다는 것이 왜 탈영으로 매도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광주를 피로 몰들인 56공 대통령은 또 무엇인가"라며 자신의 양심선언은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또 "문민정부의 개혁은 군대내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림

□정대협·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28일(금) 8시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활동에 대한 논의
·민주당 이우정, 김원웅, 원혜영, 제정구 의원
·정대협 이효재·윤정옥 공동대표 등
·장소: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이오순(송광영 열사 어머니)씨 장례식
·발인: 28일 오전 9시 안암동 고대병원
·노제: 유가족, 경원대 교정, 성남 산자교회
·장지: 마석 모란공원

□'함께가는 여성', 1월호/여성민우회
·주요내용:동네는 작은 국가-지역차이는 나라살림을 알뜰히 하는 최선/우리직장 이야기:불길도 헤치고 불길도 헤치고

□'사무직 여성', 겨울호/여성민우회
·주요내용:부모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게 보호·교육받을 권리를/지상중계-신인사제도 도입 사업장의 운영사례/나라밖 소식:일본 히다찌사의 부당한 성차별을 고발한다/세상사는 이야기:젊은 날의 성과 사랑

단체탐방·9 / 노동과 건강연구회

“정신이 없다, 어깨가 빠근하다, 온몸이 얼어 맞은 듯 찌뿌드하다, 스트레스 쌓인다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항상 노곤하고 잠을 싹쓸 자는 것이 소원이다...”

기계에 손가락이 찢리거나, 진폐증으로 호흡이 곤란하거나, 수은에 중독되거나 하는 일과 거리가 먼

사람일지라도 노동속에서 몸과 마음이 짓눌리는 것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규명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뛰고 있는 곳이 바로 「노동과 건강연구회」다.

구로에 자리잡고 있는 「노동과 건강연구회」의 사무실에는 가정집처럼 아담하고 정갈한 분위기에 7년동안 만들어온 연구성과물들이 가지런히 자리잡고 있다.

「노동과 건강」, 「산업재해와 직업병」, 「알기쉬운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건강의 사회적 보장」, 「산업안전보건 시리즈」, 「산재실태 자료집」, 「과로사란 무엇인가」 등 제목만 훑어 보아도 「노동과 건강연구회」의 바쁜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하루에 6-7명이, 매년 2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 일등국(?)으로서 「안전제일」의 구호가 허공에 떠있는 현실속에서 현장의 작업환경측정이나 노동자 건강진단, 산재에 대한 연구 등이 낮잠을 자는 사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온 이들이 있었다. 보건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노동상담가들이 함께 모여 노동자 건강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의원으로서 86년에 구로의원을 열고 산재에 대한 상담·교육·치료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의원에서 다루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산재에 대해 지속적·포괄적으로 활동할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87년 겨울의 준비모임을 거쳐 88년 3월 26일 「노동과 건강연구회」가 첫발을 디디게 된다.

이경우(변호사), 김은희(간호사)씨를 공동대표로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과 변호사, 노동법률상담가, 지역노동자단체, 산업안전공학분야의 전문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동과 건강연구회」는 산업보건에 대한 전문인들이 모인 만큼 회원들의 역할과 활동의 폭이 매우 크다. 회원들은 재정을 책임질 뿐 아니라 총무부, 교육부, 홍보부, 조사연구 1·2부에 소속

이 된다. 「노동과 건강연구회」는 산업보건에 대한 전문인들이 모인 만큼 회원들의 역할과 활동의 폭이 매우 크다. 회원들은 재정을 책임질 뿐 아니라 총무부, 교육부, 홍보부, 조사연구 1·2부에 소속

산재없는 세상을 위하여!
건강한 노동을 지키는 파수꾼!

되어 조사·연구·출판·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크고 작은 결실들을 꾸준히 맺고 있다.

「노건연」의 초기활동은 산업재해의 현실을 알리고 직업병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었다. 그 결실로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기본인식이 형성된 요즘은, 현실폭로를 넘어서서 정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활동이다. 또한, 초기의 대상이 제조업 중심의 노동자 문제였던 데 비해, 현재는 「과로사」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신문방송, 인쇄, 운수, 공무원, 일반회사 등 거의 모든 직종의 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노건연」 부설로 과로사 상담센터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노건연」의 일상적 활동을 크게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담과 교육활동이다. 개인 차원의 상담뿐 아니라 노조차원의 상담을 통해 산재에 대한 노조활동에 도움을 주고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과 산업안전보건활동 실무자들에게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대한 대책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고 문송면군 수은중독 대책활동, 수지집합시술 인정기준에 대한 대책활동, 원진레이온 직업병 대책협의회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직업병 판정 여부, 각 사업장에서 다루는 물질의 유해성, 직업병의 원인과 예방대책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은 현장의 「실태조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노조와 연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공정별 유해성을 조사하는 등의 실태조사와 더 나아가 법·제도를 연구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노동자의 상황과 아픔에 입각한 「전문활동」이라는 점이 「노건연」을 항상 젊고 힘차게 뛰게 하는 원동력

이 된다. 「젊다」는 의미는 구성원의 연령과 의식뿐만이 아니라 일의 성격 자체가 항상 현장을 찾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한가지 예로 매년 새로 발견되는 화학물질만 해도 세계적으로 만종이 넘는다고 하고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파고드는 구조적·암적요인은 더욱 치밀하고 유해한

것이다. 그간의 활동을 돌이켜 볼 때 「노건연」이 평가하는 「현재상황」은 어떤 것일까?

첫째, 현장현실을 볼 때 대기업이나 노조활동이 활발한 곳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극소수이고, 중소기업장은 거의 변화가 없다.

둘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진전이 있었으나, 문헌속에서 수사적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현실정착에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셋째, 산재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의 조직화 측면을 볼 때, 주요공단지역에서 산업안전대책을 담당하는 이들의 연대모임이나 전국모임이 꾸러지고 단위·지역별 작업장별로 집단행동이 가능해지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강요되는 노동, 무거운 업무와 스트레스, 산업재해들은 결코 개인이 「내복이러니, 팔자이러니, 직업을 그리 선택했으니」할 성질이 아니다. 개인적 질병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결과인 만큼 노동자의 건강과 인간화는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며,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뒷받침해야만 한다는 것이 「노건연」의 생각이다. 예전만큼 젊은 보건의료인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아 성원의 재생산이 어려운 것이 「노건연」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강한 노동,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을 위해 개척해온 길위에 「노건연」은 뚜렷한 이정표를 세우고 달려가기에 충분히 힘차고 밝기만하다.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주소:서울 구로구 구로2동 86-8호
·전화:866-9175, 856-4385(팩스겸용)
「과로사 상담센터」
·전화:861-311, 868-3111